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5

EUROP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국가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 그리고 “무역장벽 보고서(1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통상환경”에는 총 8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중동의 4개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상환경”에는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등 15개 분야별 통상환경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무역장벽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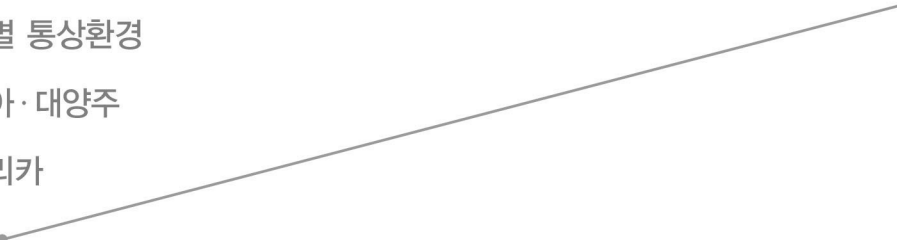
본 자료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제통상 분야에 관
심이 있는 분들께는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무역협회, KOTRA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
사의 마음 전합니다.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중동
- 

유럽연합(EU)	2	노르웨이	341
그리스	69	러시아	352
네덜란드	86	벨라루스	387
독일	101	세르비아	401
루마니아	120	스위스	413
불가리아	138	터키	429
스웨덴	146		
스페인	164		
영국	185		
오스트리아	225		
체코	241		
크로아티아	258		
포르투갈	284		
폴란드	296		
프랑스	313		
헝가리	330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5

유럽연합(EU)

통상정책 및 무역관리제도 개관

1. EU의 통상정책

(1) EU의 신통상정책

EU는 2006년 “Global Europe Strategy” 채택 이후 기존의 WTO를 통한 다자적인 무역자유화와 함께 FTA 등을 통한 양자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0.11.9일 향후 5년간 EU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EU 집행위는 1)WTO DDA 협상 타결 및 인도, Mercosur, ASEAN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타결, 2)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략적 동반자 국가와의 통상관계 심화, 특히 비관세장벽 철폐 등 규제조화, 3)정부 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EU 기업의 세계시장 접근을 개선, 4)주요 교역 국가와의 포괄적인 투자협정 협상 개시, 5)공정무역 및 지식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강화, 6)무역이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향후 5년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EU는 최근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 따라 FTA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 또는 근린국가들과의特惠무역협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ASEAN 개별국 및 캐나다와의 협상진행, 중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타결 등 FTA 영향력을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ASEAN의 경우 당초 목표로 했던 ASEAN 전체와의 협상은 중단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ASEAN

개별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싱가포르와의 협상이 2012년말 타결되었다. 일본과도 FTA 협상을 위한 예비회담(scoping exercise)을 마무리하고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도 무역투자협정(TTIP)을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2) 대외통상관계 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3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계속되는 경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9조유로의 GDP를 기록, 세계 최대의 경제권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이 전반적인 경제성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상품무역은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 수출은 1조6,863억 유로, 수입은 1조7,914억유로를 기록하였다. 연료 부분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약 4,200억유로)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류, 운송 장비, 화학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이 여전히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2012년 기준 17.3%)이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중국이 유럽연합의 제2의 수출시장(2012년 기준 8.5%)으로 부상하였다.

EU의 서비스무역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서비스 수출은 6,039억유로, 서비스 수입은 4,829억유로를 기록하여 1,210억유로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이 최대의 수출(24%), 수입(29%) 시장이며, 스위스가 제2의 서비스 수출입 시장이다.

(3) 한-EU 교역관계 개관

2012년 기준 EU는 우리의 제3위 수출대상국이자, 제3위 수입대상국이다. 2012년도 대EU 수출은 전년대비 11.4% 감소한 494억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504억달러로 전체 교역액은 99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선박(79억달러), 승용차(51억달러), 평판디스크플레이(39억달러), 자동차부품(37억달러), 무선전화기(26억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33억달러), 원유(28억달러), 의약품(22억달러), 나프타(17억달러), 자동차부품(15억달러), 정밀화학원료(15억달러) 등이다.

2011.7월 한-EU FTA 발효 후 2년간('11.7.1~'13.6.30)의 교역동향을 보면 수출은 16.3% 감소, 수입은 22.2%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엔진 부속, 배터리, 일부 합성섬유 및 수지는 수출증가(12~104%)를 기록한 반면, 그간 대EU 수출의 주종목이었던 선박 및 전자부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EU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것이다. 선박 등 FTA 비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가 특히 급격하게 이루어진 반면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소폭 감소하여, 한-EU FTA가 대EU 수출 감소 추세에도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자동차 및 가방류, 정제석유, 유압장치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2년 연속 큰 폭의 수입증가가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원유·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란 제재와 관세율(3%) 인하로 원유 도입선이 변화하면서 원유가 대EU수입 2위 품목에 등극하여 대EU 수입 급증을 주도하였다.

2. EU의 무역관리제도

(1)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3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6개 세번)의 단순평균 적용 관세율은 6.5%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8%, 비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4.7%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7%이다.

2011.7.1,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한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소형(1,500CC 이하)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

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를 5년 내 철폐되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2)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섬유·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산 제품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으로 구성) 등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 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국가와 인정시기를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3)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관에 관한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업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맡고 있어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민원인 응대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4.5.1,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1.1, 신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7.1. 신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당국의 업무능력이 기존 회원국과 차이가 있는 바, 세관 규정의 해석·적용, 통관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지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로 개정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 집행위에게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동세관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고,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유럽의회는 2013.9.11,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 UCC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18개월 경과후 시행(EU 의회 통과안은 30개월 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8.8월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11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4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8월 EU가 다기능휴대폰 규정 및 해설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또한 2010.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LCD 모듈에 대해 일방적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관세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세관 당국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의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2013년까지 총 4억 8,100만유로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한편, 2008.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4월 ‘신통관규정 [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

[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무역구제 조치

EU는 2013.8월말 기준 24개국에 대해 84건의 반덤핑 조치와 7개국에 대해 10건의 보조금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3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52건이 중국산으로 가장 많고 대만(7건), 태국(7건), 러시아(6건), 말레이시아(6건), 인도(5건) 등 순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인도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2건) 순이다.

2009년부터 2013.8월말까지의 무역구제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화학제품의 경우 2009년 이후 총 27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의 30%를 넘어 수위를 차지했으며, 철강분야에 대한 신규 조사도 2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8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3건(철강제 관연결구류, 강철사, 실리콘)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 EU 수출품은 없다.

EU는 2013년에는 8월말까지 신규로 3건의 반덤핑 조사와 1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신규 조사를 개시한 4건 모두 중국 원산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6건의 조사를 받아, 동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EU로부터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인도(10건), 인도네시아(4건), 태국(4건) 등이며, 우리나라는 동기간 1건(강철사 우회덤프, 2009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유럽연합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2011.1월부터 2013.2월말까지 EU는 154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개별 회원국은 97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보하였는데, 이 중 프랑스(25%), 체코(22%), 스웨덴(18%) 등 순으로 통보건수가 높았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가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의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http://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 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

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¹⁾’를 발표하였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U는 이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럽식품안전청을 신설하며 둘째,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일관되게 개선하며, 셋째, 사료와 식품의 운영자(business operators, 생산자 및 사업자)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들 식품을 다루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EU는 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서에 포함된 실행계획의 하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EU차원의 기본법(General Food Law)을 제정(2002년)하는 것으로, 그 기본법이 바로 Re-

1_ COM(1999) 719 Jan. 12, 2000, 이하 ‘백서’라 한다.

gulation(EC) No 178/2002이다. 동 법에는 백서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Regulation(EC) No 178/2002의 제2장에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식품 및 동물사료에 적용되는 적용범위(제4조), 일반원칙(제5조), 위험분석(제6조), 사전예방원칙(제7조), 소비자이익 보호(제8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제9~10조) 등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식품교역의 일반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역내 수입(11조), 역외수출(12조), 국제기준(13조), 식품안전 조건(14~15조), 식품표기·광고·프레젠테이션(16조), 운영자 책임성(17조, 19~20조), 이력추적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

EU는 식품 기본법을 기반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2/2004), 동물유래식품 위생규정(Regulation 853/2004), 식용목적의 동물유래제품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4/2004), 식품 및 사료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2/2004)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 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표시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는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표시할 것,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할 것,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할 것,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할 것 등 소비자 안전 중심의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 규정은 2014~2016년부터 적용된다.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Regulation 178/2002)에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2002.1, 이탈리아 pharma 소재)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2년 설립되어 현재 이탈리아 팔마(Parma)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회원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되, EFSA는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인 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RASFF는 EU27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망(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최근 EU는 IT기반의 iRASFF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회원국과 EU RASFF팀간 이메일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회원국이 바로 온라인 iRASFF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지내용을 입력

하고, RASFF팀이 최종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competent authority)가 EU에 수출가능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3.9월 현재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1) REACH제도의 도입배경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EU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승인) of Chemicals를 의미하며, 도입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류건강 및 환경보호에 차질이 빚어져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기존의 화학물질 규제정책은 1981년을 기준으로 신물질(2,700여종) 및 기존물질(100,100여종)로 분류하여 10kg 이상의 신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시험 및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1톤 이상 유통되는 30,000여종의 기존물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둘째, 화학물질 사용과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시간적 격차로 인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곤란하고 법정 보상수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기존의 제도 하에서 중간 거래자(downstream users)는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였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 거래자에게도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해졌다.

■ 도입연혁 및 주요 추진 경과

일시	내 용
2001.2	White Paper 발표
2003.5	제안서 발표: 2003.5월~7월까지 의견수렴
2003.10.29	EU 집행위, 최종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일시	내 용
2005.11.17	유럽의회 전체회의: EU 의회 1차 독회 통과 - EU 집행위 최종안에 대한 환경위원회의 수정안(2005.10.4)을 토대로 수정을 거쳐 표결 통과 - 2005.12.13, EU 경쟁력이사회에서 공동입장 채택관련 정치적 합의(political agreement)
2006.6.27	이사회 공동입장(common position) 채택
2006.10.10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차 독회 중인 REACH 규정안의 수정안을 표결 통과
2006.11.30	유럽의회와 이사회간 REACH 규정안에 합의, 2006.12.13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표결 통과
2006.12.30	REACH 규정(Regulation(EC) 1907/2006) 관보 게재
2007. 6. 1	REACH 규정 발효
2008. 6. 1	사전등록 시작
2008.12. 1	사전등록 종료
2009. 1. 1	사전등록 물질 공표
2009. 6. 1	신고대상 물질 공표(2년 마다 갱신 발표)

(2) 주요 골자

연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 등을 통하여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며, 크게 6가지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 ①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 ② 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단계이다.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 내 제조 또는 EU 수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사전등록 이후 동일물질 등록 예정자간에 본 등록을 위하여 동물 실험 데이터 공유, 자료공유 및 공동등록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기업간 협의체인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Substances Information Exchange Forum)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SIEF의 구성원이 되며 협의체는 2008.6.1~2018.5.31일 동안 운영된다.

- ③ 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서 제품중량 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2011.6.1일 부터 시작되었다.
- ④ 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또한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 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SVHC) -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이다.
- ⑥ 제한(Restriction): 건강·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석면 등 부속서(Annex) 17의 물질이 이에 해당된다.

EU는 등록, 허가, 비용효과분석, 위험 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을 통하여 유럽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을 핀란드 헬싱키에 2007년 설립하였으며, 유럽화학물질청은 2008.6월부터 REACH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 REACH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대상 및 기간
사전 등록	1톤/연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ECHA에 등록	2008.6.1~12.1 ※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능

구분	내 용	대상 및 기간
등록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년 이상 CMRs: 2010.11.30 까지 - 100톤/년 이상 R50-53: 2010.11.30 까지 - 일반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톤/년 이상: 2010.11.30까지 · 100톤/년 이상: 2013. 5.31까지 · 1톤/년 이상: 2018. 5.31까지
신고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의 관리를 위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도적 배출로서 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2011.6.1부터 신고
평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 ○ 100톤 이하: 유해성 물질
허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허가대상목록 작성 필요시 대체 물질 개발 의무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성 물질(SVH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Rs category 1, 2 - PBT, vPvB 물질 등
제한	건강·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사용·수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 17에 해당되는 물질 ○ 2009.6부터 시행

CMRs: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성(mutagenic), 생식독성(toxic to reproduction) 물질
PBT: 지속성, 생체축적 및 독성 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vPvB: 잔류성이 매우 강하거나 생체 축적성이 매우 심한 물질(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REACH에 따라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이 2013.5월까지 완료된 결과 2008년 이후 약 3.3만건의 6.6천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을 포함해 40,329건 9,952개 화학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국가별 등록건/화학물질 수는 독일(8,528건/3,726개)-영국(3,837건/1,531개)-네덜란드(2,876건/1,311개)-프랑스(2,854건/1,375개)-벨기에(2,471건/1,320개) 순으로 나타났다.

EU는 REACH를 통해 확보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내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관련 정책과 접목하며, 나노물질 등으로 관리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들과 연계하여 비 음식제품들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index_en.htm)를 운영 하고 있으며, 2009.6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을 위반한 제품들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고 있으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 입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www.reach.me.go.kr).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유해물질의 분류, 라벨링, 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2008.12월 제정되어 2010.12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지침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단일물질은 2010.12월부터 적용되며, 혼합물질은 2015.6월부터 적용된다. CLP 물질목록은 REACH 대상 물질과 상이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 체계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Council Directive 76/769/EEC)은 PCB, PCT, 벤젠, 석면,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 등 특정 유해(dangerous) 화학물질 및 혼합물(substances and preparations)의 시장유통 및 사용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해당 물질의 인체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대체물질의 사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총 52 종의 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내용·시기 등을 동 지침의 부속서

(Annex)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REACH 규정(Regulation 1907/2006)으로 대체되었다.

승용차 및 경상용(Van)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

(1) 도입 배경 및 경과

EU내 다른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1990~2007년간 교통부문은 26%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8년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을 140g/km로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1999년 KAMA(한국자동차협회)와 JAMA(일본자동차협회)는 2009년까지 140g/km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승용차의 경우 EU-25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1g/km(2005) → 160g/km(2006) → 158g/km(2007) → 153.5g/km(2008, EU-27통계)으로 미미하게 개선되었다.

EU 집행위는 자동차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평가한 결과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획기적인 감축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협의 끝에 승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에, 경상용차(van)에 대한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2) 승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개요

승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제도는 EU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EU fleet average)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M1 category)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130g/km는 EU 전체의 목표이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제작사별로 EU의 차량평균중량과 제작사별로 평균 차량무게를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제작사별 세부배출

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이 결정된다. 제작사에서 판매한 차량 등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기준초과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과한다. 제작사들의 제도 적응 및 기술 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2년에는 전체 차량 대수의 65%, 2013년에는 75%, 2014년에는 80%, 2015년 이후에는 100%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선택하여 평균 배출량을 산출한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은 특정연도에 판매·등록된 차량의 평균무게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종별 판매량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나, 정확한 제작사별 배출기준은 당해 연도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 산정이 가능하다.

$$\cdot \text{세부배출기준(g/km)} = 130 + 0.043 \times [\text{차량평균무게(kg)} - 1,372]$$

제작사의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과하게 된다.

(3)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로서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통상 밴으로 부름)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전체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목표로서 2017년까지 EU평균 175g/km을 달성하는 것이며, 동 목표는 2007년 평균배출량 203g/km 보다 14% 적은 것이다. 2020년 장기목표는 147g/km로서 당초 EU집행위가 제안한 135g/km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기준 [Indicative specific emissions = $175 + 0.093 \times [(\text{차량무게(kg)} - 1706.0)]$]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작사별 기준은 제도 적응 및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저배출차량에 대한 우대조치(Super credits)로서 50g/km 보다 적게 배출하는 밴(Vans) 차량들은 제작사별 평균배출량 계산시 2014~2015년 동안은 저배출차량 1대를 3.5대로, 2016년에는 2.5대로, 2017년에는 1.5대로 인정하되, 제작사별로 최대 25,000대까지 인정한다.

기술혁신(Eco-innovations)과 관련하여 차량형식승인(vehicle type approval) 시험절차가 제정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2014년 시험절차가 개정될 때까지, 제작사들이 혁신적인 기술(innovative technologies)을 차량에 적용할 경우 독립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최대 7g/km의 감축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제작사(연간 22,000대 이하 판매)는 EU집행위에 기준 적용예외 신청을 통하여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승용차와 경상용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관련 비교

구 분	승용차	경상용차
적용대상	M1 category	N1 category(van)
EU평균 목표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2017년 175g/km 2020년 147g/km
시행년도	2012년	2014년
세부배출기준식	$130 + 0.043 \times (\text{차량평균무게} - 1,372)$	$175 + 0.094 \times (\text{차량평균무게} - 1,706)$
유예기간 및 적용률	2012년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2014년 70% 2015년 75% 2016년 80% 2017년 100%
예외규정	판매량이 1만대/연 이하인 경우와 1만~30만대/연 경우	22천대/연 이하인 경우

(4) 성과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2년에 EU내에서 12백만대의 승용차가 신규 등록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배출량은 132.2g CO₂/km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디젤 차량이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전기차 판매량은 1.4만대로 프랑스(5천대)와 독일(3천대) 순이다.

연도별 승용차 CO₂ 평균배출량 변화

(단위: g/km)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배출량	172.7	162.4	161.3	158.7	153.6	145.7	140.3	135.7	132.2

집계가 최초로 이루어진 경상용차(밴)는 2012년에 약 110만대가 등록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CO₂ 배출량은 180.3g CO₂/km로 잠정 집계되었다. 디젤 차가 97%를 차지하고, 배출량이 10~15% 적은 LPG/NG 차가 1%를, 전기차는 0.5%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들은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한 한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이러한 기술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지 차량 판매망을 통한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제작사별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EU는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2014년까지 12톤 이하의 미니버스(minibus)와 밴(van)에 대한 이산화탄소배출규제 규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1) 항공부문

1990~2007년까지 EU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항공부문의 배출량은 11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관련 지침(Directive 2003/87/EC)을 개정하여 대상 범위(scope)에 항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시켰다.

2012.1.1일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하거나 회원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 부문에 대하여 적용하며, 배출량은 2012년에는 역사적 운항(historical aviation: 2004~2006년간 평균)의 97%를 적용하고, 2013년 이후의 배출량 할당은 역사적 운항의 95%를 적용한다.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원수 전용기, 군용기, 훈련기,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내의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지침적용이 배제된다.

EU-27을 포함한 유럽경제권 30개 국가의 EU-ETS 항공부문 2012년 배출 한도(cap)는 2.148억톤, 2013~2020년은 매년 2.103억톤이다(2011.7.1, 유럽경제권 공동위 결정). 2012년 총배출한도는 무상 할당 85%, 경매(유상할당) 15%로 배분될 예정이며, 2013~2020년 총배출한도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될 예정이다

유럽경제권(EEA: European Economic Area) 30개국 및 EU역외 62개국의 900여개 이상의 항공사들이 무상할당량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들은 관할국가(administering state)인 독일정부로부터 무상할당량을 배정받게 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대해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배출권 정산을 1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EU 2012년의 역외 운항에 대해 2013.4월에 배출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3년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기존과 같이 받게 되며, EU 집행위는 2013.9월 ICAO 총회에서 항공분야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항공분야 ETS가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2년 역내운항에 대한 배출권 정산결과에 따르면 약 1억톤의 배출

권이 정산되었으며, 루프트한자(1천만톤), 에어프랑스(9.6백만톤)의 순으로 정산되었다.

(2) 해상운송부문

EU는 항공분야와 마찬가지로 그간 수차례 국제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하여 해상운송분야의 온실가스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지만, 항공분야처럼 바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신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2013.6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₂)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U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연료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30년에 2005년 대비 배출량 2%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승용차(Category M) 및 2.5톤 이하 소형화물차(Category N1)에 대한 배출가스 지침(Directive 98/69/EC)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하여 2000년부터 Euro 3 기준, 2005년부터는 Euro 4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현재는 2007.6월 제정된 새로운 Euro 5 기준(Regulation(EC) No 715/2007)이 신규 차종승인에 대해서는 2009.9월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2011.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Euro 5 기준은 디젤차량의 분진(particulate matter)의 배출량을 80% 감소(기존 25mg/km → 5mg/km)시키고,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기준(180mg/km)을 기존보다 20% 강화하였다. 또한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Euro 6이 신규 차종의 승인에 대해서는 2014.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승인 지침(Directive 2005/55/E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정(Regulation(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에어컨용 플루오르가스 사용제한

EU는 2006.6월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을 공포하여,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 잠재도(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50을 초과하는 불소화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부터는 GWP가 150을 초과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합성승인,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집행위는 플루오르 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분의 2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규제법안을 2012.11월에 제안하였으며, 대체용매가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오존층 보호관련 규제

오존층 고갈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1) 제도 현황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에 대한 관련 폐기물의 수거, 재활용 의무 부과,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 하는 2개의 지침이 2003.2월 시행되었다.

①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Directive 2002/96/EC: WEEE)

회원국들이 2005.8.13일까지 가정에서 발생한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수집하기 위한 분리수거체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수거체제는 최종 소유자(final holder) 및 시장유통자(distributor)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유통자가 소비자에게 기 공급된 제품과 동 종(equivalent type)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제품은 무료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국들은 폐전기전자제품을 2006.12.31일까지 1인당 연간 최소 4kg까지 회수(분리수거)하도록 하였다.

2005.8.13일 이후에 시장에 출고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선택적), 2005.8.13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historical product)에 대한 비용은 비용 지불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관련제품 생산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회원국은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생산자는 2005.8.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symbol, AnnexIV)를 부착하고, 아울러 당해 제품의 생산자 및 동 시점 이후 출시 사실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2006.12.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생산자 의무재활용 목표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 및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의 최소 복원(recovery) 목표를 중량기준 80%로 하고, 관련 부품의 최소 재이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목표를 75%로 하였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 장비 및 냉장고, TV,

오디오 등 소비자 편의장비의 최소 복원 목표를 중량기준 75%로 하고, 관련 부품의 최소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를 65%로 하였다. 진공청소기·전기다리미 등 소형 가전제품, 조명기구, 연기감지기·온도조절장치 등의 최소 복원 목표를 중량기준 70%로 하고, 관련 부품의 최소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를 50%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전기전자 제품의 1/3 정도만이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EU는 동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위는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Directive 2002/96/EC: WEEE)에 대한 개정안을 2008.12.3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2012.7월에 공포되었다.

WEEE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적용대상을 발효후 6년간은 기존처럼 10개 품목군으로 하고, 이후에는 태양광패널 등 모든 전기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2) 회원국의 회수목표(collection target)를 4년 후 출하량의 45%, 7년 이후에는 65%로 설정하였다.

②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Directive 2002/95/EC: RoHS)

2006.7.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가 포함된 새로운(new) 전기전자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지침 부속서(Annex) 개정을 통하여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2009.6월 38가지 적용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상기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에 예외항목을 나열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부속서를 개정하기도 하는데 2006.10월에는 우리 정부 및 업계(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상의 산화납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바 있다.

EU 집행위가 2008.12월 제출한 개정지침안(RoHS II)이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서 2011.5월 승인되었다. 회원국들은 개정지침 발효일(2011.7.21)로부터 18개월내(2013.1)에 입법을 완료하여야 하며, 국가별로 시장감시기관

을 두게 된다.

개정된 지침(RoHS)의 주요내용은 대상제품을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케이블과 부속품 포함)에 적용된다.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은 개정지침이 바로 적용되며, 의료장비, 감시 및 계측장비(3년후 적용) 그리고 산업용 감시 및 계측장비(6년후 적용) 등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EU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전지판집열판(photovoltaic panels)은 면제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전구는 일시적 면제대상으로 정하였다.

자동차 폐차지침

자동차 폐차(ELV: End of Life Vehicle) 지침(2000/53/EC)은 차량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폐차량 및 그 부품의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복원(recovery) 등의 비중을 확대하며, 폐차과정을 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0.10월에 발효되었다.

적용범위는 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을 대상으로 하되,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등 동 지침상의 일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동 지침은 자동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폐차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2002.7.1일부터는 시장에 유통되는 신규차량 수거비용을, 2007.1.1일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에 대한 수거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되었다. 비용부담이 일부 떨어지는 것은 폐차의 엔진, 차체 등 주요 부분이 없거나 폐기물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최종 차량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 지침은 생산자, 유통자, 수거자 등 관련 경제주체들이 달성해야할 재사용 및 복원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연간 재사용율 및 복원율을 자동차 중량기준 85%(재사용 및 재활용률은 80%), 2015년까지 95%(재사용 및 재활용률은 85%)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성을

감안한 디자인과 부품 사용 촉진을 권장하고, 2003.7.1일부터는 신규 자동차에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을 함유한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다만, 앞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서와 유사하게 부득이한 경우 부속서 개정을 통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는 지침은 Directive 94/62/EC이다. 동 지침은 2004.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어 2008년까지 회원국이 달성할 복원 및 재활용 등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원국은 2005.8.18일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예시(부속서 I)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과자상자, CD케이스 필름 등은 포장재의 범주에 포함하였지만, 화분, 공구상자, 차(tea) 봉지, 소시지 표피 등은 제외하였다. EU 집행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부속서 I에 예시된 포장재의 범위를 재검토하되, CD 및 비디오 케이스, 화분, 튜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회원국은 포장재기준(부속서 II) 등 기존대책 이외에 생산자 책임제도(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등의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기준(Europe standards)의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지침에서는 2008.12.31일까지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복원 및 재활용 목표를 기존의 지침보다 강화하여 설정하였다.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기준 복원율(recovery)을 기존 50~65%에서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을 기존 25~45%에서 55~8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포장재관련 재질(material)의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를 현행 15%(일률적)에서 유리 60%, 종이 및 합판지 60%, 금속 50%, 플라스틱

22.5%, 목재 15% 등 재질별로 강화하였다. 참고로, 복원(recovery)은 EU 폐기물지침(Directive 75/442)상 재활용(recycling), 열회수, 폐유 정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개정지침은 재활용, 복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에 포장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그 특수성(작은 다수 섬, 산악지역, 현재 낮은 포장재 소비 등)을 감안하여 기존(2001.6.30) 목표 복원율(25%) 및 재활용율(25~45%)을 2005.12.31일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일반 회원국이 2008년에 달성하여야 하는 복원 및 재활용 목표달성 시한은 2011.12.31일까지 연장하였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코라벨(eco-label) 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의 근거 규정은 Regulation(EC) No 66/2010이며, 에코라벨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된 자발적 인증형태의 프로그램이다.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소비자들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환경의식이 높은 데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을 획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1992년 EU의 에코라벨이 시행된 이래 2011년말 1,357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운환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17,000여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세부품목은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 참조).

EU는 에코라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에코라벨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9년 유럽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40%가 EU 에코라벨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19%는 동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15년까지 에코라벨 부여대상 품목군을 약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10.18일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EU집행위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EU집행위는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채택을 위하여 신규발생위해성과학위원회(SCENIHR)와 EU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의 연구(2010년 완료)를 기초로 공공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규제(행정)적 측면에서 실제 응용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 권고가 회원국과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나, EU집행위·회원국들이 향후 법령 제·개정 시 동 정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나노물질을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하였다.

다만,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EU 집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 위에 대한 예외로서, 외형 크기(external dimensions)가 1 nm 미만인 풀러렌(fullerenes), 그래핀 조각(graphene flakes),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 wall carbon nanotubes)도 나노물질로 분류하였다(동 정의 제3항).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특정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이 $60\text{m}^2/\text{cm}^3$ 이상이면 나노물질에 해당함. 그러나 제2항 규정에 의한 수-크기분포에 따라 나노물질로 분류된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60\text{m}^2/\text{cm}^3$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나노물질로 분류된다(동 정의 제5항).

2014.12월까지 위의 정의들은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재검토(review) 될 예정이며, 예정된 재검토에서는 입자수-크기분포 기준(the number size distribution threshold, 50%)을 중점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EU내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을 2012.10월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중 이행법률 제정과 회원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예상된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보조금 및 그 밖의 정부 지원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시

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여타 경쟁정책 분야와 달리 국가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집행위의 권한은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R&D·직업훈련·고용지원·낙후지역개발·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2.1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643억유로(EU GDP의 0.5%) 계속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보조금 중 529억유로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보조되었고, 이중 약 90%는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었다. 나머지 114억유로는 농업, 수산업 및 교통 분야에 지원되었다.

EU는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 조치(crisis-aid)를 승인해 왔으며, 2008년부터 2012.10.1까지 총 5조유로(EU GDP의 40.3%)의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2011년에는 지급보증(guarantee umbrellas) 및 청산(liquidity)에 약 6,829억유로(EU GDP의 5.4%), 자본확충(recapitalisation scheme) 등에 약 317억유로(EU GDP의 0.25%)가 지원

되었다.

정부조달

2012.12월 발간된 EU 집행위 보고서(Public Procurement Indicators 2011)에 따르면 2011년 27개 회원국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2조 4천억유로이며, 이 중 TED(Tenders Electronic Daily database)를 통해 EU 관보(OJ)에 게재된 조달시장 규모는 EU 전체 GDP 대비 약 3.4% 수준인 약 4,254억유로 규모이다.

한편, EU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회원국의 정부조달 중 EU 정부조달지침을 적용받는 이들 규모는 GDP 대비 약 2~12% 수준이나 EU의 지역개발정책(regional policy)으로 신규 가입국들에게 제공될 개발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만큼 EU 전체 공공시장조달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하였으며, 과거 낙찰실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기업들도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정부조달관련 정책은 그간의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동 정책에는 입찰 관련 행정비용 절감 및 계약 당사자 간 대화 촉진 등을 위해 전자조달(electronic procurement)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달의 범위는 사업(works) 계



약, 물품 공급(supplies) 계약, 용역 공급(services) 계약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는 2009.11월부터 기존 최저 정부조달 사업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사업(works) 계약의 경우 4,845,000유로 이상, 물품 공급(supplies) 계약과 용역 공급(services) 계약의 경우는 중앙정부 조달은 125,000유로 이상, 지방정부 조달은 193,000유로 이상의 입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확대된 전자조달 방식에 따라 응찰자들이 기술명세서를 작성할 때 2003.12월부터 적용 중인 새로운 EU의 공동조달코드(Common Procurement Vocabulary Codes)를 활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자와 응찰자 간 및 응찰자 서로간의 대화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러 개의 조달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대규모 조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다 저렴하고 좋은 조건에 조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그간 일부 회원국들이 중앙조달기관을 설치하여 대규모 입찰을 시행해 오던 관행을 공식 인정하였는데, 각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중앙조달기관 리스트를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EU는 정부조달에 있어 법적안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낙찰 결정 이후 최소 10일 동안은 조달 기관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응찰자들에게 재검토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검토 절차가 개시될 경우 조달 과정은 재검토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한편, EU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급적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정부조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저가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최종 낙찰자 선정 시 고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찰자 선정기준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가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의 응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울러, EU는 수도, 운송, 에너지, 우편서비스도 정부조달시장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EU 역내규정이나 GPA 등 다자 및 양자협정에 의해 개방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아직도 약 50%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방 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 소액 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시행되고 있는데, ‘국방 조달 가이드라인’은 연 1,700 억유로 상당의 EU 회원국 국방 조달에 대해,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은 조달기관의 친환경제품과 서비스 조달에 대해, ‘소액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앞의 두 EU 법령에서 정한 하한선 이하의 소액 조달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중 국방 조달과 관련하여 2009년 중에는 새로운 국방조달에 대한 지침(지침 2009/81/EC)이 채택 및 발효되었다. 신지침은 기존 지침에 비해 EU 지침 비대상이 되는 국방 입찰의 범위를 줄이고 관련 절차의 명료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EU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 공표하여야 하는 시기는 2011.8월말까지이다.

한편,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한 EU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개편안은 ①정부조달 관련 행정절차를 축소하는 등 절차 간소화, ②주요 교역상대국 정부조달시장 개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 ③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규칙 회피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사전 검토 기구 설립, ④WTO 정부조달협정 조속한 개정을 통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법 규범은 EU 관련법과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EU는 지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지역소진(regional exhaustion)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제3국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EU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를 보호받으려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심사결과 특허를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당초에 지정하였던 국가들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는 유럽특허조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소위 뮌헨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는 유럽특허청을 관할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2013.9월 현재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특허가 부여되면 출원시 지정하였던 EPC회원국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이 허락한 특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결과(특허정정, 특허취소 등)는 전체 특허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1) 단일특허제도 설치 논의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8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2009.12.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단일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EU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EU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 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전체에 걸쳐서 부여되고, 이전되며,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안은 EPO에 출원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U특허의 논의과

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절차 중의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의상 ‘공동체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12.0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27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합특허를 지체 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12.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2.15일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

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²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3.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회원국 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2011.4월 EU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6.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³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의 2011.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전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 6. 29.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런던: 화학 및 의약품),(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12.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EU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EEUPC)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였다. 다

2.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3.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권한은 없었다.

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폴란드도 불참하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EUPC는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하되 EU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발효를 위한 EU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최초의 EU 단일 특허는 2015년 초 경에나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통합특허에 대한 평가

집행위는 번역비용의 저감으로 25개 회원국 전체서 유효한 단일 특허에 대한 취득 비용이 6,200유로 이하로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통합특허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데 영·불·독 이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EU회원국 국민은 번역비용을 반환받음으로 출

원단계에서부터 출원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원인에 대하여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적어도 출원과정에서는 통합 특허의 장점을 많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나 등록 단계에서는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저감되고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출원인이 유럽특허에서 통합특허로 이동할 것이다.

그간 EU의 이산된 특허제도는 비단 EU 내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EU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EU 시장의 이용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 시정이 요구되어온 만큼 국내외의 많은 EU 시장 이용자들이 통합특허의 발족 가시화를 반기고 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에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시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유럽특허청(EPO)의 특허활동

유럽특허청은 2012년 특허출원 건수가 2011년의 기록(244,000건)을 갱신하여 역대 최고인 258,000건을 기록하였고 2011년 대비 5.7%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원인들은 2011년 14,278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유럽특허청 전체 출원건의 5.5%를 차지하였다.

유럽특허청은 2012년 65,700건의 특허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2011년의 특허 부여건수(62,115) 대비 5.8% 증가된 수치이다. 2012년 유럽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의 63%는 비 유럽국가로부터 접수되었고, 비 유럽국가들로부터의 출원 비율은 2011년의 62%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별 특허출원의 점유율을 보면, 전체 출원 중 38개 유럽특허조약(EPC) 회원국들로부터의 출원 비율은 37%로 2011년(38%)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미국 출원인의 출원은 전체의 24.7%(63,777건)를 차지하였다.

전체 특허출원 증가분의 과반수가 한·중·일의 특허출원에 기인하는 등 이들

3개국들로부터의 출원이 급증하였다. 즉, 일본 20%, 중국 7.3%, 한국 5.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특허출원은 2011년 대비 일본 8.5%, 중국 11.3%, 한국은 7.7%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독일(13.4%), 프랑스(4.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스위스(3.2%), 영국(2.6%), 네덜란드(2.5%)의 점유율을 보였다. 유럽특허청의 다 출원국 순위는 미국(24.7%), 일본(20%), 독일(13.4%), 중국(7.3%), 한국(5.5%) 순이며, 한국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전체 5위의 출원건수를 기록하였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일개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공동체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공동체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1) 공동체상표의 효력 확대

공동체상표청(OHIM)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OHIM은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한 공동체상표 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국에서 공동체상표보다 선의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 일을 갖는 가입국내의 선권리자는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2009.5월 공동체상표청(OHIM)은 공동체상표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부담이 기존의 1,750유로에서 1,050유로로 줄게 되었고, 공동체 상표 등록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EU의 상표 출원인들이 연간 약 6천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WIPO는 상표소유자가 표준출원으로 회원국들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상표 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의정서 가입을 결정한바 있으며, 2004.10월부터 발효되었다.

(3) EU 상표법 개정계획

EU의 상표법 제도의 근간인 EU 상표지침(89/104/EEC)과 EU 공동체상표 규정(Community Trademark Regulation)이 각각 1989년과 1994년 제정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EU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특허 분야와 비교하여 상표법 분야에서는 급진적인 법률 개정은 없을 것이며 주로 EU 공동체 상표제도와 각 회원국 자체 상표제도의 조화 및 최근의 국제적 상표이슈를 반영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실체 상표법(substantive trademark law)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상표법이 조화되어 있는 반면, 상표권 획득을 위한 절차법은 회원국들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절차의 통일화도 EU 상표법 개정의 주요 목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표법 개정사항에는, 최근 유럽상표디

자인청(OHIM)이 야심적인 2012-2015 업무발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OHIM과 각 회원국 상표청 간의 협력(심사관 교류, 상표검색을 위한 공동 DB 구축 및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방안)을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 보호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물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국으로부터의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도 가능하며 2009년 이래 1건의 비 EU 지리적표시가 등록되었지만 등록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되고 있다.

2010.7월 EU는 스위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800개의 EU 측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와 22개의 스위스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가 상호 보호받게 되었다. EU는 중국과도 지리적 표시 관련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7년 시작된 ‘텐 플러스 텐’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10개의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EU에서 10개의 중국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한-EU FTA 발효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EU 공동체 상표 제도 하에서 공동체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관련법 및 무역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EU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식품, 포도주, 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함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에서의 비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는 독자적(sui generis) 보호시스템을 갖는 국가, EU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간접적 보호 등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2011.5월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2년말 연구를 종료하였고 2013년 말경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로입을 위한 자체 연구의 범위는 크게 이하의 3가지로 요약된다.

- EU 차원 및 회원국, 비회원국에서의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현황
-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관련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평가

디자인

(1) 공동체디자인제도

EU는 2001.12월에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은 각 EU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공동체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공동체상표청(OHIM)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간 EU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2) EU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 확대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 디자인의 권리자적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다만, 가입국에서 공동체 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을 갖는 가입국 내의 선 권리자는 그 권리가 선의로 취득된 경우 공동체의장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

(1)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지침 채택

2001.4월 EU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관한 EU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집행위원회와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3년여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통과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복제, 배포, 공중전달권 및 복제방지장치의 법적 보호를 통일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동 지침은 어떤 조건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 즉, 사적 복제(회원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열거적인 목록화, 권리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의 통일, 복제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를 위한 예외규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다시 현행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012.7.11일 EU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음악 사업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권리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제안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을 부흥시키고 온라인 침해를 경감시킬 것이라 생각되는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을 규정한 지침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상기 지침안은 총 5개의 장, 44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3장의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이용허락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며, 다국적 이용 허락시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권한당국이 검토하도록 보장하고, 다국적 이용허락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및 실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작자에 대한 적절하고 지연 없는 배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안에 의하면 권리관리단체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후 1년까지 권리관리단체가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관리단체에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권리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안이 입법화되면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EU의 가치와 디지털 시대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 지침은 음악 산업에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리자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한 법적 틀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협회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한 점, 권리자를 빨리 찾아서 돈을 지급하도록 협회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부 창작자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12월 EU는 소위 인터넷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했는데,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EU의 정보사회의 저작권 지침(2001/29/EC)에 반영되어 실행되어 왔다. 최근 EU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유럽의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유럽 전역의 연구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4/48)과 전자상거래 지침(2000/31)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

(1) 개요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신 리스본 전략상 강력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물 추방에 관한 논의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 간의 집행수준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해마다 국경단속을 통해 적발, 압수한 위조물품의 수량, 금액 및 공급 국가별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제안들

2003.1월에 집행위원회는 EU 국경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8년 동안 EU의 외부 국경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저작물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규정한 관세규정(EC/3295/94)을 보충한다. 또한, 2003.1월에 관세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행위와 지식재산

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품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가.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집행지침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특히 최근 집행이 약한 회원국들의 집행조치에 관한 국내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동 제안은 권리소유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 법사위원회는 지침의 범위를 모든 불법저작물 및 위조품으로 확대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규정의 개정

개정의 목표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새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권리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양자가 동일하다. 법적 장치에 의하면 권리자는 당해 세관에 상품이 통관되는 것을 금지하여 압류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관은 그 상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그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10일 이내에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세관은 그 상품을 통관시킨다.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상품의 폐기가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정의 적용범위가 지리적 표시 및 식물 품종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에 까지 확대되었다.
- 적용범위는 그 상품이 대규모 운반의 일부로 간주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론상 개인 여행자가 운반하는 비상업적인 성격의 상품에까지 확대되었다.
- 그 규정은 세관이 3일 동안은 권리자의 사전 신청이 없이도 임의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권리자가 제공해야 할 수수료와 보증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권리자



는 세관에서 상품을 억류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 e)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신청서식도 표준화되었으며, 컴퓨터 신청도 장려되고 있다.
- f) 세관은 권리자에게 상품의 성격, 출처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관은 소송제기를 위해 필요한 샘플도 제공할 수 있다.
- g) 권리자는 당해 사건의 승소에 관한 사전조치 없이도 20일 이내에 그 상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후 6개월만인 2003.7월에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4.7.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울러 EU는 2008.9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수행할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을 위한 세관의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9.4월 27개 회원국의 40개의 민간기업, 집행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를 발족하여 범 유럽 차원의 위조상품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기구의 발족은 회원국 관계 당국과 이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전문성 및 침해정보를 공유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운영재원의 부족,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감시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5.24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위조상품 및 도용에 관한 감시기구의 기능을 OHIM에 위탁하는 규정(regulation)*⁴을 제출하였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상기 규정을 채택하였다.

4_ * Draft regulation entrusting the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with certain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assembl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as a 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2012.6.5일부터 OHIM은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3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12.9.27~28일 EU 집행위, EU 회원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OHIM의 심판원(Boards of Appeal)장을 역임한 Paul Maier가 초대 감시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감시기구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U는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재권의 보호수준 강화 및 집행, 국경조치 등을 위한 세부 지재권 관련규정은 EU가 협상해 온 다수의 무역 협정에도 반영되어 왔다. EU는 2007년 이래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과 FTA를 체결 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가 중미국가인 콜롬비아, 페루 등과 체결한 FTA는 지재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한 세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2.9월에는 한-EU간 지재산 이슈의 양자협의를 위하여 IP 다이얼 로그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지재산 입법 및 정책 진전 상황과 관련하여, EU측은 EU 단일 특허 추진, EU 상표법 개정,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고아저작물 관련 법안, 비농산물 지리적 표시 연구 등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한-EU FTA 및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의 협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상표 집행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U는 2007년 개시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논의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0.10월 최종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EU의 ACTA 가입과정은 2012.1.26일 EU 22개 회원국이 일본 동경에서 ACTA 조약안에 서명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EU 시민들의 ACTA 반대운동은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중유럽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ACTA의 반대진영 측은 인터넷 접속의 자유 및 시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AC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의회는 2012.7.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AC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다수 의원의 반대로 ACTA가 최종 부결되었다. ACTA의 유럽의회 동의를 최종 무산됨에 따라, 2012.1월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비준안 자체가 무효화되어, ACTA의 EU내 발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EU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며,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도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우선,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3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워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2.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s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핵심적인 국가보조금 관련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의 수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분야별로 공청회, 분석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카르텔은 EU의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2013년에도 EU집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의 2012년도 연차보고서(2013.5)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니언시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한 범위반행위 적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EU는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사건 패소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 간에는 31.6억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83.5억유로에 달했다면,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2년말까지 3년간 53.6억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주요 건을 보면, 2011년에는 바나나, 가정용 세제, CRT유리, 냉매압축기 분야 카르텔을 적발하여 총 6.14억유로(약 9,0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2년말에

는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유로(2.2조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3.7월에도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1.4억유로를 부과하였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으며, 제약분야에 있어서는 지재권을 남용한 AstraZenca 제재에 이어 2013.6월에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였다. 현재에도 EU경쟁당국은 제약산업에 있어서, 특히 역지불합의 관련한 수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EU집행위가 단일시장을 위한 입법안(telecom package)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강화함과 동시에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M&A에 대해서는 단일시장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셋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EU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혁신업종, 금융업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경쟁당국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령결과 등을 거쳐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글이 금년 9월 다시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등 합의종결을 통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사건도 현재 합의종결(commitment)방식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2011년에 공식조사에 착수한 신용디폴트스왑 시장 관련 2건에 대해서는 2013년 범위반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를 일부 투자은행 등에게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시장(payment markets)분야에서도 2013년에 EU경쟁당국은 수년간의 경쟁법 집행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개정안과 카드수수료 규정(regulation on interchange fees) 개정

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기업결합 규율과 관련하여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 불허결정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섯째, EU경쟁당국은 유럽기능조약(TFEU) 제106조에 의거 개별회원국이 EU경쟁법과 양립하지 않는 입법조치에 대해 개입할 수 있으며, 개별회원국으로부터 사회공익목적을 위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은 국공영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례로 2011년 EU경쟁당국은 2008년 PPC사에게 갈탄채취의 독점권을 부여한 그리스정부의 행위가 EU경쟁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리스정부는 결국 입찰을 통해 4개 광산의 접근을 허용한 바 있다. 회원국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EU는 2012년 이후 에너지, 우편 등 민영화가 추진 중이거나 최근 민영화가 이루어진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정밀 감시를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중 EU는 그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온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 도입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전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향후 EU가입이 예상되는 터키, 아이슬란드 등 국가와 효율적 경쟁법 집행기구 구축, 입법체제 정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 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는 바,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관

EU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전체 GDP의 70%를 상회한다. 이와 같이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은 대외 시장개방 정도와 내부 시장통합정도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거 상당 부분에 있어 최혜국 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제한 정도와 대상 산업은 각 회원국별로 상이하다. EU가 개방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산업은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EU 상품 시장의 통합정도는 매우 높은 반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EU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EU 서비스 단일 시장 달성을 위하여 EU는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까지 철폐하도록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 시장 서비스 지침을 채택하였다.

- ① 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 ④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 ⑤ 국적국의 영업허가 전 회원 국내 적용 등

이 지침은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 라디오·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⁵

한편, 2010.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

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기로 하였으며 ①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④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⑥환경서비스, ⑦금융서비스, ⑧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⑨ 운송보조 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 수준은 WTO DDA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수준 보다 높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가 소비자 권리, 규제 독립성 강화 등을 포함시켜 2009년에 도입한 통신 서비스 개혁안에 따르면 소비자 계약은 최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명시하고, 이러한 수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5.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속 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선과 케이블 통신망으로 인터넷이 이용되는 EU에서 차세대 접근망(Next

5_ 금융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은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서비스에 대한 시장 통합은 다른 EU 법령으로 진행된다.

Generation Access) 보급은 매우 초기 단계이므로, 광대역 통신망 시장에서 경쟁을 조장하면서 민간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

(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한편,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 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EU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가에 한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개선방안이 다양한 추진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통합을 보다 심화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금융동맹(banking union)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첫 단계로써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단일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설립을 추진중(2013.10월경부터 가동 예정)에 있다. 아울러 2015.1월을 목표로 EU 공동의 은행정리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EU 공동의 예금보장기구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3) 운송

EU 운송 산업은 EU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약 1천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EU 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은 EU의 지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EU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송서비스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U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간 EU 집행위는 공동교통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이를 제시해왔다. 2001년에는 향후 10년간의 교통정책의 목표, 관점 전략 등을 제시하는 백서(White Paper -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를 통해 60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EU 집행위는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자원효율적인 운송시스템

을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교통백서(White Paper 2011: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를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교통의 이동성(mobility)을 증가시키면서도 배출가스(emission)의 양은 감소시키기 위해 2050년까지 통합된 단일유럽교통지역(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10대 구체목표 및 세부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감축(2030년까지 50%, 2050년 0%수준으로)할 예정이며, 도로화물(300km 이상 이동시)을 철도 및 수상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 전환(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하고, 중거리 이동의 주요수단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내 고속철도망을 현재의 3배로 증설한다. 또한 2050년까지 항공분야에서 저탄소연료 사용률을 40%까지 증대시키며, 해운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8개국(인구 10억)을 포괄하는 유럽 단일항공지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구축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항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육상교통분야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과 위성항행분야의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육상교통의 혼잡도를 감소(화물차의 도로이용을 줄이고, 바다, 철도 및 육지의 수로를 통한 화물 운송 증대)시키고, 송부문간 연결성(inter-modality)을 제고하며, 화물운송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기(2003-2006)에 이어 2기(2007-2013)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00여개 EU내 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EU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 전역에서의 철도화물 운송추적, 위험물 운송추적 등을 통해 운송의 정시성(punctuality)과 안전

성(safety)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지역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및 증대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유럽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범유럽교통망(TEN-T) 프로그램 기금,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 통합기금(Cohesion Fund) 및 유럽개발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유상개발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2009년 기준 EU 전체 GDP의 0.6%, EU 전체 고용의 0.7%를 차지하며,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으며,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 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리스

개관

전체 산업 동향

1821년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리스는 유럽의 현대 경제기반이 된 근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여 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의 필요성과 자본회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유럽 사회주의 형태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마셜정책으로 인해 유럽에 자본이 공급되기 시작되면서 그리스는 Karamanlis 수상의 노력 하에 '60~'70년대에 뒤늦게 기본적인 산업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의 Papandreou 총리가 집권한 '80년대 이후 노조를 기반으로 대중적 인기영합 정책을 취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다.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대내적으로는 강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300여 개의 직종의 폐쇄성은 비용 전가 및 고물가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스의 해운산업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자국의 높은 과세율로 인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본사 이전)으로 인해 그리스 국가경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업별 GDP 구성비는 2011년 기준으로 1차 산업 3%, 2차 산업 12%, 3차 산업(관광, 금융 등) 85%로 3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스 정부는 2010년 재정위기 발생 후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통한 공공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

텔 설정 및 정치경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스 경제의 부문별 GDP 비중(% , 2012)	
농수산	3.4
광산 & 제조	12
건설	4
상업, 운송, 관광	23
금융, 부동산, 보험	16
행정, 국방, 의료, 사회보장	17
정보통신	4.6
전문 과학기술	5
예술 & 연예	4
기타	11

그리스는 실제로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국가와의 마찰(에게해 문제), 노사 대결 등으로 인해 개발이 상당부분 미진한 상황이다. 지리적으로는 산악지역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토의 30% 정도만이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곡물, 채소, 과일 경작이 어려운 저고지 산지들의 대부분은 올리브 경작과 방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광물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이 있다. 갈탄의 경우,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2011.1월 환경에너지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트라키, 카발라 지방에 금 420톤, 은 2100톤, 니켈 6.5백만 톤, 크롬 1 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자원들의 개발을 위해 지질광물연구소 설립을 결정하였다.

원유는 1975년에 설립된 국영석유회사(이후 ELPE로 개명)가 1981년부터 북부 에게해의 Prino 근해 해저에서 원유시추를 시작하였다. 이 해저유전으로부터 1983~85년 간 하루 평균 2만6천~3만배럴, 총 1억2천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당시 하루 평균 2십만배럴을 소모하던 그리스 총 수요의 13%를 충당하였다. 현재 이 Prino 해저유전은 높은 유황 함량의 저품질,

저가의 소량만이 생산되며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국영석유회사(ELPE)의 자회사인 ELDA, EKO 등 정유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미 1874년부터 그리스 수역에 유전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터키와의 에게해 대륙붕 및 영해 분쟁으로 인해 최근까지 석유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2005년 Royal Dutch-Shell사는 당시 국가발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동사의 위성사진 분석 및 연구를 토대로 그리스의 원유시추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탐사를 제안하였다.

Royal Dutch-Shell사사는 탐사가능 지역으로는 중앙 및 북부 에게해 영역, 일곱 도서지역(Eptanisa)으로부터 북부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의 이오니아해 영역, 에게해 동부 12도서 영역(Dodekanisa), 그리스 북서부 Ipeiros 영역 등이며 이로부터 총 20~40억 배럴의 원유시추가 가능하고, 석유탐사 가능성도 경제성 판단 기준인 0.8%를 훨씬 넘는 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최근 터키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목표로 그리스 서부와 남부(크레테 섬 남부)의 영해 내 유전탐사를 진행 중에 있다.(노르웨이의 PGS사)

그리스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풍부한 갈탄을 연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발칸반도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는 북부의 산악지형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의 교통망이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EU 역내지원프로그램 자금의 1/4 정도를 도로 등과 같은 기간망 건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아테네 남부의 피레우스 항구와 북부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키 항구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주요 해상운송 거점기지의 하나이다.

그리스는 산업 전반의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2007년 569억달러, 2008년 620억달러, 2009년 397억달러, 2010년 240억달러, 2011년 210억달러)는 관광 수입, 선박 운송과 같은 기타 서비스 수입 등 무역외수지 흑자와 EU 보조금 및 해외 자금 조달 등으로 보전하고 있다.

GDP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경우,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계 및 국가 차원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나, 2004년 올림픽 경기 개최국이라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홍보활동의 부족,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 위기 및 그리스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혼란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국가들의 내부혼란, 불황으로 인한 관광 가격하락으로 인해 그리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경제 현황

경제 성장

그리스 경제는 2013년 현재까지 6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소비(소득 삭감), 투자(금융경쟁/지출 축소) 위축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 '12 연속 -7%대로 최악의 경제 불황을 겪었고, '13년에 -5%의 경기침체후 '14년이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수지 및 재정적자가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나, 매우 완만히 수년에 걸쳐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08	'09	'10	'11	'12
경제성장률	-0.2	-3.1	-4.9	-7.1	-7.1
GDP(€십억)	233.2	231.1	222.2	208.5	193.7
1인당 GDP(\$ US)	29,460	29,186	27,662	29,932	24,567

실업률

높은 실업률(전체 실업률 26%, 청년실업률 58%)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2. 11월에는 전체실업률이 27%로 EU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고실업률

은 소득감소-소비위축-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구분	'08	'09	'10	'11	'12
전체실업률	7.9	10.3	14.2	20.7	26.0
청년실업률	16.5	20.4	28.0	49.9	57.8

시장위축: 자동차 시장 현황

그리스의 자동차의 판매대수는 '08년의 26만여대에 달하던 것이 2012년에는 1/5 수준인 5만 8천여대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08	'09	'10	'11	'12
판매 대수	267,242	220,548	141,499	97,682	58,482
감소율(%)	-4.5	-17.5	-35.8	-31.0	-40.1

무역수지

수출은 증가세인 반면,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규모는 줄어드는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적자규모는 '08년 450억유로에서 '12년 200억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구분	'08	'09	'10	'11	'12
수출 (€백만)	17,937	14,675	16,378	22,761 (39% ↑)	26,735 (17% ↑)
수입 (€백만)	62,945	49,791	48,121	43,727 (9% ↓)	46,765 (7% ↓)
수지 (€백만)	-45,008	-35,116	-31,743	-20,966 (34% ↓)	-20,030 (4% ↓)

재정적자

무역적자 축소 및 대외 이자 지급 감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기초재정수지는 '13년에 흑자가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신용도 상승, 은행예금 증가추세, 국채수익률 하향(2012.5월 39.85%에서

2013.1월 10.4%) 등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구분	'08	'09	'10	'11	'12	'13 전망
재정수입(bil.€)	94.8	88.6	90.2	88.2	83.1(6%↓)	79.8
재정지출(bil.€)	118.0	124.7	114.3	108.0	96.6(11%↓)	86.2
총수지 (GDP 대비)	-9.8	-15.6	-10.7	-9.4	-6.6(2.8%↓)	-5.0
기초수지 (GDP 대비)	-4.9	-10.4	-4.9	-2.3	-1.2(1.1%↓)	0.4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및 주요 교역품목

수출이 US\$ 19억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은 사상최대인 173%로 급증하였으나 수입규모 자체는 아직 수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의 80%는 선박 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합성수지 등 여타 품목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수출품: 선박, 철도차량,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태양광모듈, 축전지
- 수입품: 나프타, 연초류, 화장지, 모피류, 동/알루미늄 스크랩

(단위: US\$백만, %)

구분	'10		'11		'1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208.9	-62.3	1,349.6	11.7	1,908.7	41.4
수입	81.6	45.6	90.9	11.3	247.9	172.7
수지	1,127.2	-64.2	1,258.7	11.7	1,660.8	31.9

■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 현황

(단위: US\$백만, %)

품목	'11		'12		'13. 2.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1,349.6	11.7	1,908.7	41.4	68.3	-86.1
선박	1,083.3	13.0	1,554.8	43.5	38.1	-91.6
철도차량	10.7	-	172.0	1,508	-	-

품 목	'11		'12		'13. 2.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합성수지	28.4	44.5	29.8	5.1	9.8	100.8
무선전화기	27.2	-45.4	15.8	-41.9	1.4	-36.0
태양광모듈	17.3	2,343	11.9	-31.2	0.7	-23.1
축전지	13.2	13.4	10.8	-18.6	2.6	60.2
승용차	21.7	-33.5	10.2	-53.1	1.2	137.4
타이어	6.4	6.9	6.7	6.2	1.5	74.3
에어컨	5.8	-37.0	5.7	-0.7	0.1	-92.1
원동기	6.1	47.0	5.1	-15.8	0.4	-51.8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단위: US\$백만, %)

품 목	'11		'12		'13. 2.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90.9	11.3	247.9	172.7	40.2	310.8
나프타	7.7	-74.9	195.0	2,436	32.7	-
연초류	11.2	-13.6	5.9	-47.7	1.9	16,387
화장지(위생대)	-	980.5	5.7	44,866	0.1	-89.3
기타 모피	9.4	104.7	4.4	-52.9	0.8	46.1
선 박	-	-89.5	4.3	4,821	-	-
섬유원료(면)	0.1	-92.4	3.5	2,342	0.1	-96.4
기타 비금속광물	1.9	38.2	2.6	33.3	0.6	138.6
동스크랩	3.0	-14.3	2.4	-18.5	0.2	-84.6
음료(농산물)	-	590.4	2.3	-		
기타 의류(모피)	1.4	193.3	2.1	43.8	-	-76.1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 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반면에 현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다. 아울러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M&A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의 통신, IT, 식음료, 담배 및 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및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green field 형 직접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데,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 해소를 위하여 1996년에 투자청(ELKE; Invest in Greece Agency로 개칭)을 설립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투자업체와 경쟁분야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료들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견제 내지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세계 183개국을 비교 분석하여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Greece'를 근거로, 그리스의 비즈니스 환경은 2009 보고서에서 96위를 차지한 데에 이어 2010년 보고서에서는 109위로 14단계 하락했으나, 그리스 정부의 개혁 추진의 부분적 결과로 인해 2012년 보고서에서는 100위를 차지하였다.

■ Doing Business 2012 Greece

구분	2012년도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100
Starting a Business	135
Dealing with Licenses	41
Getting Electricity	77

구분	2012년도 순위
Registering Property	150
Getting Credit	78
Protecting Investors	155
Paying Taxes	83
Trading Across Borders	84
Enforcing Contracts	90
Closing a Business	49
Resolving Insolvency	57

※ 출처: 세계은행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수준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는 절대금액 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촉진법(Law 3299/2004)을 보완하여 2006년에 제정된 LAW 3522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산업 등 산업별 분류에 따른 상행위를 2가지로 세분화하여 상행위 별로 외국인 투자시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 주요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시 인센티브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Law3299, Law3522에 의한 외국인 투자시 그리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 촉진 보조금은 지역별 개발 정도 및 신규 고용창출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지역 외에는 신규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 타개 조치 일환으로 그리스 정부는 ‘투자행정 신속처리법 Fast Track(Law3775/2009)를 제정하여 대규모 해외 직접투

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리스 투자청(Invest in Greece)이 관리하는 투자관련 신속처리(One step-shop) 편의제공은 아래 범주에 해당한다.

- a. 2억유로 이상의 사업 규모 또는
- b. 2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전제하는 7천 5백만유로 이상의 사업 규모 또는
- c. 총사업규모와 무관한 첨단기술 및 혁신부문 연 1백만유로 이상의 투자사업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 및 EMU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가입을 전후한 그리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플레이 및 이자율 하락, 주식시장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시 문제점이 적지 않아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지 투자시 주요 문제점인 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원자재 조달이 힘든 실정이다. 대리석, 알루미늄 등의 광산물을 제외하고는 원자재 조달을 해외에서 반입해야 하지만 원거리로 인하여 저부가가치 품목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대 그리스 투자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설립 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효율성이라 하겠다. 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Fast Track 적용대상인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사업들은 지자체 등의 행정 비효율이나 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종업원 해고, 휴가 제공, 각종 법정 상여금 지급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인건비도 높아 그리스 기업조차도 인건비가 낮은 인근 발칸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

또한, 공무원까지도 파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발생시 파업이 빈발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에 저항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로 인해 항만이나 운송업자들의 파업도 수시로 발생, 물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이 현 단계에서는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 및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가시화되면 차후의 공공부문과 노무관리 상황은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개발·경쟁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의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빈번한 입찰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U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 기술적 사양이 EU회원국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비EU회원국 기업의 경우 동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입찰 공고시 EU 기관에서 발급한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 EU 내 국가에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 등 EU 국가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 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 52백만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 수

주에 성공한 바 있다.

조세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자국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스 정부는 2008년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세수 확보에 돌입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무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TAXnet을 도입하여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가세 환급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스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0~45%까지 세율이 부과되며, 법인세는 법인성격에 따라 20~25%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안으로 기업활동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15~20%)를 포함한 세제동기부여를 기획중이다.

■ 개인 소득세

2011.7.1일 개정법(2012년부터 적용, 법률3982/2011)				
소득구간(EURO)	세율(%)	영수증 증빙 한도	소득	소득세(EURO)
0-8.000	0%	25%	8.000	0
8.001-12.000	10%	25%	12.000	400
12.001-16.000	18%	25%	16.000	1.120
16.001-22.000	24%	25%	22.000	2.560
22.001-26.000	26%	25%	26.000	3.600
26.001-32.000	32%	25%	32.000	5.520
32.001-40.000	36%	25%	40.000	8.400
40.001-60.000	38%	25%	60.000	16.000
60.000-100.000	40%	15.000유로	100.000	32.600
100.000 이상	45%	15.000유로		

2010.4.23일 개정법(법률3842/2010)				
소득구간(EURO)	세율(%)	영수증 증빙 한도	소득	소득세(EURO)
0-6.000	0%	0%	6.000	0
6.001-12.000	0%	10%	12.000	0
12.001-16.000	18%	30%	16.000	720
16.001-22.000	24%	30%	22.000	2.160
22.001-26.000	26%	30%	26.000	3.200
26.001-32.000	32%	30%	32.000	5.120
32.001-40.000	36%	30%	40.000	8.000
40.001-60.000	38%	30%	60.000	15.600
60.000-100.000	40%	30%	100.000	31.600

※ 출처: 그리스 재무부

■ 기존 개인 소득세

소득구간 (EURO)	세율(%)			세금 총액			
				소 득	소득세		
	2007	2008	2009		2007년	2008년	2009년
0-12,000	0	0	0	12,000	0	0	0
12,001-30,000	29%	27%	25%	30,000	5,220	4,860	4,500
30,001-75,000	39%	37%	35%	75,000	22,770	21,510	20,250
75,000 초과	40%	40%	40%				

※ 출처: 그리스 투자청

2010.4월 개정된 법률 3842에 의하면 회계연도 2010년도부터 소득구간이 넓어졌고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수증 증빙한도를 설정하여 이 한도 액만큼의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12,000유로의 면세혜택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영수증액을 제출할 경우 그 초과액의 10% 세금 할인이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 면세 혜택이 없고 세금도 10% 추가 부과된다. 2010.6월 개정 법안은 10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45%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2011년 중반에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대처를 위해 전반적으로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면세혜택은 연소득 8,000유

로 이하로 축소하고, 자녀수에 따른 면세혜택의 증감, 세무자 연령 30세를 기준하여 동일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 추가, 회계연도 2010~2014년간 연소득 12,000유로 이상의 세무자에 대한 특별연대세 부과를 제정하였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대처방안으로 2011.3월에 법률 3943/2011과 7월에 발표된 중기재정 실행법 3986/2011을 제정하여 2종 및 3종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회사, 법인, 또는 지사에 대해 연 300~500유로의 기업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 법인세

2010.4.23일 개정법(현행법, 법률3842/2010)

Tax Rates for Legal Entities						
Type of Legal Entity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O.E., E.E., Civil Law Communities	20%	20%	20%	20%	20%	20%
Joint Ventures, Civil companies, Participation and Nominee Companies	25%	24%	23%	22%	21%	20%
Legal Services Companies of L.518/89, Notarial Companies of L.284/93	25%	24%	23%	22%	21%	20%
Societe Anonymes, Foreign & domestic Legal Entities with a non profitable status	25%	24%	23%	22%	21%	20%

※ 출처: 그리스 투자청

일반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2010.6월부터 23%로, 서적, 식사 요금은 11%, 관광 상품 등에는 9%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법률 2992/2002 15조에 의거, 그리스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회사들에게 세무신고의 의무화하였고 법률 3091/2002 제15~18조에 의거 역외회사 부동산에 대한 특별 세금이 부과된다.

노사관계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

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권은 없다. 파업권은 조합원 전체투표에 의해서 가결된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파업기간 중 사업주는 직장을 폐쇄할 수 없고 신규 인력채용이 금지된다. 단, 공공서비스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산업은 파업 중이라 할지라도 필수요원은 근무를 해야 하며 파업기간 중 사업주는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스 노조(전노조, 공무원 노조)는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으며 노조 간부가 정당의 간부를 겸하고 있는 등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노동법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만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체협상의 형태에 따라 최상급 단체인 그리스노총 및 각 단위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교섭을 체결하게 된다. 전국 차원의 교섭은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GSEE: Greek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과 사용자 단체(SEB: the Federation of Greek Industries)만이 참여하며, 매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조합원·비조합원 여부를 떠나 전국 모든 업종과 부문별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차원의 부문별, 업종별 단체협약이 있어 업종 또는 산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지역별 단체협약은 부문별 전국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들 전국 또는 지역별 단체협약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단체나 개별 사용자와 교섭한다.

그리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일요일을 포함해 독립기념일인 3.25일, 부활절의 금·월요일, 성모 승천기념일인 8.15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12.25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추가업무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주일에 48시간까지 근무가 길어지면 시간당 수당의 25%를 의무 지급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국경일 기간 중 초과 근무시 주간에는 75%, 야간에는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부활절 기간의 초과근무 수당은 전년 12월부터 부활절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휴가수당 50%, 크리스마스 수당 100% 등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월급여의 200%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활절(4월) 50%, 하계(보통 7월에 지급) 휴가비 50%, 크리스마스 100%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사회보장세로 월급여의 44.06%에 해당하는 보험연금공단 기여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6.0%, 고용주가 28.06%(고용주 기여금)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스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부채위기로 인한 EU & IMF 협정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트로이카(EU, IMF, ECB)는 그리스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직종별 단체계약 폐지, 최저임금 인하 조정 등 그리스의 고용관계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체류허가

2006.1.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도록 하고 있고, 그 후 열 번의 개정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갱신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 분포지역에 따라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기

업의 체류허가 연장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우리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제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평균 2.25% 성장하였으며, EU 경기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07년 경기확장 시기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며 네덜란드는 2009년 -3.7%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2012년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EU 및 여타 지역의 수입수요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또한 단기간에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네덜란드 경제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의 2013.9월 발표에 따르면 GDP는 2013년 1.25% 감소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4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3.7	1.7	1.0	-0.9
재정수지	-5.6	-5.1	-4.5	-4.0
정부부채비율	60.8	63.1	65.5	71.4
민간소비	-2.1	0.3	-1.0	-1.4

구분	2009	2010	2011	2012
수출증가율	-9.7	13.5	4.3	2.2
수입증가율	-9.4	12.2	4.1	3.4
실업률	4.8	5.5	5.3	5.3

정보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네덜란드는 한국의 여섯 번째 투자진출국이며 유럽 내 첫 번째 투자진출국이다. 2012년 말 누적 투자신고액은 446건, 113억달러였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0년 대 후반기에 들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1년 주춤하였던 투자가 2012년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 한 해에만 전체 누적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28.5억달러가 투자되었다.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르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덜란드 투자환경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과 스키폴 공항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155개 국가 중 물류 시설 면에서 2위,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3위, 세관 환경 면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이다.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과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를 접속하여 통관을 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과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inding Origin Information(BOI))이 이

루어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이외에도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로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Rotterdam Investment Agency(RIA) 등 지역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Expatcenter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노무이다.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거나 잦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을 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

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 수입규제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 내 철폐된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돼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음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 의약품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 사료
-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 환경 유해 물질
- 폐기물(Waste) 등

네덜란드는 주류의 용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와인과 증류주 등은 유럽에서

주로 생산하는 용량일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출시 가능한 와인 용량은 0.10리터, 0.187리터, 0.25리터, 0.375리터, 0.50리터, 0.75리터, 1.00리터, 1.50리터이며, 증류주 용량은 0.10리터, 0.20리터, 0.375 리터, 0.50 리터, 0.75리터, 1.0리터, 1.50리터이다. 예를 들어 0.3리터짜리 증류주는 네덜란드에 수출될 수 없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용량을 바꾸어야 한다.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 돼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EU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타 EU국가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www.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EORI 번호(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1.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1.31일 도입 후 유효기간을 거쳐 2012.7.1일부터 동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

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신청서(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 관세 납부→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일이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물류 창고로 보내 운송(T1)→창고 보관→세관 신고 및 통관→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하여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통관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제도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 에너지 컨설팅 및 전기 안전 테스트 회사)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유로에서 수만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기 검사에도 수천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0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등이다.

5)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이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6)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효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52% 등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20만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이른바

중소기업 세율(mkb-tarief)인 20%가, 2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의 경우 중간 규모 OECD국가로 분류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법인세(25%)는 중간규모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인 27.6%보다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저축·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료도 부과되는데, 구체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직업소득에 대한 세율

소득구간	세율	사회보장보험료 징수요율	총 세율
0유로-19,645유로 이하	5.85%	31.15%	37%
19,645유로 초과-33,363유로 이하	10.85%	31.15%	42%
33,363유로 초과-55,991유로 이하	42%	-	42%
55,991유로 초과	52%	-	52%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 가입 등에 있어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BTW)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식품, 물,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6%의 예외적으로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라 다르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0.19126%,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0.15291%이다.

체류허가

2013.6월 이전에는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경우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에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 취득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은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 신청 수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3.6.1일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고급인력’ 이민자(주재원 등)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은행 부문은 총 자산이 3조 3천억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으로는 ABN-AMRO, International Nederlanden Group(ING), Rabobank Nederland가 있다.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금융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국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

행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의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구비돼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독일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안정과 수출 및 무역수지 증가에 힘입어 2010년 4.0%, 2011년 3.3%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EU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2012년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에도 0.4~0.5%의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면서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경제성장이 내수보다는 EU 등과의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유로존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1.6~1.8% 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08년 이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 GDP 기준으로 17개 유로존 국가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 EU 전체로는 2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2011.7.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독 간 무역액은 2012년 251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독간 무역수지가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선박, 자동차, 무선전화기 및 반도체 등 4개 품목의 독일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 유로존 위기 등 거시경제 변수뿐 아니라 해운산업 등 개별 산업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양국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012년 3.8억달러이며 누

계기준으로는 111억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중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자는 2012년 61백만달러이고 누계기준으로는 4.1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대한투자가 자동차부품, 전기, 화학 등 제조업 공장설립과 기업인수 위주인 반면에 한국의 대한투자는 판매법인 위주의 투자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 EU 관세 규정 적용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독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독일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리마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2007.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업 자단체인 독일전기업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반 생활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요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유의 인증 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각 주 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독일 시장에 수입되는 상품에 CE(유럽표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상표의 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 안전성 표준

- 독일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 logo(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 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

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ä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시 계약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컨대 ‘Funktion-alausschreibung’의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전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연간 2억유로 수준에 이르나 프랑스(8억유로)나 영국(2억 7천만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와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로 등록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회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lamt)에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은행업·전당포업·경매업·도박장 운영·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사례는 없다. 다만, 독일정부는 2007.8월 현행 대외경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부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독일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 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정부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 조사 결과 해당 외국인투자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public security and order)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동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조사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조사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투자자는 상기 기업매수 및 지분 매입 등 투자내용에 대해 독일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해당 투자가 독일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독일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기업활동을 허가하는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독일 내에서 항구적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독일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득세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업 무역사무소 등록 절차
- 상업 무역사무소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 상업 무역사무소는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0~60유로 부과한다.
 - 상업 무역사무소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ID 카드 또는 여권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 상용 비자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후 수일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과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는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에 공개된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설립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부도 절차(부도회사인 경우)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조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주선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EAV)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1월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일에 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적연금보험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령보장법은 최종 합의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13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5.5% 수준),
- ② 연금보험료(Rentenversicherung, 총소득의 18.9% 수준),
-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05% 수준),
- ④ 실업보험료(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에 한한다.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독일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 활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무역박람회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세와 라인메세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독일내 등록된 내외국인 기업에 관한 정보는 e-trade-center를 통해 제공되며, 이 외에도 독일내 산업별 기업정보 DB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독일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적용되는바,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내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12월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독일은 자국 내 실업자 감소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IT나 의료 등 일부 업계 고학력 인력 부족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블루카드(Blue Card)를 도입하는 등 체류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2.8.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연봉 44,800유로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부족 분야’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34,944유로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당한지 심사를 한다.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어난 18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기존 90일) 노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법에 따르면 독일 대학 졸업자는 2년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면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8.1일 이후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블루카드를 취득하여 33개월 취업생활을 한 자도 신청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B1(중급)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고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2009.4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3.6.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발효되어 우리

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독일내 노동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용비자 발급 절차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독일에 이미 체류중인 경우 외국인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 발급 기준으로 독일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50만유로 이상 투자하거나 5명 이상의 현지 고용인을 채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 능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년 연속 비자 갱신을 받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은 MTCR, Australia Group, NSG, Wasse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통제제도 관련 주요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연방 경제부 산하 수출통제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ausfuhrkontrolle.info/bafa/en/export_control/nl_export_control/index.html)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 은행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약 1,000여개, 시가 총액 약 2조달러 규모로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이다. 특히, 동 거래소는 시카고 거래소와 함께 세계최대 규모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은 견조한 실물경제 및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약 7,000억유로로서 5,000개 이상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나 세계자산 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은행은 소규모·고밀도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은행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독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 बैं킹 시스템(universal banking system)을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10년 유럽 금융시장 불안 대응 과정에서 2010.5월 공매도 금지조치도 유럽국가 중 우선적으로 취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2개 현지법인 외에,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루마니아

경제 개요

2007.1.1일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27개 EU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약 2,000만의 인구를 보유한 나라로, EU 시장과 러시아, 터키를 연결하는 동유럽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혼란을 겪다가 2000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 2008년까지 연 5~6%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루마니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외국인투자의 증가였다. 2003년 이전 10년 동안 10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는 EU 가입 협상이 타결되던 2004년 52억유로, 2005년 52억유로, 2006년 91억유로, 2007년 73억유로, 2008년 95억유로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2009년 경제불황기에도 46억유로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와 함께 서유럽에 진출한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2007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호황을 기록, 6%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은 건설, 설비투자, 서비스 등 전 분야의 호황으로 상반기 8.8%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위기 발생 및 극복과정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7년 EU 가입 이후 계속된 외국투자 유입 등으로 2008에만 7.1%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기침체, 특히 루마니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U 경제권의 불황과

루마니아 내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루마니아는 2008년 3/4분기 부터 경제불황에 빠져들기 시작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하였다.

2009년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경제위기로 루마니아(Ron)가 폭락하는 등 (2009년 초인 1~2월 Euro당 역사상 최고치인 4.3ron 기록)의 금융불안에 대응, 루마니아/IMF 간 스탠바이 협정이 2009.3월 체결되게 되었으며, IMF, EU, EIB, EBRD는 향후 2~3년간 총액 195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루마니아는 IMF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감축, 한시적이기는 하나 2010.7.1일부터 12.31일까지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19%→24%)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 정책 및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약속한 재정적자 축소, 공공부문 구조조정, 조세 및 공공요금의 인상 등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2011년에 들어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으로 보이며, 유럽 재정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 및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해외 자본 유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5%를 시현하게 되었다.

한편, EU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대외 경제여건이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불만이 커지면서, 2011년에 이어 2012.2월과 5월 총리 내각이 교체되었으며, 7월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어 국민투표에 회부되었으며,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등의 탄핵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루마니아(Ron)는 역사상 최저치인 Euro당 4.5-4.7 ron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EU 회원국들의 마이너스 성장과는 달리 2012년도 경제성장률이 07%를 달성하였다.

2011.3월 IMF와의 예방적 신용공여협정 체결 이래 IMF 등으로 구성된 실



사단이 분기별 루마니아를 방문, 경제전반 현황 및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받았으며, 2013.7월 IMF, EC, WB의 최종 합동 실사 평가에서 루마니아 경제정책이 정상 궤도를 이행하고 있고, IMF 예방적 신용공여 협정에 따른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무역, 재정 및 금융 등 거시경제 안정을 큰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구조개혁이 미흡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3.8 루마니아 정부는 IMF 및 EC와 예방적 신용공여 협정을 체결하여,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루마니아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즉 IMF 및 EC와 향후 2년간(2013~2015년) 40억 유로(IMF 및 EC 각 약 20억유로) 규모의 예방적 차원에서 신용공여협정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IMF 이사회는 9월말 약 198억유로에 대한 협정을 승인하였으며 EU와의 협정은 10월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외환보유고는 2009년 283억유로, 2010년말 324억유로, 2013.8월말 현재 322억유로(금 포함시 357억유로)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루마니아 대외부채는 2013.6월말 현재 약 998억유로로서 2012년말 대비 1.3억유로 감소하여, GDP 대비 70%에 이르며, 중장기 대외 채무는 789억유로(79.1%)이며, 단기 채무는 199억유로(19.9%, 2012년말 대비 2.0% 감소)로 줄어든 상태이다.

루마니아의 교역은 EU 회원국내 무역규모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수출은 578.8억불(전년대비 8.2% 감소)이며, 수입은 702.4억불(전년대비 8.2% 감소)로, 무역량은 2011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123.6억불로 2011년 135.1억불 대비 감소하였다.

경제 전망

루마니아는 경제 산업 구조가 여타 EU회원국에 비해 취약하고, 대외무역에 있어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FDI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2%를 달성,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1/4분기 -1.1%)과 비교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다소 상향 조정하였다.

루마니아에 투자하려던 기업은 대부분 유럽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서유럽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및 법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로, 철도 등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이 루마니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루마니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U 가입이후 후진적인 법질서 및 관행이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EU 회원국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어 해외 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외에 EU의 각종 기금 지원 등이 루마니아 경제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관계

1990년대 중반 아무도 루마니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대우가 일찍 루마니아에 대거 진출한 영향으로 인해, 루마니아인은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중동 유럽국가보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2011년 양국 간 무역액은 8.3억달러로서 우리의 對루마니아 수출이 약 4.6억달러, 수입은 3.7억달러를 기록, 우리가 약 0.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양국간 무역액은 8.3억달러로서 우리의 對루마니아 수출이 약 4.6억달러, 수입은 3.7억달러를 기록, 우리가 약 0.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양국 교역액은 10.99억달러로서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2011.7월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양국 간 무역이 지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수출입 통계는 원산지 기준이므로 실제 우리의 수출로 볼 수 있는 상당액이 우회수출, 현지생산 등을 이유로 포착되지 못하므로 실제 한-루마니아 수출입은 통계수치보다 상당히 상회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선박용 부품, 철강제품, 자동차, 무선 전화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부품, 선박용 부품, 고철 등으로서, 대우조선, 두산중공업, 삼성 오텔리눅스 특수강 등 루마니아에 진출한 우리 업체가 사용하는 원부자재들이 수입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EU 가입을 계기로 루마니아는 한국의 유망한 투자처이자 EU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부상하였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특수강업체를, 두산중공업은 루마니아 최대의 단조공장을 인수하는 등 우리기업의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어 왔다. 또한, 헝가리 국경지역인 오라데아 지역을 중심으로 삼성협력업체인 신흥정밀, 동양 E&P 등의 업체가 헝가리, 슬로바키아로부터 이전 진출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 국가(40개)에서 10~15위권 내외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잠재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루마니아 정부도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그린서티피케트를 부여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총 150MW 규모)으로 활발하게 투자 진출하였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는 2013.6.7 긴급명령(Government Emergency Ordinance)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인 Green Certificate의 일부(태양광 6개중 2개, 풍력 2개중 1개, 10MW 이하 수력 3개중 1개)에 대해 일정기간(3년 9개월 또는 4년 반) 권리행사를 유예하는 조치 등을 2013.7.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나아가,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 부여하는 과다 보상 축소차원에서 Green Certificate 수를 축소(MWh당 태양광 6개→3개, 풍력 2개→1.5개(2017년까지), 1.25(2018년부터), 10MW 이하 수력 3개

→2.7개(신규), 2개(보수))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므로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은 루마니아 관련 입법 동향을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는 원전단지(체르나보다 원전3호 및 4호기) 건설을 추진중이며, EU 기금을 활용하여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도 추진중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국책사업에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업체의 참여가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루마니아는 1971년 GATT에 가입하였고, 1995년 WTO 출범시의 회원국이었으며, 2007.1.1일 EU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의 관세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역외관세가 적용되어 수입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루마니아의 2005년 기준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17.5%이었으나, EU 가입으로 평균 4.2%로 인하하였다.

특히, 2011.7월 한-EU FTA 발효로 인해 관세장벽이 많은 품목이 완화 또는 철폐되었으므로 해당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사전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루마니아 온라인 관세정보시스템인 TARIC-RO(http://80.96.3.68:9080/taric/web/main_EN(영어))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기타 무역장벽

루마니아는 지금까지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safeguard measures)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바 없다. 또한 루마니아는 2003년 local contents 폐지 의무규정을 철폐시한보다 조기에 철폐하였고, 최근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 또한 철폐하였다.



루마니아는 대외무역에 있어 수량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타 국가들과 같이 천연자원, 인간 및 식물보건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목적을 위해 자동적인 수출허가제도(automatic export license system)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부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발급을 요구하는 부가절차가 있을 수 있고, 전략물자 등에 대해서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물자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부가절차의 해당 여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EU내에서 움직이는 거래라 하더라도 소비세 부과, 통계 보고적 측면에서 관련 문서(Accompanying Administrative Documents)를 국경무역시 요구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또한, EU가 터키, 산마리노 및 안도라와 특별 관세동맹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나라와 관련되는 수출입에 있어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세 평가에 있어 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상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마진이 평가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서 가급적 제조원가가 기준으로 되는 절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내외의 특수관계 기업(본사 내지 자회사)과의 거래에서 이전가격(transfer of price) 문제에 유의해야 할 것인 바, 루마니아의 경우 이와 관련해 2006년도에 사전가격책정절차(Advance Pricing Arrangements) 제도가 도입되고 그 절차를 규정한 입법조치가 2007년도에 공포되었고 그 익년에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이전가격 문제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루마니아는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통관시간(clearance time)이 많이 단축되었다. 또한, 수출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연합체인 수출위원회(export council)를 운영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쉥겐 가입국간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가능토록 하는 쉥겐협약(26개국)에 아직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며, 쉥겐 가입을 위해 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3

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 인적, 물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해 조속한 가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국제입찰제도

루마니아는 EU 가입에 따라 2007.1.1일부터 WTO/GPA 회원국이 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입찰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U 가입절차의 일환으로 2005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입찰규제감독기관(N.A.R.M.P.P., National Authority for Regulating and Monitoring Public Procurement)을 설치하였다. 동 감독기관은 1)공공입찰관련 전략 입안, 2)입찰계약 관련절차 규제, 3)입찰계약 체결 절차 모니터링, 4)입찰 관련 정부 대표기관 역할, 5)계약 체결기관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기본법제로 2006.6월 발효하고 2010.6월 일부 개정된 정부령(Government Emergency Ordinance) 제34/2006호가 EU의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제반 법규(Directive 2004/18/EC: 공공 공사 및 구매의 입찰 절차, Directive 2004/17/EC: 수도, 에너지, 운송 및 우편에 관한 공공입찰, Council Directive 89/665/EEC: 공공입찰의 재검토 절차 등)를 반영하고 있다. 동 정부령에서는 또한 공공 공사와 용역의 양허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허에 대한 심의절차, 양허입찰의 준비 및 양허부여 그리고 동 양허의 회수에 관한 제반 절차와 서류에 관해 기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절차는 정부지침(Government Decision no 71/2007)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공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입찰의 세부 심의 및 관련 절차는 정부지침(Government Decision no 925/2006)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자산 및 자원의 양허(대가로 수수료 등 지불)에 관한 건은 별도의 법제(정부령 제54/2006호)에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공공입찰에 관해 루마니아는 공사(works), 용역, 공급 계약과 함께 공공역무분야 중 수도, 에너지, 운송 등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Sectoral Contract”도 공공입찰의 한 유형으로 두고 있다.

루마니아의 입찰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법인격을 가지는 공공기관, 이러한 정부 내지 공공 기관의 연합체, 전기, 수도 등 공공역무 임무를 공적으로 위임받은 기업 등 실체도 발주할 수 있는 등 분산형을 취하고 있으며, 입찰참가는 해당 입찰의 참가자격이 규정하는데 따라야 하므로 특정 기술, 재정, 품질, 환경 등에 관한 보증을 요구하기고 하고 입찰 자격이 제한되기도 한다. 입찰 과정은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전자입찰 제도를 통해 정보차원에서는 집중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입찰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수 후보자 선정 및 최종 낙찰 직전 발주기관과 후보자 간 가격, 계약 이행조건 등에 관해 협의 절차를 두고, 또한 낙찰 전에 기본협약을 체결해 낙찰시 탈루될 계약 이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의무로 주지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루마니아는 정부 긴급명령으로 되어 있는 기존 정부조달제도를 2013.7월 법률의 형식으로 전환, 시행하였으며, 동 전환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계약 규모를 상향 조정(상품, 서비스 1만5천유로에서 3만유로 이상, 공사 1만5천유로에서 10만유로 이상)하였으며, 추정가 80% 미만의 저가 입찰 참여자에 대한 입찰 참여 자격 제한이외에 일부 제출 서류 및 관련절차를 수정 보완하였다.

2010년 도입된 민관합작(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도 2011년 관련 규정 개정(GEO 39 및 86/2011)을 통해 계약 규모가 상품, 서비스의 경우 12만5천유로 이상, 공사 계약의 경우 484만 5천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공 입찰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관합작사업 참여자로서 공공기관 지분에 대한 금융조달 활용 불가, 사업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 있어 투명성 부족,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규정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루마니아 정부는 2013년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루마니아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GDP의 10% 이상에 이르며, EU 가입이 후 루마니아에 할당된 대규모의 EU 구조개선기금(2008-2013)을 활용, 루마니아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EU 자금의 흡수율(10% 이내)이 낮아 당초 기대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입찰 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쟁정책

루마니아는 2005.1.1일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소득세 및 기업법인세를 16% 단일세율로 고정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고소득자의 조세 탈루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동 단일세율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의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논쟁이 되어 왔으나, 2013년 현재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세는 종래 19%이었으나 2010.7월부터 24%로 인상되었으며, 감세되는 경우 9%, 5%로 차등적용 될 수 있으며, EU 내외의 거래, 투자촉진과 관련 해 해당되는 경우 환급절차가 제공된다. 다만, 이러한 부가세 환급은 해당 관청의 능력 행정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절차가 취해지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재무 측면에서 유의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는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영화,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2007년에 완전 자유화하였다. 전기시장의 경우, 일부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송배전 부문도 완전 자유화하였다. 특히 배전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지배가 주목된다.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루마니아 전기열규제위원회(ANRE)를 설치,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루마니아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2.9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ANRE를 경제부에서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였다.

한편, 루마니아 경제정책 당국은 전력생산과 관련해 분산되어 있는 생산기

업들을 재편한다는 목표 하에 전력생산 기업 전원을 합병해 두 개의 대형 기업으로 전력생산 시장을 나눈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1.3 IMF와의 예방적 신용공여 협정 체결이후 민영화를 통한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IMF와의 합의에 따라 전력 등 포함 주요 공기업들의 일정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 추진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03년 기존의 경쟁법을 개정, 경쟁사무소(competition office)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로 이원화되었던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 인센티브

루마니아는 1)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1/4-1/3에 불과한 임금수준, 2)2,000여만 명의 자체시장, EU시장에 대한 관문국가, 3)16%의 낮은 법인세, 4)IT분야에서의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등 투자처로서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동구시장의 주요 해외자본 유치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EU 가입을 배경으로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왔으며, 2011.9월까지 총 424억달러(GDP의 21.2%)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최소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루마니아 정부는 2008년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령(2008/85)을 통해 외국인 투자지원 체제를 완비하였으며, 동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 및 루마니아인의 동등 대우

- 절차의 투명성 및 설비사용의 효율성
- 투자자 재산권의 보호,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보호 기준
-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조항 등

또한, 루마니아는 IT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EU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서(MOU) 체결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다.

- 과학기술공원(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ark) 용도로 전환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세감면
- 농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 부가되는 조세를 면제
- 과학기술공원 운영 시점까지 투자기간 동안 모든 부가가치세의 연기
- 인프라시설 지원 등 루마니아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적용

외국인투자제한

루마니아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부여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 예외는 항공운송분야에 국한되는데, 항공면허는 루마니아인에 의해 운영되고, 루마니아에서 설치된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루마니아 기업 주식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고, 분야별 특별제한도 없으며, 다수 분야에 걸치는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 또한 없다. 오히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에 의해 외국기업이 루마니아 국내기업에 비해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1994.12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2006.9월 투자보호/증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개정(2008.1.11일 발효)함으로써, 루마니아 투자기업은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 및 투자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

루마니아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2009년 통합 설립된 루마니아 무역투자청(ROMANIAN TRADE AND INVEST)은 무역 및 투자유치 전략 및 활동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무역 및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및 무역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3.8월 무역과 투자 부문이 분리되어 경제부와 총리실로 각각 이관되었다.

IT분야에서의 투자유치 전략

루마니아는 IT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IT관련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IT 기업으로 MS, Intel, Oracle, Ericsson, Hewlett Packard, IBM, Bodafone 등이 공장 건설, 연구소 및 기술센터 설치 등의 방법으로 루마니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 또한 IT분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IT 기업과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책에는 토지 무상지원, 일정 조건하 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지원, 인근 공항 확대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사회보장제

루마니아 사회보장제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루마니아에서 일하는 피고용자와 이들의 고용주는 루마니아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월 단위로 지불해야 한다, 피고용자와 고용자별 자세한 납부 비율은 아래와 같다.

- 피고용자의 사회보장제 기여분(급여 대비)
 - 사회보장제 10.5%
 - 실업보장제 0.5%
 - 의료보험 5.5%

-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기여분(급여 대비)
 - 사회보장세 20.8%, 25.8%, 30.8%(회사의 종류에 따라 상이)
 - 의료보험 5.2%
 - 휴가보전기금 0.85%
 - 임금보전기금 0.25%
 - 실업보험 0.5%
 - 산업재해 보험료 0.15%, 0.85%(위험정도에 따라 상이)
 - 노동청 수수료 0.25%, 0.75%

사회보장세는 고용주 및 피고용자 분을 합산하여 회사가 등록된 지역의 국가사회보장기관(CNPAS: Casa Nationala de Pensii si Alte Drepturii de Asigurari Sociale)에 납부한다.

2008.9월 한-루 양국 정상회담 개최 계기에 한국-루마니아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2008.9.), 2010.7월 발효되었다. 따라서 양국에서 보험료(한국 국민연금/루마니아 사회보장세 등) 이중납부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등이 인정되게 되었는바,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재정부담이 경감되었다., 따라서 루마니아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에게 주재원 등 파견 시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면제의 상세 조건과 절차에 관해 사전 확인(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토록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EU회원국 국민으로서 루마니아 거주자는 루마니아인과 같이 루마니아 토지를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인 EU 회원국 국민은 2012년부터 토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EU 회원국 국민은 소속 국가와 루마니아가 양 국민에 대해 타방국 소재 토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상호주의적으로 보장하는 조약을 맺은 경우에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루마니아와 양국민의 타방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한 바 없어서, 우리 국민이 루마니아 토지를 법률상 소유할 수

없으나, 루마니아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EU 회원국내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도 2012년부터 토지(사업용 또는 거주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토지(농업용, 삼림용) 및 삼림 소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토지를 매입 또는 매도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약서와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토지 소유와는 달리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 외국인도 건물 소유권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건물을 매입 또는 매도할 때는 공증 의무가 없지만, 건물에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시에도 공증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1945년 사회주의체제 당시 정부가 국유화한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1989년 시민혁명 이후 다시 소유권을 되찾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환관리

루마니아는 1998년 IMF 8조국에 가입하면서 은행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따라서 경상거래 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고, 거주자는 은행 및 공식 환전소를 통해 외환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비자 취득

한-루마니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사증 없이 90일까지 루마니아 체류가 가능하다.

루마니아 체류 우리 국민들이 비자와 체류허가 신청 및 취득 과정에서 1)담당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태 및 중복적인 서류 제출 요구, 2)루마니아의 EU 가입에 따라 관련 법령이 바뀜으로 인한 루마니아 공무원들의 적응기간 등으로 인해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점차 나아지고 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체류 또는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리/유급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 비자,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3~4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매년 체류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루마니아는 2007.7월 취업허가 절차를 일부 개선하여 기존 임시취업허가-입국비자-취업허가-체류허가의 4단계에서 취업허가-입국비자-체류허가의 3단계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취업허가를 받기 위한 각종 서류 준비, 취업허가 신청후의 처리시간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동반 가족의 경우, 주재원의 체류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절차가 개시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주재원의 경우 루마니아 파견 결정시 가능하다면 고용허가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취업체류허가 취득절차 및 법적 소요기간
취업허가(30일 소요) → 90일 취업비자(14일 소요) → 취업체류허가(30일 소요)
- 투자체류허가 취득절차
투자허가(30일 소요) → 90일 투자비자(30일 소요) → 투자체류허가(30일 소요)
- 기타목적체류허가 취득절차
90일 기타목적비자(30일 소요) → 취업허가(30일 소요) → 기타목적체류허가(30일 소요)

투자체류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루마니아 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사업 계획 관련 서류 및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은행잔고(주식회사 10만유로, 유한책임회사 7만유로)가 있어야 한다.

취업비자 또는 투자비자는 반드시 루마니아 국외에서 신청,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루마니아에 입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주한루마니아대사관에서는 루마니아에 입국한 후 인근국가(주로 불가리아나 헝가리) 소재 루마니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에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제기하여 왔으며, 2013.10월 서울에서 양국 영사국장 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협의중이다.

운전면허 취득

루마니아에 체류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루마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루마니아 운전면허 업무 담당기관: 운전면허 및 운송 등록청 Directia de Permis de Conducere si Inmatriculare a Vehiculelor).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에서 허용하는 차종과 같은 범위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루마니아 면허증으로 교환되며, 면허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면허증을 교환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체류허가(ID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루마니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류허가 취득을 위해 3~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루마니아 입국 후 90일 이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년)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 루마니아에서 1년간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

금융시장

외국 금융기관들의 루마니아 금융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루마니아 금융기관 전체 주식의 약 83%를 외국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2006년 대우은행이 이탈리아 C.R. Firenze Romanian Bank에 인수되었고, 루마니아상업은행(Romanian Commercial Bank)이 호주계열의 Erste Bank에 인수되는 등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인수합병이 활발하였다. 은행 이외에도 보험, leasing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 금융기관이 진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외국계 기업의 진출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루마니아는 2006년 금융시장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Basel II 기준에 의거한 EU법령에 일치시키는 New Capital Accord를 2007.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09년 들어 루마니아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루마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對루마니아 위험도(exposure)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서구의 모은행으로 자금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감지됨에 따라 외환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불안이 금융계에 확산되었다. 따라서,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외국계은행 본사를 상대로 자금유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루마니아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2009.3월에 40%의 중앙은행 강제예치제를 실시하였고, 2009.7.24일에는 IMF 구제금융이 개시되면서 예치 비율을 20%로 다소 인하하였으나, 외환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며, 2012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존 탈퇴 문제로 인해 루마니아 외국계 은행의 자본 회수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2013년 현재 루마니아내 외국계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터키,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인구 72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6,900달러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및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발칸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경제 규모의 3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우크라이나 등 후진국산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인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요구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이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려우므로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는 직접 웨어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3분의 1정도로 크며, 수입 시 관세 회피를 위한 서류위조 및 뇌물 등 관행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제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판매보다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리아 현지 기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 취득권과 부동산에 팔려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우선 비 EU 회원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하며,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팔려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라이선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되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선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수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레바(약 25,000유로)이다.

對불가리아 투자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터키,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진출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운송비용이 한국에 비해 높으므로 투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여 복잡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축소 등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의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임금 수치를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비서명국이였으나, 2007.1월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1.1일 유럽연합(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으며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대부분 유럽연합(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다. 지식



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8.20일 상표 및 지리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업 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958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기업 창업시부터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기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가 발달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연간 총 수출은 약 1,800억달러, 수입은 약 1,700억달러 수준이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14.5억달러, 대 스웨덴 수출은 7.9억달러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제3국에서 생산된 우리제품의 수출량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생산,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스웨덴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 스웨덴 수출액은 12.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스웨덴 기업: Volvo(227위), Ericsson(333위), Vattenfall(473위, 이상 Fortune Global 500 in 2013), Skanska, SEB,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IKEA, H&M, Saab, Electrolux, Tektra Pak,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 분야 등에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
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
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
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으로는 매우 실용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 않으며 브랜드 보다는 제품의 품
질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저렴한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승용차, 휴대폰,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업
계 종사자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
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례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은(80% 이상)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한편,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들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전과 협찬기업의 미디어 홍보, 그리고 스웨덴 시장에서의 한국 스마트폰과 LED TV, 승용차(시장점유율 10%) 제품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투자 환경

투자환경

-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Kista) Science City: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이며 에릭슨 본사가 위치하면서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ICT 관련 기업만 총 1,100개사가 입주,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 형성
- 그 외, 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말뫼/룬드, 자동차 클러스터-요테보리, BT 및 제약 클러스터-옴살라, CleanTech(환경산업) 클러스터-스톡홀름 등 운영

스웨덴은 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 및 패션, 의료기기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우편,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가를 지어놓고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설비를 해놓은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자체가 대외 의존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으며 그간 쌓아온 국제 사회에서의 신임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 투자지로서의 단점

먼저,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이 없다. 다만, 스웨덴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이 없다.

※ 2013.6월부터 Facebook이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 투자 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2013.1월부터 과거 26.3%에서 22%로 인하)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반 개도국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비상장 주식이나 10%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 등

2) 지역 인센티브

-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및 외국 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50% 보조
 - 고용 보조금은 고용효과, 경제성장, 지역비즈니스 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건 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산정(첫 고용 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3년간 최대 120,000SEK~198,000SEK의 고용 보조금 지원 가능)

외국기업 투자동향

□ 투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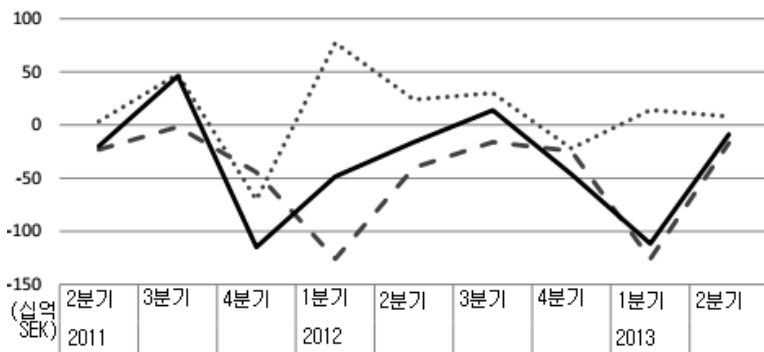
스웨덴은 인구 958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8년 371억달러의 외국인 순직접투자(투자액에서 환수액을 제외한 액수)를 유치하였으나, 이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2009년 100억달러, 2012년에는 다소 회복된 137억달러의 순직접투자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주식자본(stock) 기준으로 보면, 1990년도 126억달러에서, 2000년도 940억달러, 2012년도 3,762억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스웨덴은 해외투자금액(순유출액)이 최근 3년간 연간 200~330억달러 규모로 외국인 순직접투자액을 매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 2012년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335억달러(전년 대비 약 19% 증가)

[직접투자 동향]



가: 점선: 스웨덴 내 외국인직접투자, 굵은 점선: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실선: 순직접투자
 자료: 스웨덴 통계청, Betalningsbalance 2013, 2quarter

□ 산업별 외국인 순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크로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제조업	39,847	-28,212	34,898	52,125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1,766	4,978	-26,437	163
도소매업, 자동차 정비	16,117	-7128	3,244	6,277
운송 및 저장	6,221	2,928	863	538
정보 통신	-1,674	1,411	3,370	-2,539
금융 보험	4,633	25	-39,499	-22,036
부동산업	3,236	-3,739	-5,032	2,076
법률 과학기술 활동	-57	-	14,506	-
재투자	12,064	28,694	83,941	50,079
기타	-1,893	-6,222	25,649	22,627
총 계	76,728	-7,265	95,503	109,310

주: 마이너스(-) 표시는 투자 상한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표시.

: 연평균 대미 환율(1 US\$ = SEK): 6.58 SEK('08), 7.65 SEK('09), 7.31 SEK('10), 6.50 SEK('11), 6.81('12)

자료: 스웨덴 통계청

□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웨덴 투자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틱해와 북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스웨덴을 지역본부로 선택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 북구지역본부를 설립한 글로벌 기업으로는 General Motors(미), Ford Motor(미), Mitsubishi(일), Procter & Gamble(미), E.ON(독), Unilever(네), Royal Ahold(네), Volkswagen(독), Hitachi(일) 등이 있다.

□ 대 스웨덴 한국진출기업: 총 7개사(법인 6개, 지사 2개)

삼성전자 북구법인, LG전자 북구법인, 기아자동차 스웨덴법인, 대한항공 화물지사, 현대모비스 스웨덴법인, 한국타이어 스웨덴법인, 현대상선 북구법인, LS 전선 등

창업절차의 간소화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OECD 국가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다(창업 관련 절차 수 3건, 총 16일 소요)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50,000 SEK(약 7,550달러)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웨덴 회사등록청(Bolasverket)에 대한 등록비용은 법인설립 신고 시 2,200 SEK(약 330달러), 지사 설립신고시 2,000 SEK(약 300달러)이다.

임금수준(월급)

(단위: 스웨덴 크로나)

직위/직종	남성	여성
기업 경영 책임자	86,500	57,600
생산관리인	47,700	43,700
중소기업 관리자	36,300	31,600

직위/직종	남성	여성
컴퓨터 전문가	40,500	38,100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자	37,600	34,800
변호사	51,300	52,400
문헌·정보관리	28,700	27,800
전기기술자	28,700	26,000
보안 및 품질감독사	34,000	34,300
거래 중개인	31,700	29,600
행정책임자	32,500	28,700
비서	28,400	25,000
금융·세일즈	39,200	31,500
고객 상담원	23,400	22,900
가게 점원	22,000	25,600
청소원	21,100	20,700

※ 남녀의 직위/직종별 월 평균 보수로서, 사회분담금(고용주 부담, 총 보수액의 31.42%)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자료 출처: 2012년 스웨덴 통계청)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2%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 프랑스 33.33%, 이태리 31.4%, 독일 33.3%, 스페인 30%, 룩셈부르크 28.59%, 오스트리아 28%, 스위스 25%, 핀란드 24.5%, 영국 23%(2014년 21%, 2015년부터 20%), 덴마크 22%, 네델란드 20% 혹은 25%(수익 20만유로 이상일 경우 25% 적용), 아일랜드 18%, EU 평균 22.85, OECD 평균 25.32%(출처: FITA 2013, KPMG 2013)

한편, 스웨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도 있는 바, 비상주 외국기업이 스웨덴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5%, 여타 경우에는 대체로 15% 수준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지사가 이익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제외한 여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에게 송금하는 배당금의 규모도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동 기업이 영업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료 이익(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소득세(22%)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통상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 잡지 및 도서류, 상업적 체육시설·문화공연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치과 치료, 복지, 은행·금융서비스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가

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주로 거주지 지자체(Municipality)가 징수하며, 서울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1%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401,099 크로나(약 6.1만불) 이하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또한 연간소득이 이를 상회할 경우, 지방세와는 별도로 20~25% 수준의 국가 차원의 소득세도 납부한다.

한편,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1월 폐지되었다.

주요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 감면 혜택

□ 취지

스웨덴이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 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들이 스웨덴 내 체류기간 중(최장 3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 적용 대상

스웨덴 내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스웨덴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 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 전문 인력(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 내 IT, 신기술 응용분야 등) 및 스웨덴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을 구비한 외국인에 해당하나, 실제 적용대상 직종 및 지위는 인력수요에 따라 가변적이며, 세무당국이 판단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동 외국인은 스웨덴 기업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피고용인이어야 하며, 스웨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파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실소유자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스웨덴에 상주사무소(permanent organization 또는 establishm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스웨덴에 파견하였으나, 동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자회사(subsidiary)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보수금액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스웨덴 기업에서 업무하기 이전 5년간 스웨덴 내 거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감면 범위

상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실제 총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하며, 25% 부분은 소득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동 감면 조치는 보수 및 기타 혜택(perks)에 적용되는데, 기타 혜택은 주택 지원 및 생활지원 수당, 부임 및 이임에 수반되는 이사비용, 본국 휴가비, 자녀학비 등이 해당하며, 스웨덴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스톡홀름 또는 특별상여금에도 적용된다.

기타 세금은 스웨덴 국민과 동일하게 납부되나, 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총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기 감면조치는 동 외국인이 최장 5년간 스웨덴에 체류한다는 전제하에 입국하여 지정된 업무 개시 후 3년간 적용되며, 5년이 경과된 후 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동 감면혜택은 세무 관련 사항에 여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신청절차

고용주 또는 해당 외국인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스웨덴 국세청 내 담당부

서(Research Tax Board, Forskarskattenmnden)에 신청하며,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용주는 국세청에 동 외국인의 소득신고시 반드시 면세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조달

스웨덴 조달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5천억 크로나(약 750억불) 수준으로서, 스웨덴의 공공조달 관련 업무는 과거 조달청(Public Procurement Board)이 담당했으나, 2007.9.1일부로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으로 이관되었으며, 2008.1.1일부로 발효된 신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다.

이 외에도 EU 공공조달 지침상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

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할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2006.6월 EU가 제정한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 -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실시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형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r)와 공급자(supplier)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영을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부동산 거래규모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 제4위의 투자시장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는 부동산 취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상 및 비율은 사무용, 사무·상업 혼용 쇼핑센터 등 소매상가, 주거용, 산업용, 호텔 등 순이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 순이며, 유형으로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비상장 자산 회사, 기관투자자, 개인, 정부 순이다.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가 담당한다.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바, 현재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70%가 주로 스웨덴 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85%가 스웨덴 전문직근로자연맹(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및 스웨덴 전문직협회 총연맹(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에 가입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이 규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LAS: Employment Protection Law)은 스웨덴 내 적용되는 고용계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일원인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유

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Co-determination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게는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스웨덴의 피고용인의 사회보장비용은 고용주, 단체협약에 따른 보험, 피고용인 본인 등 3자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련법상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보수 중 연금, 건강보험, 기타 사회보장혜택의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분담비율은 전체의 31.42%이다.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민관 공히 환경보호 및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 노력이 활발한 국가이며, 최근에는 2020년까지 석유에 대한 의존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및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험한 대체재나 공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히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årdsverket.se)
-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
(Business Sweden, 무역투자위원회,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st.se)
- Working in Sweden(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Open Trade Gate Sweden(OTGS, www.opentradegate.se)

스페인

스페인 거시경제 지표(2012년 기준)

- GDP: 1조 3,494억달러(세계 13위)(출처: 세계은행)
- 1인당 GDP: \$29,195(세계 24위)(출처: 세계은행)
- 경제성장률: -1.4%
- 실업률: 25%
- 물가상승률: 2.4%
- 화폐: 유로(euro)
- 환율: 1유로=1.285달러(2012년 평균)
- 이자율: 0.75%(2012.7월 기준)
- 교역액: 수출 4,385억달러 / 수입 4,196억달러(2012년 평균환율 적용)
- 주요 교역상품
 - 수출: 자본재,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반제품
 - 수입: 에너지, 자본재, 화학제품, 식료품, 소비재

주요산업 동향

스페인은 2012년 기준 생산측면 GDP 중 서비스 분야가 71.6%로 가장 크고 제조업(에너지 부문 포함)이 17.4%, 건설업 8.6%, 농수산업이 2.5%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6년 EU 가입 이후 스페인 경제는 급성장하여,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소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특히, 관광분야에 있어서 스페인은 그간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관광객 유치국이었으나 2011년 5,670만명,

2012년 5,770만 명을 유치하면서 중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단, 관광수입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금융 분야에서 스페인은 유로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순이익 규모로 세계 4위권인 Santander 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도 고객수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의 Telefonica사를 보유하고 있는 등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인 자동차, 기계,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2012년에 스페인은 자동차 198만대(2013년 상반기 기준 115만대)를 생산, 세계 12위이자 독일에 이어 유럽 내 9대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현재 아우디, 포드, 닛산, GM, 폭스바겐 등 17개 자동차 메이커가 스페인 내에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동구권 국가의 EU 가입 이후 일부 생산설비의 동구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유럽내 조립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이 다소 흔들리고 있으나 관련 설비 및 R&D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Acciona사, 의류분야 세계 최대 그룹인 Inditex 뿐 아니라 낙농가공업의 Viscofa, 와인회사 Felix Solis 이외에 스페인어권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Oesia사 등 다양한 국제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관련 세계 5위에 위치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강국이다. 현재 스페인은 태양에너지 발전 세계 2위, 풍력발전량 세계 4위(유럽 내 2위)로 이 분야에서 Gamesa사, Acciona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스페인에는 1,055개의 풍력발전시설에 총 20,190대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사업은 미국과 호주에 이르기까지 세계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지지사 설립 또는 M&A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까지 스페인의 해외 직접투자 누적액은 6,272억달러로 세계 10대 투자국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스페인의 2011년도 해외 투자액은 355억유로, 2012년도에는 143억유로로 축소(순투자액은 -138억유로를



기록)된 바, GDP대비 총 해외 투자비율이 1.36%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의 해외투자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급속한 對중남미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투자액의 27.1%를 차지하는 등 투자 추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12년 다시 총 투자액의 46.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남미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임을 입증했다. 2007년의 경우 스페인의 對중남미 투자는 2006년 29.8억유로에서 약 2.2배 증가한 65억유로였으며, 주요 투자국으로는 브라질(29억유로), 멕시코(22.7억유로) 및 아르헨티나(4.7억유로)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12년 주요 투자국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다소 변경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對중남미 직접 투자액은 2011년 기준 중남미 전체 자본유입액의 14%를 기록한 바, 미국 및 네덜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07-2012년간 직접투자 누적액은 미국(39.1%)에 이어 22.4%를 차지, 제2의 중남미 투자국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금융권의 중남미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96년 스페인의 BBVA, Santander 은행은 아르헨티나 진출을 시작으로 1998년 멕시코, 브라질, 칠레 및 콜롬비아까지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2012년 Santander 은행의 對중남미 부문 수익은 50%(브라질 26%, 멕시코 12%, 칠레 6% 등)이며 BBVA 은행의 경우, 2000년 Bancomer 인수 후 2012년의 경우 멕시코에서 전체 수익의 25%를, 그 외의 중남미 국가에서 전체 수익의 24%를 거두어 들였다.

2001년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한 이른바 “탱고 효과”로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 중남미지역 경기 회복세로 인해 2004년도 스페인 최대 통신회사인 Telefonica는 미국 Bell-South사와 공동으로 중남미 지분을 대규모 매입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 2대 통신업자인 Netcom 지분을 인수하였고, 영국의 O2 통신사를 인수하는 등 국제화에 성공하였다. 2012년 Telefonica사는 전체 수익의 76%를 스페인 이외 지역에서 거두어 들였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전체 수익의 49%를 거두어 들였다.

스페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1997년 이후 해외투자액이 자본유입액보다 컸으나, 2009년 이래로 자본유입액이 해외투자액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현재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 수는 2,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미국의 포춘지가 발표한 2013년 세계 500대 기업에 스페인은 8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유로존 내 최대은행이자 중남미에서 가장 큰 금융 프랜차이즈 기업인 Santander와 멕시코 Bancomer를 인수한 BBVA 등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이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는 고객 수 기준 (316백만명) 세계 5위의 Telefonica사,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1999년 아르헨티나 YPF사를 인수한 세계 19위(Forbes지 기준)의 에너지 기업인 Repsol사가 스페인 기업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 86개국에 6,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Inditex그룹과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 Abengoa 및 세계 4대 풍력터빈 생산회사인 Gamesa 및 ACS, Global Via, Ferrovial 등이 세계적인 스페인 기업이다.

최근에는 동구유럽을 비롯한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스페인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2년도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이태리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12년 EU-27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체 규모의 38%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 정보 통신 및 정유, 의류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BBVA사는 중국 Citic Bank의 대주주이며 정유업체인 CEPSA사는 2007년 한국의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한 바 있다.

한·스페인 교역 동향

스페인은 2013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의 EU 시장 11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 기준으로는 8위에 해당한다(2012년 한국과 스페인은 각각 41위 교역 상대국). 우리의 EU시장 5대 수출대상국까지 올라갔던 스페인으로의 수출은 글로벌경제위기를 겪었던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간 교역은 2008년 전년대비 9.6%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39.6%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의 48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수출 확대보다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2010년의 경우, 상반기에 월드컵 특수와 디지털TV 보급 및 신차 구매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고르게 증가하여 수출 18.6억달러, 수입 9.5억달러 등 전체 교역량은 전년대비 7.7% 상승한 2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부가가치세 인상(2%p),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수출 증가세를 2011년까지 이어가지 못하였다. 2011년 스페인과의 교역규모는 7.3% 증가한 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전년수준인 18.6억달러에서 담보상태(0.1% 감소)를 보인 반면, 수입은 11.6억달러로 증가하여 무역흑자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2년에도 스페인 경제위기로 수출규모가 감소, 10.1% 감소한 16.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실업률 증가, 부가세 추가인상(3%p) 등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 부진 및 산업생산 감소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은 11.3% 증가한 12.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총 교역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은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흑자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역품목

2013년 3분기 현재, 스페인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전년대비 14.2% 감소), 휴대폰(0.8%감소), 합성수지(61.4% 증가), 자동차 부품(1.9% 증가), 타이어(47.2% 증가), 냉연강판(242.3% 증가) 등으로 일부 품목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에 따른 승용차, 무선전화기,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의 수출부진으로 인해 전체 수출이 감소하였다. 한편,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의약품(10.7% 증가), 광물(12.0% 증가), 윤활유(-47.1%), 합성수지(65.3%) 식물성 유지(13.1% 증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3국에서 가공되어 대 스페인 수입실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으나,

Zara, Mango, Camper, Adolfo Dominguez 등과 같은 스페인 의류 및 잡화 브랜드도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양국 투자 관계

한국의 대 스페인 투자(신고기준)는 2013년 2분기 기준 총 10.6억달러로, 같은 기간까지 스페인의 대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 9.9억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양국간의 투자규모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전자(삼성, LG), 완성차(현대, 기아, 쌍용), 타이어(한국, 금호) 업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점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물류창고업(한진해운 알헤시라스 화물터미널), 제조업(KPF, SK루브리컨트), 건설·엔지니어링(GS건설)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일 투자건 별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12대 중점 유치 대상국가에 포함되었다.

한편, 스페인의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을 비롯하여 패션브랜드 Zara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유통그룹 Inditex 등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는 2007년 경상북도 영양군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2012년 하반기에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인 Befesa에서 국내 제강분진 처리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Befesa의 모기업이자 신재생에너지 주요 기업인 Abengoa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스페인 다국적 석유기업인 Repsol은 국내기업(SK)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스페인 내 윤활기유 제조공장을 설립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무역정책

(1) 주무부처

1993.1.1일부터 EU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EU와 동일한 무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당 Aznar 총리 정부시 통상관광부를 경제부 산하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2004.4월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 출범시 다시 별도의 산업관광통상부로 분리하였다. 이후 2011.12월 Rajoy 총리의 국민당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투자를 관할하는 통상차관실을 경제경쟁력부 산하로 재편입하였다.

(2) 무역진흥책

수출촉진 및 장려책으로 1982년 수출진흥기구(INFE)가 설립되었고, 이후 1988년 대외무역청(ICEX)으로 동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각 지방 자치주 내 수출 및 투자진흥기관을 설립 운영 중이다.

스페인인은 과거 개발원조기금(FAD)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규 투자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2010.10월 개발원조 선진화 법인 개발진흥기금법(FONPPRODE)을 제정하여 개발협력에 있어서 상업적 이해관계를 차단한 바, 스페인 기업의 국제화 지원은 별도의 기업국제화 기금(FIEM)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수출보험공사(CESCE)를 통해 수출 및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스페인 대외통상정책은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와 같은 전통 시장과 EU, MERCOSUR와 같은 지역 공동체 가입 및 협력을 통해 통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및 인도 등을 경제·통상 중점 추진 10대 국가로 선정하여 수출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 대외무역청(ICEX)은 스페인 산업부문별 수출 강화 및 대외상품 이

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실시 중이며, 주요 내용은 부문별 진출전략, 전시회 개최, Brand Club 운영 등이다. 특히 전시회의 경우 종전 각국별로 순회 개최하던 자본재 전시회 Expotecnica 이외에도 Ex-poconsumo(소비재)를 신설, 격년으로 주요 거점 국가에서 개최하고 있다.

수입정책

(1) 관세제도 및 장벽

스페인인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은 관세와 쿼터 규제가 없으며, EU 비회원국가 수입 시 EU 공동관세(CXT)를 적용한다.

관세부과시 HS 분류방식을 기초로 EU 공동 통합 분류 방식인 CN 방식을 채택하며, 종가세 방식이 주도적이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혼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기타 EU 회원국가로서, EU 역외국 중 170여 개 개도국에 특혜관세(GSP)를 적용(2014년 중 GSP 수혜대상국을 80여 개국으로 축소할 계획)하고 있으며,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 통일, 중립된 체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7조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 5~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산 제품 및 수입제품에 21%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1.7월 한-EU FTA가 발효된 바,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일부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이 부과된다.

(2) 통관절차

스페인으로 물품을 운송 하는 경우,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Invoice, Packing List, B/L, C/O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며, 현지 바이어는 이를 통관 관세사에게 전달한다. 통관대행업체(스페인의 경우 물류업체와 통관업체가 별개인 경우도 존재)가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승인번호(DU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편물 발송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관부가세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록 샘플일 경우라도 스페인 내 시중가격을 적용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모든 B2B 거래시에는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세관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통관사가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경비 납부 후 통관을 기다린다. 만일 세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 관련법령 및 규정, 제출서류 및 진행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스페인어 검색은 <http://aduanas.cameras.org>

- 영어 검색은 <http://customs.camaras.org>

한편, 스페인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 시점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DDA, Depósito Distinto del Aduanero)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부가가치세를 일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혹은 EU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업체의 동 제도 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3) 수입규제 제도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4)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1225/2009/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격이 자국 내수가 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공동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5) 反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反보조금조치를 적용(EC no 597/2009)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

- 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6)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갑작스런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 by 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 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 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인증

CE 마킹제도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3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안전
 - 92/59/EEC(2001/95/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2013.9월 현재까지 29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며, A+, A++, A+++ 로 추가 등급 표시가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정부조달 및 국제입찰 제도

스페인 내에는 정부조달 및 민간입찰에 있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건이 없으며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계약법(LCAP 13/1995, 1995.5.18일 제정 및 3/2011, 2011.11.14일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 내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구매기관은 없으며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기관 등이 독립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입찰 공고는 최소 28일 이전 스페인 관보(Boletín Oficial de Estado <http://www.boe.es/anuncios/anboe.php>)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의 경우 해당 재산권 소유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인정한다. 작품이나 저작물을 창작하는 때부터 인정이 되며 신청 즉시 등록한다. 등록 처리 기간은 보통 4일 정도가 소요되며 스페인저작자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스페인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 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스페인 저작자협회

- <http://www.sgae.es>
- 관련법령은 지식재산권법 1/1996(1996.4.12일)으로 관련조항은 2001/29/CE(2001.5.2일, EU)이다.

스페인의 투자유치 정책

투자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규로는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법률

인 법령 1816/1991(1991.12.27일), 후속개정령 42/1993(1993.1.15일), 1638/1996(1996.7.5일) 및 현행개정령인 1360/2011(2011.10.7일)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Royal Decree) 671/1992(1992.6.2일), 664/1999(1999.5.4일) 및 현행개정령인 Resolucion 11144(2010.7.1일)가 있다.

2013.9.19일 창업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스페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스페인 거주비자(Visado de residencia)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2백만유로 이상의 스페인 정부 채권 매입, 1백만유로 이상 스페인 기업 주식 매입 혹은 스페인 금융기관 저축 등의 초기 투자
- 50만유로 이상의 스페인 부동산 취득
- 고용 창출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스페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Autorizacion de residencia)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거주허가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 투자거주비자 만료 이전, 혹은 만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
- 투자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스페인 방문
- 최소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

투자유치정책 기초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 우선권부여, 지역별 균등발전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첨단산업,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투자 적극 유치, 對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강화 등 투자유치선의 다양화 노력, 중앙정부 이외 각 지방정부별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주도, EU 규정에 부합된 각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 2011년의 경우, 對스페인 해외총투자는 247억 유로, 순투자는 205억유로를 기록한 반면, 2012년의 경우 유럽발 경제위기

로 인해 해외총투자는 전년대비 38.1% 하락한 184억유로, 순투자는 109.5% 하락한 -24억유로를 기록했다.

OECD에 의해서 실시되는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규제지표(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서 0.021점(0에 가까울수록 개방적인 경제)을 기록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56개 조사국 중 7번째로 개방적인 환경을 가진 국가로 나타났다.

투자정책 총괄 기관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제 폐지로 일반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감독기관은 없으며 투자제한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는 경제경쟁력부에서 투자정책 수립을, 각 지방정부 및 지방개발기관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아래와 같다.

* (투자정책 및 총괄기관)

- 담당기관: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통상투자국”
- 역할: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연락처
 - 주소: Paseo de Castellana, 162, 28046, Madrid, Spain
 - 전화: 34-91-349-3656
 - 팩스: 34-91-349-6008

외국인 투자제한

스페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나,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 664/1999에 의해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안전·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즉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쟁

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의 투자 및 EU 非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의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사전허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계획서를 무역·해외투자정책국에 제출,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회신한다. 6개월 내 허가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에 명시된 기한 내, 혹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6개월 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 허가는 취소된다.

기타 장벽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3년 초까지 양국의 국내 비준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재 상사 및 교민들이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부분 5년 이내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우리 지상사원 및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우리 국민 연금과 스페인 사회보장비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스페인 진출 우리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되어 왔다. 2012.9월 우리측은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스페인측도 2012.12월 국내절차를 완료한 바, 2013.4.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스페인 진출 우리 기업의 관련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최대 35년간 근무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1.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조기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년에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에 근거,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허가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년, 65세 이후: 5년 유효).

개선 실적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2013.4.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상사 주재원 비자발급)

스페인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은 본사 발령 후 법적 체류문제 해결시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경유하여 비자신청(2~3개월),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2~4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노동(취업)허가: 2~4개월
- (장기)비자: 1개월 이내, 동반가족의 경우 3~5개월
- 체류허가: 45일 이내

스페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재외공관 및 영사관을 통해 신청·발급한다는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도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획득한 이후 스페인에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기업이 출국에 임박하여 외국발령을 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자취득 이전에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 취득시 애로점으로는 반드시 주한 대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성인의 경우 예외가 없으며, 동반 자녀의 경우 수령 시에만 부모가 대리 수령 가능),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이며, 이 중 특히, 최근 5년간 거주국에서의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페인측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투자진출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를 감안, 가족 대표자에 의한 대리 신청 및 수령, 무범죄증명서 제출요건의 완화, 체류기간 연장시(비자취득 후 1년 기간의 체류기간 부여, 이후 외국인사무소에서 갱신 필요) 우편신청 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스페인 당국은 2003.12월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이민 통제강화 및 EU 전체에 해당하는 이민정책 준수를 이유로 특별대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당분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스페인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거주증 신청 급증의 여파로 상기 상사주재원 비자발급신청 요건 중의 하나인 스페인 내 노동허가서 발급이 무려 1년까지 장기화에 따라, 대사관이 주재국 외교부 영사국, Invest in Spain, 노동당국 등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는 한-스페인 상호주의에 의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대부분 EU 국가들의 공통된 비자정책을 감안, 사전발령을 통해 한국 내에서 비자 취득을 완료한 후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이 파견 이후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또는 우리국적 원양어선 어획 수산물을 스페인에 수출할 경우, 수출업체가 스페인 수산물 수입업체에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를 송부하나 스페인의 검역당국은 우리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의 지부장 서명 및 대결권자의 서명 진위 여부 확인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측은 EU위생증명서상의 지원장 서명 및 대결권자 서명 리스트를 주 스페인대사관에 송부하여 스페인 보건사회복지평등부에 전달하여 서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검역당국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회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영국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2011년말 기준 총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1% 수준인 반면, 순수 제조업의 비중은 10.9%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창조 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GDP 규모(억불, 2012, IMF): 미국 156,848, 중국 83,584, 일본 59,597, 독일 33,996, 프랑스 26,129, 영국 24,352, 한국 11,296(15위)

영국은 현재 세계 7위 수준의 무역국가이다(한국 8위). 국내 총생산 대비 교역규모의 비중이 약 62% 수준으로 대외교역 지향 국가로 교역비중이 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중에 있다.

※ GDP 대비 교역규모(% , 2009~2011, WTO): 한국 106.5, 독일 89.4, 영국 61.6, 중국 53.1, 프랑스 57.2, 일본 29.8, 미국 28.5

영국 정부는 균형된 경제(balanced economy)를 목표로 케머론 현 정부 출범 이후 G20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Tax System) 마련을 목표로 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0개 국가를 고성장 시장으로 선정, 이들 국가와의 무역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힘입어 영국



의 총수출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2/4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4.9% 증가한 784억 파운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상품수지 적자도 전분기 대비 6% 감소한 249억 파운드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12/13 회계연도에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국이 되었다. 동기간 영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25억 파운드 규모, 프로젝트는 1,500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일자리 6만개를 창출했다.(모든 프로젝트 완결시 약 11만개 추가 창출 예상)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약 54%가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져, 유로존의 대영투자는 전회계연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로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도피성 투자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내 경제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27개국 재정통합안에 영국 혼자 거부권(비토)을 행사한데 이어, 세계 금융거래의 절반을 점유한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문제에 있어서도 거주와 노동의 자유 원칙에 따라 EU출신자들에 대한 자국유입을 제한할 수 없는 영국정부는 2013년 말부터 무제한 입국이 허용되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이민자 대상으로 영국이민 재고를 호소하는 광고 캠페인 운영중으로 타 EU 회원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사고 있다. 현 케머론 정부는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시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스마 TV시장에서 연이은 판매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나 2012.10.1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등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래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 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교

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 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정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 등 일반 비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규제 제도

수입규제 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

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덤핑관세 조치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E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어느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접수하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EU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덤핑으로 간주
- ②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 ③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와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조치

EU는 WTO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과 통합,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하는 역외국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치, 즉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해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역외국의 수출 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과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여부
- ② EU 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여부
- ③ 역외국으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제품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 경우
- ④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상계관세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와는 달리, EU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하는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입제한 조

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정을 통하여 군 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해당 품목들은 EU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들은 유럽 공동 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EU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해당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적대국, 테러 지원국, 무정부 상태의 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시리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검역관리 규정

EU는 생태계 교란과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일부 동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비롯해 120여종의 식물과 200여종의 동물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 수입규제 동향

영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EU에 요청한 사례가 전무하다. 2013.10.11일 현재,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 또한

전무하나, 다음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 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조사 중	반덤핑 관세	Steel Wire Ropes and Cables(2012. 06. 26) Steel Ropes and Cables(2012. 01. 27)

한편, EU 집행위원회(EC)는 2012.1.31일부터 삼성전자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기술이 1998년에 국제표준이 됨으로써,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FRAND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애플과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타사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FRAND 위반 혐의로 제소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3.9.27일, EU측에 시정 방안을 제출해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EU집행위원회는 이후 수개월간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증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관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제 등에는 종량관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도 부여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EU는 한국과의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2011.7.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이에 따라 발효 즉시 약 80%에 달하는 교역품목에 대해 한국과의 수출입시 발생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발효 5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다만, 2017년으로 예상되는 영국 국민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될 경우, 한-영 양국간 교역은 FTA 특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usinesslink.gov.uk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는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심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주요 인증제도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 의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지침 사례

대상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정과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하여야 함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일반 제품안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92/59/EEC 지침에 의거하여 시판 되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짐
- 환경 규격
 -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소음발생기 준을 준수하여야 함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인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0.5월말 현재 26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 세제, 비누/ 샴푸/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 용지와 그래픽 용지, 티슈 페이퍼), 서비스 (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

KITE 마크 제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www.kitemark.com 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규제개혁부(BERR)의 후신인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국의 1977년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 동안 인정하고 있으며,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특허조약 가맹국이고 특허협조 협약의 비준국이다.

유럽 지적재산권 법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체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유형의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라야 한다.

상표는 7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14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산업 디자인도 1949년 의장 등록법과 1988년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술)특허 신청 절차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하여 필요 시,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 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파운드가 부과된다.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개월 동안 무료 임시 특허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에 필요한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비용은 130 파운드이다.

그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기술 평가단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3~7개월 이내에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의미한다.

공개 열람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10/7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특허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비용은 70 파운드이다.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며, 매년 납부해야 한다.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http://gb.espacenet.com/>)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영국 특허 외에 EU와 세계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디자인 등록 절차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신청료는 60파운드이며(섬유제품의 디자인은 35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should.htm>를 참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1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차원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하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pplication Form DF2A’(<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apply.ht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한 후, 수수료 60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와 디자인 도해 1부를 첨부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에 송부한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이 발급된

다. 그 후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심사를 통하여 결과를 받는다.(신청 접수 후 두 달 이내)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에는 2달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획득하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자동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에 각각 게재된다.

통관 및 운송

일반 통관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제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영국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 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WTO와 EU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입허가 신청 절차

영국의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산 상품과 역외산 제품의 수입통관으로 대별되나, 통관 양식은 동일하다.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SAD 양식
- Health Certificate
- C105a, 105b, 109a 양식
- Commercial Invoice
- B/L
- Payment form(L/C 사본 등)

농산물 중 산동물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Checks)에 의거하여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과 식품, 어류 등은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검역 조치를 취한다.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 검역증)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한다.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의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다.

영국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이다. 그러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기록도 수용한다. 수용 가능한 통상적인 서류는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탁송 기록(전산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 등이다.

수입 신고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주로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영국의 관세제도는 EU의 관세제도와 동일한데, EU 회원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에는 공동 농산물정책(CAP) 규정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며, EU 역외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영국의 관세율표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영국 정부는 1999.6월 식품기준법안(Food Standard Bill)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1999.11월 영국 의회의 승인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통하여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공포하였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기준법의 일반적인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염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은 유통, 보관, 보세지역, 소매, 판매, 도매 등 어떤 단계나 시점에서든 안전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식품표시 규정

식품표시 규정은 식품기준청의 식품표시 소비자 보호부에서 관장하는데,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식품명은 명칭 또는 종류가 될 수가 있으며, 사업체명, 브랜드명, 또는 기타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식품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입신고 방법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영국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2,270억파운드 규모로 정부지출 약 6,600억파운드의 약 34%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공공조달을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자들과의 재협상 및 범정부적으로 소요되는 상용물품에 대한 일괄 협상(주로 Framework 계약)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절감 외에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계약대상을 분할하고 정보제공 확대, 하도급 기회 제공,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초부터 조달공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NHS는 2009년부터 조달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쇄신, 전체공급물량의 90% 이상인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또한 EU 공공조달지침과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므로 일정 한도액 이상의 조달건에 대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문화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이라 할 수 있는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써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인 경우 제안서 제출후 협상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공공조달지침(2013년말 최종안 도출 예정)이 조달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EU 지침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조달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하나의 조달건이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내지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내 기업설립은 명목상 출자금 1파운드로 가능하며,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거의 무료로 1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는 물론, 양질의 현대적인 산업 부지도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설비를 신속하고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도 보유하고 있다.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보조금과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인센티브가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에 대하여 비록 개별적인 근거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룹 내 한 기업이 낸 이익을 그룹 내 다른 기업이 낸 손실로 상쇄할 수 있다. 과학 연구공제(SRA)는 건물, 공장, 기계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처음 1년 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계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감소 원칙에 따라 1년에 25%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국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세계 외환거래의 32%, 주식거래의 45%가 런던에서 이루어져 세계최대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런던이 세계최대의 거래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비철 금속(80%), 원유(50%), 탄소배출권(92%), 현대미술품(55%), 유물/골동품(35%), 도서(25%), 음악(32%), 상업선박(30%), 해운(60%) 등이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 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은행 수만 보더라도, 파리의 280

개, 프랑크푸르트의 250개에 비하여 런던에는 70개국의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에서는 유럽 본토로 향하는 선박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도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100곳 이상의 유럽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249명 이하인 기업들이며, 영국기업 총수의 99.9%를 차지하며, 25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룹 형태의 기업은 모기업과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회사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대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25%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R&D로 인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유무와는 무관하게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의 모기업과 영국에 위치한 자회사 간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국 내 자회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히 12개월 이내에 소요된 R&D 비용이 최소한 1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세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 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됨.
- 토지매입을 제외한 R&D 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중소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50%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감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으로부터 현금환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R&D 비용 100파운드 당 최대 24파운드까지 환불됨.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됨.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은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다.(투자 제도, 투자 촉진 기관 등은- III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 기간은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제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인지세율(최초주택구입자)
£ 125,000 이하	0%	0%
£ 125,001 ~ £ 250,000	1%	0%
£ 250,001 ~ £ 500,000	3%	3%
£ 500,001 ~ £ 1million	4%	4%
£ 1million 초과	5%	5%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http://www.scotland.gov.uk>
- 북아일랜드: <http://www.dfpni.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면 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

외국인이 영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 1비자, 숙련근로자(skilled workers)를 위한 Tier 2비자, 일시노동자를 위한 Tier 5비자 등이 있으나 통상 비EU주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T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 1 비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이(Exceptional Talent)나 기업가(Entrepreneur, Graduate 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등에게 발급되며 Tier 1(Exceptional Talent)는 왕립협회, 예술진흥회, 학사원, 왕립미술원의 추천이 필요하며 연 1천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술인력을 위한 Tier 2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되며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 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 2비자의 경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10일 목표) 결정되는 급행제도(Tier 2 priority applications)가 있으나 1일 신청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로 큰 수수료 부담이 있다.

일반취업 비자인 Tier 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번호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

다. 연봉 15만2,100파운드 이상인 경우는 상관 없으나, 동 금액 미만 근로자의 경우 현재(2013.4.6~2014.4.5) 연간 비자발급 허용인원이 2만7백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취업비자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점수제(points-based system)의 의해 결정되는데 Tier 2 비자의 경우 스폰서십 증서 획득, 잡오퍼 소득, 영어능력, 재정증명 등으로 구성되며, 영국회사의 스폰서십과 함께 속성(Attributes: 스폰서십 및 소득)에서 50점, 영어능력에서 10점, 재정증명(Maintenance)에서 10점을 최소 득하여야 한다.

Tier 5 비자는 예술·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활동, 워킹홀리데이(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내 일시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발급된다.

조세제도

2005.4.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과세 년도: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 과세 대상: 영국 내 소득 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 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자영업자는 SA Form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배당 소득세
0 ~ £34,370*	20%	20%	10%

주: £2,710 이하는 예금 소득세 10% 적용

- 회계연도 2012/13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8,105파운드
 - 65세 이상인 개인은 더 높은 비과세 소득에 적용됨.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09	2010	2011	2012
Small Companies Rate*	21%*	21%*	20%	20%
Small Companie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Marginal Small Company Relief(MSCR) Fraction	7/400	7/400	3/200	1/100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8%*	28%*	26%*	24%*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음.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함.
- 영국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 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함.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 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함.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10.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국내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이후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노무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안정소(Job Centre), 전문직업 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 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 종료 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함.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최저 급여(Minimum Wage)

대상	최저 급여(2013년 10월부터)	비고
21세 이상	시간당 £6.31	21세 이상
18세 ~20세	시간당 £5.03	18세 ~20세
16세 ~17세	시간당 £3.72	16세 ~17세
건습생	하루당 £2.68	19세이상 경우, 첫째만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된다. 포함되는 혜택으로는 유급 병가, 연금 등 있다.

출산, 육아관련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10.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동차, 육아 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4.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절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5) 고용계약 종료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270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8,100파운드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6)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8)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0	2011	2012	2013(9월)
고용인구 (16~64세)	29,157,000명	29,170,000명	29,600,000명	29,840,000명
고용률	70.5%	70.5%	71.2%	71.6%
주간 총 노동자 근무시간	919.6백만 시간	921.8백만 시간	934.9백만 시간	946.2백만 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2,529,000명	2,510,000명	2,510,000명	2,490,000명
실업률	8.0%	7.9%	7.8%	7.7%

노동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도 가입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을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7.9일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수입

1995.1.1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



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증명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 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93/68/EEC
폭발 제품(Pyrotechnic articles)	2007/23/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효율규정	92/42/EEC, 93/68/EEC, 2004/8/EC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98/79/EC, 2000/70/EC, 2007/47/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93/42/EEC, 93/68/EEC, 2007/47/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2009/23/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93/68/EEC, 93/95/EEC, 96/56/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품목	규정 지침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여가용 선박	94/25/EC, 2003/44/E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측정기기	2004/22/EC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2.7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Ecolabel-Eup project(washing machines, refrigerators)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회사(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

방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우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주로 연방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 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O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급이 바람직

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 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

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는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현재 EU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의 범위에 따라 회원국에 국한된 방법과 EU 전체 차원에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즉 보호범위를 회원국에 국한하려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럽특허청이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대부분의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국가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 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 협정(2008.5월 발효)이라는 정부간 협정

을 맺고 협정국간 특허 내용의 자국어 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특허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동 협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
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
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
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
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
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장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
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프라 스트럭처,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 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 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유럽연합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다.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류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단,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권리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997.1.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한 차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유화를 실



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상품규제지수(PMR)는 2008년 기준 OECD 평균 1.34 수준으로, 주요 비교 대상국인 네덜란드(0.97), 덴마크(1.1), 핀란드(1.2), 스위스(1.3), 스웨덴(1.3)에 비해 높으며, 회사 등록 절차 수, 등록 비용, 소매무역업 관련 승인 회수 등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기술되었다.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정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외환 거래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2.4-4.9% 수준인데, 2011년 중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출금리는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2012년에도 이어졌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아 왔다.

同 금융위기 및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실 우려로 인해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해외송금 및 환전

기본적으로 해외자본 도입, 수익 송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대외송금 및 환전에 제한이 없다. 단,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서 통계 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한-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10.1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1.23 서명)」이 발효됨으로써 5년이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이다.

체코

우리나라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 기계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체코로부터는 자동차부품, 전자응용기기, 기계류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체코 투자현황(수출입은행 통계)은 2013.6월 현재 현대자동차, 성우하이테크 등 총 14.5억달러 규모이다.

체코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년	2012
국내총생산(GDP)	US\$ 1,984억	US\$ 2,162억	US\$1,963억
실질경제성장률	2.3%	1.8%	-0.9%
소비자물가상승률	1.5%	1.9%	3.3%
실업률	7.3%	6.8%	7.0%
총외채(년도말)	US\$ 761억	US\$ 895억	US\$ 906억
수 출	US\$ 1,140억	US\$ 1,385억	US\$1,566억
수 입	US\$ 1,112억	US\$ 1,332억	US\$1,407억
무역수지	US\$ 28억	US\$ 53억	US\$1,592억

자료원: 체코 통계청/중앙은행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체코의 관세분류 방식은 HS SYSTEM으로, 관세 부과 방식은 종가세가 대부분이며, 화학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크게 일반관세율, WTO 협정관세율,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 협정)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세율, 그리고 면세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관세율은 체코에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적용하며, WTO 협정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세율로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되고, 체코에 MFN 대우를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며 평균 관세율은 5%이다.

이외에 최혜국 대우 관세율의 50% 내외를 적용하는 개도국 관세율도 있으며 원자재, 광물, 염료 및 서적 등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제품(HS 1-24류)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EU산 제품의 체코 수입관세율이 2004.5.1일 체코의 EU 가입과 동시에 무관세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對체코 주력 수출상품들과 EU산 제품 간 관세율 격차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품 혹은 반제품이 체코 내 10개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거나, 가공 후 재수출을 위해 반입되는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반입이 허용되며, 제품가공 및 부산물 처리 조건 등은 세관당국의 승인 사항이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후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체코 국내산과 동등하게 부과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15%(주로 식품류 등 생필품) 및 21% 두 종류가 있으며 과학조사, 교육, 연구 활동, 의료 활동, 종교적 활동 그리고 특혜관세, 관세연합이나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국제적 협의 사항으로 관세 면제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2011.7.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전면 개방된 업종으로는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있으며, 조건부 개방 업종은 광업, 일부 제조업(석유 정제품, 전기, 가스, 증기, 온수의 운송 및 유통), 일부 서비스업(교육, 금융, 사업, 운송 서비스 등)이 있다. 비개방 업종은 어업 및 양식업, 일부 제조업(전력 및 기체연료의 생산, 운송, 유통), 일부 서비스업(일부 사업서비스, 고등교육서비스, 일부 의료서비스, 일부 운송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등)이다.

수입부과금

자유유통 통관절차를 받은 제품, 역수입된 제품, 체코 내 임시유통 통관절차를 하는 역수출 제품 등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과금, 물품세 등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국내 생산품에 부과되는 것과 동등하게 부과되는데 체코 내 임시유통으로 수입된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자국 내 잔류기간이 최대 33개월까지로 월별, 일별로 자유유통 통관절차를 받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3%이다. 이외에 연료, 윤활유, 리크르, 맥주, 와인, 담배류 제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통관절차

체코 관세법에 따르면 자유유통을 위한 상품 출하, 수출, 운송, 세관 보세구역 장치, 반입 절차, 세관 통제하 통관절차, 잠정 반입 허용 및 반출 절차 등 8단계의 통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체코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상업 송장, 선하증권 및 수출신고서를 체코 세관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상은 매 상품별로 원산지 증명서 혹은 검역증명서 등 관련규정 부합서류를 제출하고, 상품 운송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세관 은행구좌에 납부하거나 상업은행, 보험회사 혹은 세관이 인정하는 기관 발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각 지역 세관이나 국경지역 세관에서 실시된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당국으로부터 간이통관절차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 대신 특정 장소에서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간이통관 절차 신청자는 신뢰받을 만한 세관기록과 통관상품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2004.5.1일 체코의 EU 가입으로 체코는 EU회원국과 국경을 같이 하게 됨에 따라 상품검역은 비EU 국가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 이외의 경우 수입업자는 상품이 최초로 도착하는

EU국가와 체코 중 어느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칠지 결정하여야 하며, 통관국가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수입규제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 관련 제품, 스포츠용 충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특정 민감기술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여타 서구 국가들과 같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동·식물, 프레온, 체코 내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등은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반덤핑 조치

EU 가입으로 체코는 개별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외국산 물품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당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방식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설명서는 체코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 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labeling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체코 내 부가가치가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Czech Made”마크 부착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공공구매 및 입찰 절차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관련 법령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공공구매란 중앙정부 부처, 정부 행정기관, 지방 정부기관, 최고 법원 및 법원 등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외국기업들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5.1일 발표됨으로써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체코 관련법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동 법은 EU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있다. 체코는 200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을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이 각각 발효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중이다.

서비스 장벽

유통구조

체코 내 유통단계는 2~3단계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1단계가 생략된다. 수입·도매업체는 소매업체의 소량주문 수용을 위해 보세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마진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프라하 및 주요지방도시에는 백화점이 있으나 백화점 수가 아직 적어 전체 유통분야에서의 백화점의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며, 최근 서구의 유통업체들이 대형 하이퍼마켓(테스코, 마크로 등) 형태로 체코 유통업계에 대폭 진출하고 있어 유통분야의 확대 및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체코인들이 보다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이러한 대형 하이퍼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에는 이들 하이퍼마켓들이 영업시간을 점차 늘리고 있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도 생겼다.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체코는 체제전환 및 슬로바키아와의 분리이후인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1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1993~2012년 총 누계 990억달러: 체코중앙은행) 특히, 1998.5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국영통신회사 매각 및 제조업투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117억달러를 유치하여 달러화 기준 최대를 기록하였다.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06억달러로 자동차 산업 분야에 폭스바겐의 스코다자동차에 대한 7억달러가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2년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외국인 기업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관심도 증가와 더불어 2012.7월부터 발효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의 결과로 해석된다.

대체코 최대 투자국은 독일(214억달러)과 네덜란드(150억달러), 오스트리아(141억달러) 3국이 2012년 누계(990억달러) 체코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990억달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진출환경

체코는 여타 중·동부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공업기술 및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0.5월 외국인 단독투자, 투자자본의 대외송금 자유화, 과실금의 제한적 허용(이익 유보금 이내) 등을 골자로 한 신흥작 투자법 발효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바 있다. 투자분야도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체코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려 온 인근 폴란드 및 헝가리 등과는 달리 그간 투자 인센티브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으나, 1998.5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체코 정부는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액 규모 하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인센티브법을 2000.5월 제정하였으며, 2002년 초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를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지난 2007.7월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하면서 △투자규모 △창출 일자리 수 등 제조업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고급인력이 필요한 IT기업 및 R&D센터 등 하이텍 산업 유치 중심으로 선화하여 기존 제조업 지원 규모를 대폭 낮추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 조건을 완화하였다.

2012.7.1일부터 적용되는 신투자인센티브 법은 신규투자나 재투자 외에도 테크니컬 센터와 전략서비스 센터에도 투자인센티브가 적용되며 법인세 면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을 골자로 한다. 對체코 투자의 장점으로 먼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서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프라가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전통적인 공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적절한 임금수준 및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인구가 1천만명 정도로 시장규모가 작고 19%에 이르는 법인세 및 종업원 급여의 34%에 달하는 사회보장세 등 세금부담이 과다하다는 점과 최근 급격한 외국인 수의 증가로 인해 현지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유망 분야로는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컴퓨터 및 가전제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체코를 생산기지로 하여 인근 독일 및 중부 유럽을 상대로 한 내구성 소비재 생산이나 체코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관광, 서비스 업종 그리고 산업자동화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체코는 자유화되면서 공산화 이전 토지 소유주들에게 소유관계 입증 시 토지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가 많아 대상 부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방정부 추천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조성된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안전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지 가용 노동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체코인들은 고향을 잘 떠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문제 등으로 직장을 위해 이주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장 인근에서 노동력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투자 예정지의 인력 채용 용이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수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 대상지역의 투자인센티브를 사전 조사하여 정확한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체코 정부의 하이테크 및 고급인력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자인센티브법 주요내용>

1) 인센티브 종류

- 법인세 면제(신규투자기업은 5년, 기존기업의 추가투자는 5년 부분 면제)
- 종업원 훈련 및 재교육 보조금 지급
- 고용창출 보조금 지급
- 입지 우대조치(유리한 가격으로 국가 또는 시의 공유지 매각)
- 자본투자에 대한 현금보조금

2) 인센티브 수혜자격

- 신규 생산시설의 건립 또는 현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한 투자여야 함.
- 최소투자 규모는 지역에 따라 CZK 5천만~1억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 자본은 50% 이상이 되어야함.
- 총 투자액의 최소 50%는 기계설비에 투자하여야 함.
- 상기와 같은 조건이 투자인센티브 수혜 후 3년 이내 충족

투자진출절차

체코 내 외국인 합작투자(100% 투자 포함) 기업 설립에 있어 체코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상법에 의거하여 회사 등록 절차는 마쳐야 한다.

체코 외환관리규정에 따르면 투자지분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투자지분에 대한 대정부 보고의무 또한 면제되고, 투자지분의 해외 외국환 은행예치도 허용되며, 과실 송금도 자유롭다. 아울러 체코 상법은 외국인 투자(100% 투자 포함) 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회사 등록 시 구비서류로는 회사명, 주소지(개인의 경우 거주지), ID No.(최초 설립의 경우 불필요), 업종, 회사의 법적 형태, 대표자명 및 주소, 지사에 관한 사항, 법적 대리인, 합작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지, 주식회사의 경우 토지자본 규모, 합작회사의 경우 자본금 및 투자가별 지분 등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며, 체코 투자청(Czech Invest)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공장설립

체코법은 외국인들이 체코 내에서 체코인들과 동등하게 기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은 기업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체코인들과 합작설립하거나 혹은 기존 체코업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도는 없다.

체코 상법에 따르면 합작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조합 등이 법인체로 인정되고 있는데 외국기업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며, 주식회사의 경우 프라하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구획법 정리법(Zoning Law)이 적용되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규 건축허가 이외에도 보건, 위생, 환기, 하수 처리 등에 대한 많은 지역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8.6월 체코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 구획정리 및 건축허가 과정을 단순화한 바 있다. 명확한 토지소유 획득이 쉽지

않은 것은 이전 소유권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취득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체코 내 부동산 구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02.1.1일 이후부터 체코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기업은 농지 및 산림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9.5.1일부터는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2011.5.1일부터는 농지 및 산림지 구매 제한도 없어졌다. 국가소유 토지가격은 위치 및 크기와 관련한 일련의 변수들을 감안하여 재무부가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하 및 여타 대도시(인구 10만명이상)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다. 국가소유 토지매각 승인도 재무부 담당이다.

외국인 투자제한

체코는 1995.12월 구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 되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동등 대우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한 등에 대한 OECD 기준을 따르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내국인 투자가들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는고 있다. 이외에 국가별로 상호투자 보호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투자가 보호된다.

체코의 모든 산업 분야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군수업, 금융·재정분야, 보험, 방송, 미디어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단,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등록절차 필요), 건축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들은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기업의 지사는 체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체코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 회사설립, 합작투자, 기존기업의 인수 및 판매활동 등 체코 법인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 내부 활동에도 적용된다.

금융업 등 일부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지사형태로 영위할 수 없다. 지사는 영업지사와 비영업지사의 두 가지 종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금 적용에만 차이가 있고 등록절차는 동일하다.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지사 설치 신청서에 지사의 향후 활동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 신청을 위해서는 지사장이 임명되어야 하며, 지사장은 체코인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다. EU 국가 이외 외국인의 경우 지사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체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사의 향후 활동내역 및 최초 지사장을 명기한 체코 내 지사 설립을 승인한 본사 이사회 등의 공증된 결정문
- 영업내용이 명기된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등 본사 설립 근거 서류
- 체코 영업 허가서(Trade License Office)에서 발행한 영업허가서
- 지사장의 공인사인 증명서
- 지사장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내 범죄경력 증명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공인된 사본이어야 한다. 체코 내에서 고용된 모든 외국인들은 체코 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체코 내에 고용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고용주가 발급한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코 내 거주 허가 또한 취득하여야 한다. 체코 내 거주 허가는 재외 체코 대사관에서 발급한다.

세제상의 제한

체코의 조세제도는 서구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 또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주요 직접세를 보면 소득세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15%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금 공제 항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는 납기별로 부분 납부 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금융위기로 잠정 중단된 단계적 법인세 인하가 재시행 되어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19%이다. 법인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되며 유형고정자산은 균등 감가상각 혹은 가속 감가상각 중 한 가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감가상각 기간 중 이 두 가지를 혼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 기간은 3~50년이며, 예금 이자 소득 및 배당금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25%의 특별세가 공제된다.

체코 내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토지세는 형질, 위치,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건물세는 시장가격이 아닌 건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달력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에 대해 사전 부과된다.

도로세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개인 용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세율은 연간 고정세율로 계산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트럭의 경우 차축 수 및 중량에 따라 계산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연간 사용이 가능한 고속도로 통행 스티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세 및 증여세는 해당 피과세자의 친족 정도에 따라 0.5~20%가 부과된다. 2008년부터 직계 존비속 및 방계 친척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고 있다. 이외에 많은 행정 수수료 및 지방세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직접세 형

태로 징수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과세 가능한 체코 내 모든 상품 및 용역(수입품 포함)에 대해 부과되는데 기본 세율은 21%이며, 15%의 할인세율은 대부분의 서비스 및 식료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며 세금 환급 가능성도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연간매출액 3백만 크라운(약 158천달러)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1개월 혹은 분기 단위로 납세를 해야 한다.

소비세는 탄소연료 및 윤활유, 주정 및 주류, 담배, 맥주 및 포도주등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과 수량에 따라 다르다. 수출업체는 과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이전 세금은 부동산 가액의 4%(Czech invest 2013)로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납부하며, 이외에 공해세 및 폐기물 저장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외환관리제도

체코의 외환관리는 1995.10.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크라운화의 완전 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거래의 완전자유화 및 자본거래의 일부자유화가 실시(IMF 8조국)되었으며 내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완전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구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획득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체코 수입업체들의 수입대금 결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EU역내 기업간 거래에는 T/T가, 역외 기업간 거래에는 L/C, D/P, D/A등이 사용되고 있다.

EU 가입 이후, 많은 외국계 은행이 현지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도 체코에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현지 금융조달이 가능하다.

기타 장벽

체류비자

주재원의 체코 내 장기 체류 비자기간은 통상 1년(최초비자는 6개월)이며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비자를 받아온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거쳐 영주권이 부여되는 자격이 생긴다. 영주권의 사증기간은 5년, 10년이며 계속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체코정부는 한국 등 주요 투자국가 기업들의 주재원 등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간편화를 위한 Green Card, Blue Card 제도를 2011년 이후 도입하였다.

장기체류비자의 경우 1999년까지는 체코에 도착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0년 초부터 신거주법이 발효되면서 처음 비자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체코 국외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체코 내 외국인 체류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장기체류자의 경우 일정 금액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요구받고 있다.

-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사업목적일 경우: 1인당 110,000크라운/1년 체류 시
 - 유학목적일 경우: 1인당 33,000크라운/1달 체류 시
- 예) 6달 체류할 경우: $6 \times 33,000 = 198,000$ 크라운

2007.12.21일 체코는 쉥겐지역으로 편입되어 역내국가간 육상 및 해상 국경이 없어졌고 2008.3.30일 이후부터는 영공 국경(국제공항을 통한 입출국)도 철폐되어 역내국가 이동 시 출입국심사절차가 없어졌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체코를 포함한 쉥겐국가에서 national visa(D-타입 사증)를 취득한 외국인이 기존과 달리 별도의 C-타입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여타 쉥겐국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제 우리국민이 체코 장기사증(VIZUM)을 취득한 상태로 체코에 체류하는 기간은 쉥겐국가에 무사증 체류가 가능한 기간(6개월 중 3개월)에 산정되지 않는 바, 앞으로 쉥겐국경법에서 명시한 “6개월 중 3개월”의 쉥겐지역

체류기간 산정은 체코 이외 여타 쉥겐국가를 방문하는 기간에만 한정되게 된다. 때문에 체코 장기사증(VIZUM)을 소지한 우리나라민은 6개월 중 누적 일수로 3개월 동안은 체코 체류일수나 입국회수에 관계없이(EU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에 의거) 여타 쉥겐국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체코와 여타 쉥겐국가 간 내부국경이 없어진 관계로 여타 쉥겐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을 증명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민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각 쉥겐국가의 입국보고의무에 대한 정보(각 국가마다 상이)를 확인해서 조치해야 한다.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한국인의 경우 한-체코 간의 무비자 협정(3개월)에 의해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제한 없이 체코에 출·입국이 가능하며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지참 및 반·출입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필하여 문제발생 소지의 여지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5세 이상의 여행객: 300유로 상당의 물품 지참 시 세관에 신고(선편, 항공편의 경우 430유로)
- 15세 미만 여행객: 200유로 상당의 물품 지참 시 세관에 신고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성 물품의 반출 시에는 국가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을 휴대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2006.7.1일부로 발효된 체코 도로교통법(2005.10월 개정)에 의거, 외국인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은 'EU 비국가 국적자로서 90일 이상 체류 사증 보유자', '장기거주(1년 이상) 허가증 보유자', '영구거주 허가증 보유자'가 해당된다. 향후 상기 사증 또는 거주 허가증 취득자는 반드시 동

서류에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신청해야한다. 다만,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한-체코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체제

한국 운전면허증 종류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1종 대형	B, C, D
1종 보통	B, C1, D1
1종 기타	B, B+E, C, C+E
2종	B

※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 B: 3~3.5톤 승용차(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C: 3.5톤 이상 로리(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D: 8석 이상의 버스
- C1: 3.5~7.5톤의 로리
- D1: 8~16석의 소형버스
- B+E: 3~3.5톤 승용차(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 C+E: 3.5톤 이상 로리(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개선실적

(1)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체결

그동안 한-체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 상사 주재원들이 사회보장세를 본국과 체코정부에 중복 지불하는 애로를 겪어왔으나, 2007.12.14일 양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체코 진출 지·상사 주재원들의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해결되게 되었다. 또한, 동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이 2008.7.1일 완료되었고, 9월 초에는 동 협정 실행에 필요한 관련 문서 및 서식 등에 대한 실무 협의도 마무리되었다.

동 협정 발효와 관련, 체코 측은 상·하원 비준 및 대통령 재가(2008.5.30)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동 협정은 2008.11.1일자로 발효되었다.

(2) 경제협력협정 체결

체코의 2004.5.1일 EU 가입에 따라 기존 한-체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대체하는 한-체코 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이 한승수 국무총리의 체코 방문 계기에 2009.4.21일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간에 서명되었고, 양국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09.5.15일부로 발효되었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2012년 약 1억4천4백만달러이다. 2009년 양국간 교역이 급감한 이후 2010년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양국 교역액이 최대치에 달했던 2008년 2억6천3백만달러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2009년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2012년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3천7백만달러, 수입은 7백만달러로 우리나라가 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전자제품(휴대전화, TV, 에어컨, PC),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로부터는 주로 선박용 기자재, 기계류, 동물용사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7.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EU 회원국으로서의 크로아티아 시장은 많은 변화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 이후 구조기금 수령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2013년 하반기 구조 및 지역개발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 6.9억유로를 수령한데 이어 2014-2020년 기간중 117억유로의 EU기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구조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항만 개발, 환경 관리, 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크로아티아 진출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건설, 관광, 물류 및 교통분야, 수처리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연간 소비 에너지의 50%(석유 80%, 가스 40%, 전기 20%, 석탄 100% 등)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3%씩 증가

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이 향후 10년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2009년 에너지전략계획을 수립, 에너지 자원 공급의 다변화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Plomin 석탄화력발전소(500MW급) 건설, △Krk섬 LNG 터미널 건설, △Sisak 및 Rijeka 가스화력발전소(각각 500MW급) 건설, △Senj 수력발전소(240MW급) 보수, Benicanci 지하가스저장소 건설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 측면에서 구유권 국가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다. 크로아티아의 EU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현대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GDP(EUR백만, 경상가격)	47,543	44,781	44,876	44,922	44,062
GDP 성장률(% ,불변가격)	2.1	-6.9	-1.4	0.0	-2.0
1인당 GDP(EUR)	10,722	10,111	10,158	10,205	10,295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6.1	2.4	1.1	2.3	3.4
수출(US\$백만)	13,755	10,383	11,535	13,638	12,369
수입(US\$백만)	30,642	21,105	19,975	22,516	20,834
대외부채(EUR백만)	39,125	44,591	45,769	45,733	44,836
외환보유고(EUR백만)	9,121	10,376	10,660	11,195	11,236
평균환율(HRK:EUR/연말기준)	7.3244	7.3061	7.3852	7.5304	7.5456

※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통계청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달러)

연도	크로아티아측 통계			우리측 통계		
	대크 수출	대크 수입	수지	대크 수출	대크 수입	수지
2008	258,096	5,174	252,922	107,861	9,764	98,096
2009	141,784	3,750	138,034	61,962	13,200	48,763
2010	169,657	5,334	164,323	117,762	19,352	98,410
2011	168,319	4,946	163,373	79,404	20,296	59,108
2012	137,111	7,268	129,843	49,784	20,702	29,082

※ 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 대한민국 통계청

통상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동 지역내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부흥과 도로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 등에 힘입어 2003 이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2010년 교역량이 약 315억달러대로 급감하였고 2011년에는 약 360억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 수출과 수입의 60%가 여타 EU 국가와의 교역이다. 특히 이탈리아 및 독일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중국, 슬로베니아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독일,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등이다.

크로아티아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EU 가입은 2011.6월말 EU 가입협상이 종결되어 2011.12월초 EU 가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2.1월에 가입협정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각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13.7.1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U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EU의 공통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적용을 받게 되고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구속되는 한편, 크로아티아가 개별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들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CEFTA 회원국을 탈퇴하게 되어 CEFTA 7개국(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소보)과의 교역시 적용되어 온 관세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외교역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으며,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우리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종전 23%에서 2012.3월 25%로 인상되었으며 관광 분야 서비스·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식용 동물성 기름 및 지방·유아용 식품·플라스틱 등 포장 용기 식수를 제외한 식수·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제조된 백설탕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2013.10월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는 동 품목에 대한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빵·우유·도서·과학 잡지·전문 잡지·예술, 문화, 교육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및 시청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기금 결정 의약품 품목, 수술로 인한 신체 이식품, 공공 필름 상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선박, 비행기, 석유·가스 등 에너지류,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및 사치품 등에 부과되며 수입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5만 kuna에서 50만 kuna 가격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차량가격의 13~40%에 이르는 세금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50만 kuna 이상의 차량은 177,500 kuna와 50만 kuna 초과 금액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 중고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50%로 인상되었으며 실린더 용량이 1,600m³ 이상인 승용차와 실린더 용량이 250m³인 이륜차의 경우 100% 세율이 적용됨.

- ▶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20만 kuna에서 4백만 kuna 가격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선박·항공기 가격의 5~11%에 이르는 세금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4백만 kuna 이상일 경우 445,000 kuna와 4백만 kuna 초과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 ▶ 보석류, 시계류, 모피의류, 가죽신발, 폭죽 및 무기류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주류성 음료, 담배, 석유·가스, 전기등 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리터당 0에서 2.40 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쥘렌(cigarette)은 1,000개당 180Kuna, 담배(to-bacco)는 킬로당 38kuna, 시가(ciga)는 개당 1.10kuna, 엽쥘렌(ciga-rillo)는 팩당 4.4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 ▶ 맥주는 알콜성인 경우 헥타리터당 200kuna, 무알콜성인 경우 60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 알콜성 주류나 증류주의 경우 알콜 함유량 기준 리터당 40kuna의 세율이 적용되며 알콜이 함유된 와인의 세율은 0이다.
- ▶ 커피는 품목에 따라 순수 커피 중량 기준 킬로당 5Kuna 또는 2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2013.7.1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EU 공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 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Trans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EU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SAD: "Jedinstvena carinska deklaracija")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가 통관서류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품, 개인 위생 및 청결 용품),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보증서(Quality certifi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음식물, 가공·처리·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을 임시 통관할 경우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ATA Carnet를 발급받으면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ATA Carnet이 해당되는 대상은 샘플 용품,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통관 수속을 대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
- ▶ 품목 리스트(List of items)
- ▶ 수입 서류
 - 발송인(전체 법인명 및 식별 번호(Identification No))
 - 수취인(전체 법인명, 주소, 연락인)
 - 영수증 번호 및 발급 일자
 - 품목 명세서(개별 수량 및 가격과 총액)
 - 총/순 중량
 - 총 수량 및 포장 방식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00과의 비율 (Parity)
 - EUR 1(Movement Certificate): 6,000유로 이상 물품
- ▶ 식물병리학 통제 증명서(Phytopathological Control Certificate)
 - 식물 및 식물 제품
 - 목재 포장 재료
 - 농업 번식용품(씨, 감자, 과일, 관상용 식물 등)
 - 삼림 번식용품
 - 식물 보호 제품
- ▶ 수의위생 통제 증명서(Veterinary Control Certificate)
 -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 제품,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난자 (ova), 태반(embryos), 동물 사료, 부화 알, 동물 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허가를 서류로 신청하여야 함.

▶ 수입 계획(Import Disposition)

수입규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료,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이들 수입허가 필요품목 리스트는 Narodne Novine: www.nn.h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련된 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2010년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 (OG 20/10)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 적격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 리뷰 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EU는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안전 규정에 따른 품질적격평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옵션들 중 생산자가 선호하는 옵션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new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표준은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반면, 생산자가 이미 규정된 세세한 기술적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예전 방식(old approach)은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2012.1월 게재한 새로운 접근방식(new and global approach)과 예전 방식(old approach)에 의한 기술 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New and global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Low Voltage Equipment
2. Simple Pressure Vessels
3. Safety of Toys
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5. Construction Products
6. Machinery
7. Lifts
8.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10. Medical devices, General
11. Medical devices,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12. Medical devices, in vitro diagnostic
13.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14.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15. Placing on the pyrotechnic articles, Explosives for civil use
16.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ohers(ATEX)
17. Recreational crafts
18.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9.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20. Pressure Equipment
21.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22.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23.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and freezers
24. Measuring instruments
25. Marine equipment
26.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27.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Ballasts for Fluorescent Lighting
28.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EUP)

(Old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Medical Products
2. Veterinary Medical Products
3. Cosmetic Products
4. Textile
5. Footwear
6. Crystal glass
7. Chemicals
8. Drug precursors
9. Detergents
10. Aerosol dispensers
11. Fertilisers
12. Metrological and Technical Equipment
13. Pre-packaged products and bottles used as measuring containers
14. Units of measurment
15. Motor vehicles; two-or-three wheel motor vehicles; wheeled

16. Emission of pollutants from engines installed in non-road mobile machinery, agricultural or forestry tractors

라벨(Label)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표기 또는 병기되어야 한다.

- 생산자명(name of product)
-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full address of the importer and the country of origin)
- 순수량/무게/부피(net quantity/weight/volume)
- 성분(ingredients)
- 보관 방법(manner of storage)
-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1)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tate Inspectorate(국립 검사소)
 - Website: www.inspektorat.hr
- Croatian Standard Institute(크로아티아 표준 기관)
 - Website: www.hzn.hr
-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크로아티아 인증 기관)
 - Website: www.akreditacija.hr/index.php

(2) 크로아티아 인증 심벌

2007년 이전까지는 EU의 통합인증마크인 “CE” 인증이 있더라도 크로아티아 인증인 “C” 마크(아래 그림)를 제품 포장에 부착하여야 했다.

2007년부터 정부 부처 등에서 소관 제품에 대해 케이스별로 “CE” 인증으로 “C”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널리 적용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 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C” symbol

(3)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 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전 인증 획득 필요

○ 공식 인증시험 및 발급기관

- 기관명: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ROBE d.d.
- Website: www.zik.hr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르면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며 수입 후 5년간 관련 부품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독점 발급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관련된 법은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우리나라 제품의 對크로아티아 수출 시 장벽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수입 전 수입허가를 받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조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을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
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
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
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
가되기도 한다.

7만kuna(약 9,21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
는 금액이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
(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7만Kuna 이상의 입찰일 경우 크로아티아의 전자 관보인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에 입찰공고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나, 7만
kuna 미만의 입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를 게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13.7.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
동으로 게재 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용 입찰의 경우
90만Kuna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체(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는 조달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입찰 초청서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해야 한다. 공공입찰에 응찰하는 참가자는 입찰주체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가 요구됨)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공고문은 아래 내용을 공지하게 된다.

- contract notice
- design contest notice
- prior notice of intention to award a contest
- periodic(indicative) notice
- notic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ior(indicative) notice on the contracting entity(buyer) profile
- contract award notice
- notice of the results of design contest
- notic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or correction

Public Procurement Act는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제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dence of legal and business capacity(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ith the business, court(commercial) etc, the authorization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procurement, the certificate of membership in a specific organization)
- Evidence of the non-existence of a criminal record

- Proof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
- Proof of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법률을 EU 법률과 부합하도록 개정해 왔다. 크로아티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의 회원국으로서 21개의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특허권(Patents)은 Patent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87/2005,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특허 담당 기관인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이 되어야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고안품이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요청서, 발명에 대한 기술, 권리에 대한 주장, 도면(필요시), 발명 개요 등이 담긴 신청서를 행정 수수료와 함께 SIPO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Consensual Patents 의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Trademarks)은 Trademark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경우 어떤 형태라도 등록될 수 있다. 문장, 구절, 심벌,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제품의 형태 또는 포장, 3차원 형상물, 색깔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은 Industrial design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의 외관이 시각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산업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되며 25년을 한도로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Copyright Act and Adjacent Act(Narodne Novine, No 167/2003, 79/2007)에 따라 부여되며,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창작품이 대상이 되며, 아이디어, 절차, 일처리 방식, 수학적 개념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되고,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자는 제3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제작기술(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은 Act on Protection of the 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에 의해 보호되며, 그 제작기술이 지적노력의 산물이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계에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상업적 이용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생명공학, 제약, 식물보호물질(Plant protection products: PPPs, 농약)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 크로아티아는 2001년부터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UPOV)의 회원국이며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7.1일 EU 가입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과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인프라·관광·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greenfield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 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지향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기술과 Know-how 의 도입을 권장하며,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요한 투자유치 방향이다.

2012.9월 크로아티아 의회는 새로운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을 통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유로에서 5만유로(소기업) 및 15만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새로이 포함시키고, 재투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며, 투자금액, 투자 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투자 및 경쟁력(Agency for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및 투자 절차를 간편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유치 선호 분야
 - 제조업
 - R&D 센터
 - 전략적 기업 지원 분야(고객관리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처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
 - 관광 프로젝트 분야(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헬스 센터)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관세 혜택
 - 고용 및 고용 보조금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 해당 투자비용
 - 기기 및 기계류(Equipment, Machinery)
 - 무형 자산(특허권, 라이선스, Know-how 등)
 - 2년간의 총 임금
-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유로)	신규 고용인원	감면법인세율 부여기간	고용기간	감면법인 세율
100만 미만	5명(소기업은 3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10%
100~300만까지	10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
300만 초과	15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0%

○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지역 실업률	신규 고용 창출비용 인센티브율	기술혁신 및 개발센터의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전략적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	혁신 및 개발 활동 인센티브
10% 미만	10% (3천유로 한도)	50%(천5백유로)	25%(750유로)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50만유로 한도)
10~20%까지	20% (6천유로 한도)	50%(3천유로)	25%(천5백유로)	
20% 초과	30% (9천유로 한도)	50%(4천5백유로)	25%(2천2백5십유로)	

※ 장비수입 관세: 무관세 적용

○ 투자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 인센티브

- 지원 대상: 500만유로 이상 투자 및 50인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투자지역 실업률	자본 지출 인센티브
10~20%	투자비용중 아래 해당 분야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5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함.)
20% 미만	투자비용의 아래 해당 분야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10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한다.)

○ 직업 훈련 인센티브

신규 고용 창출 인원	신규 고용업체 창출 보조 증가
100명 이상	25%
300명명 이상	50%
500명 이상	100%

채용 및 고용 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 신고 및 매월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납부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근로 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계약 기간, 근무시간, 휴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근무기간 1년당 월평균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연간 유급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주 이상이며, 기타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 시간은 1주에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5.20%를, 근로자는 급여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15.20%에는 근로자 의료보험 기여금(2012.5.1일부터 종전 15%에서 13%로 하향 조정), 고용세 1.7%, 작업장 상해보험 0.5%가 포함되며 근로자는 별도의 의료(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서비스인 HITRO.HR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HITRO-공증 사무소-상사 법원의 3단계로 단축되었으며 소요되는 기간 또한 4일 근무일(4 working days)이내로 많이 단축되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회사창립 서비스인 “e-company”를 이용할 경우 HITRO측은 공증 사무소 등록과 상사 법원 등록이 각각 1일내에 이루어져

2일 근무일(2 working days)이내에 회사 창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 HITRO.TR 서비스 사이트: www.hitro.hr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13.3월까지 총 약 273억유로이며, 2010년 FDI가 3.2억유로로 최근 18년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11년 11억유로, 2012년 10.5억유로, 2013년 1/4분기까지 4.6억유로의 FDI를 유치,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유통, 정유, 부동산, 통신 등의 분야이며, 오스트리아(전체 외국투자의 25.3%), 네덜란드(15.5%), 독일(11.5%), 헝가리(5.8%) 등 EU 국가가 투자 상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약 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가 2013.7.1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구 약 450만 명의 크로아티아 시장을 넘어 구 유고연방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츠고비나 시장까지 포함하는 인구 약 2,000만 명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크로아티아를 구 유고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을 통해 유럽 어느 지역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크로아티아가 갖고 있는 기존 구 유고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함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크로아티아 진출은 주변 유럽 국가들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내 적극적인 투자진출 활동 실적과 높은 기술 수준을 잘 살릴 경우 크로아티아에게 한국은 신뢰 높은 파트너(reliable partn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향후 투자 검토 분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를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50%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1년 EU와 20-20 협정을 체결,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풍력과 태양광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찰 참여 노력을 할 경우 결실이 기대된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공동으로 하수도 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소각, 절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기량 절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부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부다페스트-리예카 구간 철도가 부설될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망 등과 함께 중유럽 도시와 리예카항을 잇는 운송 인프라가 완성되게 되어 크로아티아의 EU 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 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퍼(슬로베니아) 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인근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학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의 의학 시장은 EU 및 중동부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더해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의료 관광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 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유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762.4	949.6	1,467.8	2,764.8	3,683.2	4,245.9	2,403.6	317.8	1,100.8	1,054.0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투자 장벽

크로아티아는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크로아티아와 상호 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구매 가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과 크로아티아간 상호 호혜주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크로아티아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진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보통 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잔고만 있어도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인출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하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으로 기업을 설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된 소송건수가 80만건에 달하는 등 소송 지연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을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통업자들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선과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약한 편이며 주로 인근 국가인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식 기업 풍토에 보다 익숙한 우리 기업에게는 다소 낮은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제1위 투자국 지위를 미국이 차지하는 등 미국기업의 對크로아티아 투자가 유통업, 제약업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인근 동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적 사법제도 등이 對크로아티아 투자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행정 및

사법 분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잘 교육된 전문적인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대크로아티아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포르투갈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비해 제조업 등 공업기반은 다소 취약하다. 유럽과 브라질·앙골라 등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대기업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은 레저용품, 소형 특수기계 등 틈새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한편, 2011.7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출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EU FTA 발효 즈음에 포르투갈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사실상 FTA 발효 효과가 반감되고 긴축으로 인한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등 우리의 주종 상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2013년 들어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회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우리 기업이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 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혁신적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법인세 인센티브 등 세제개혁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투자규모)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08년도 353억유로, 2009년 320억유로, 2010년 396억유로, 2011년 396억유로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2012년은 재정위기로 인한 강도 높은 재정긴축 및 민간소비 감소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93억유로의 외국 투자자본이 유입되었다.(포르투갈 무역투자청 통계).

(분야 및 국가) 2005년 이후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 부동산,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도소매업이 3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보험업(22.3%), 제조업(21.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보통신(6.2%), 컨설팅·과학기술(2.6%)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Auto-Europa), 세계적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Renault 자동차 부품공장(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2012년도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2.5%), 스페인(17.7%), 프랑스(16.4%), 영국(13.8%), 독일(10.1%)등 EU 회원국들로 총 외국인투자의 86.5%에 달했다. EU 역외 국가들로는 스위스, 브라질, 앙골라 등이 있다.

(전담기관) 기존 무역관광청(ICEP)과 투자전담기구인 투자청(API)을 통합, 2007년 설립된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전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내 AICEP 재외사무소는 2010.5월 폐쇄되었지만, 2012.11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3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에서 재개설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현재 적용중인 법은 2012년 개정된 노동법(Código do Trabalho)으로, 질병 또는 산업재해시 근로자 보호, 성별 또는 인종으로 인한 차별금지, 동등한 기회 제공, 출산 등 여성근로자들의 권리, 교육의 권리, 노조의 권리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3.12월 1차 개정한데 이어 2009.2월 새롭게 개정했다. 또한, 2011년 재정위기가 발생, 이에대한 극복의 일환으로 2012.5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법 변경 및 최고 한도 설정 등을 골자로한 혁신적인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투자 제한 분야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단, 수도, 우편, 철도, 항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2003년 30%에서 2012년 25%로 인하하고 투자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시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포르투갈 내륙산간 지역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 기업 설립, 연구개발(R&D) 투자, 고용창출, 종업원 훈련 및 재교육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이나 AICEP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2010.12.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정책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는 2012년 소득수준에 따라 11.5~46.5%까지 부과(2011년과 동일)되며, 납기별로 부분납부 후 회계연도 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IRC)의 경우, 2011년 과세표준 기준 12,500유로 이상인 경우 25%, 12,500유로 이하인 경우 12.5%였으나, 2012년에는 25%로 통일 적용되며, 과세표준액이 1천만유로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4.5%까지 부과될 수 있



다. Madeira와 Açores 행정자치주에서는 각각 20%와 17.5%가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소유세(IMI)와 매매세(IMT)로 구분된다. 소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소재지에 따라 0.2~1%까지 부과된다. 매매세는 매수인이 지불하며 시장가격과 건물의 소재지, 용도에 따라 0~8%까지 부과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1%,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2%, 식료품, 의약품,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5%의 할인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포르투갈 정부의 긴축조치로 2011.1.1일부터 일부 식품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과 공공 서비스요금(전화, 전기, 가스등)에 대해 기본 세율을 23%로 일괄 인상하였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의 인구는 2012년 약 1,06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학력이 서유럽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혁적인 노동법제 개정을 통해 사회 이해관계자간 협약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축소하려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3.9월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은 시장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지속적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 정책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중기적으로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였다. 포르투갈은 교통 인프라 19위, 양질의 대학교육 26위, 비즈니스 혁신 29위를 기록하였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07년 403유로, 2008년 426유로, 2009년 450유로, 2010년에는 475유로였다. 2011년에는 500유로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위기로 인해 485유로로 재조정되었고 2012년, 2013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485유로로 동결되었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며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없고,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수출물량을 통관시키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한편,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은 수심이 깊고 천혜의 항만여건은 갖추었으나 리스본과 지역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 물동량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 포르투갈 정부가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중으로 Sines항은 리스본 등 기존 항만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 항구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쉥겐회원국으로 6개월 중 누적일수로 3개월 동안 무비자 체류

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단기사증(Visto Estada Temporária)을 받고 입국하여 기간 만료 이전 포르투갈 이민국(SEF)에서 거주증(Título de Residência)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쥬겐회원국을 통해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신고하여야 한다(위반시 벌금 부과). 체류허가를 발급받는데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운전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와 체류허가 또는 180일 이상 유효 비자를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에 제출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및 의료보험증 발급, 전화·인터넷 설치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로그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상당수의 개선조치를 시행하였고, 대기시간, 복잡한 문서작성, 번거로운 여러 기관이 동 등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1.6월 출범한 집권 우익연정 역시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포르투갈의 은행은 국립은행인 Caixa Geral de Depósitos(CGD)와 민간은행인 Millennium BCP(전 Banco Comercial Português), Banco Espírito Santo(BES), Banco Português de Investimento(BPI), Banco Popular

등이 있다. 시장 점유율로는, CGD가 약 30%로 1위이며, 이어 Millennium BCP(약 23%), BES(약 20%), BPI(약 10%) 순이다.

스페인 은행들은 포르투갈 전체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Banco Bilbao Vizcaya와 Banco Argentaria가 합병된 BBVA, 스페인 은행 Banco Santander와 포르투갈 은행 Banco Totta가 합병되어 탄생한 Santander Totta, 그리고 Caixa Galicia 등이 있고, 영국계 Barclays와 독일계 Deutsche Bank 등도 진출해 있다.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 2013(1~8월)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218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 수입액은 133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38.0% 증가하여 교역량이 32.6% 현저한 증가세를 시현함.
- 지난해 주재국 정부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인한 민간 소비수요 위축으로 한-포르투갈 양국간 교역량도 대폭 감소(전년대비 46.9% 감소)된 바 있으나, 2013년 들어 양국간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임.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8월)
수출	414	411	431	1,110	713	276	218
수입	202	78	63	79	100	156	133
무역수지	212	333	368	1,030	613	120	85

* 출처: 한국무역협회

*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80위, 수입상대국 76위(2012년)
우리는 포르투갈의 수출상대국 47위, 수입상대국 34위(2012년)



○ 주요 교역품목

- 수출: 합성수지, 자동차, 합성고무, 휴대폰, 가전, 철강, 화학제품, 공구 및 금형, 산업기계
- 수입: 고무제품, 섬유제품, 증전자기기, 신변잡화, 전자부품, 수송기계, 수산물, 비금속광물

○ 선박 등 수송기계

- 최근 Sines항 개발 등 물류단지의 개발과 포르투갈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인 장점을 활용한 해양개발과 맞물려 우리 업체들의 선박 등 수송기계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여 2010년의 경우, 특수선박이 우리의 對포르투갈 전체 수출 총액의 70%를 차지한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 수요에 의한 수출로서 2011년 들어 급격한 수출하락을 보였다.

○ IT 제품

-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에서도 2006년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신디지털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강력 추진중이다.
-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은 급속히 향상되어, 한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2002년 26.9%에서 2012년 62.3%, 광대역 인터넷 접속율은 2003년 7.9%에서 2012년 56.2%을 기록했다(포르투갈 통계청). 인트라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도 한 학생당 한 컴퓨터 정책을 펴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산 휴대폰은 2012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지, 승용차, 합성고무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내 시장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갈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로 2012년 전년대비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2013년 9%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충전지 케이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원 콘텐츠 등 모바일 콘텐츠와 동영상 처리, 모바일 플래쉬 구현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제84류)
 - 공기조절기(8415)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8414)의 수출과냉장고·냉동고(8418)와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금전등록기(8470),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리치(8483),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8471)의 수출이 호조를 유지한 바 있다.
 -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일반 가정과 신축 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기기기 및 부품(제85류)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8517)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크며,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잠금장치(Door Lock System) 등 디지털 보안장비(8525) 또는 관련부품(8529)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4)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험한 전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실시 중으로 추후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바, 앞으로 RFID 관련 장비(8542, 8543)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트랜스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Data quality & control), 장치관리(Device Management)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LCD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對포르투갈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법인으로 진출해 있다.
- 고무제품(제40류)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4011)는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왔는 바, 포르투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무역을 추진해 보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제87류)
 -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나, 승용차(8703)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8701) 등은 여전히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 및 의류
 - 섬유와 의류는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의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단, 면사(제52류), 인조필라멘트(제54류),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류), 펠트·부직포(제56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60류) 등의 수출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제품(제32류)
 -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로

부터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3204)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향생물질(2941)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포장기기 및 포장재료(3923)
 - Sonae(Continente, Modelo), Jerónimo Martins(Pingo Doce)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하이퍼마켓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 포장기계와 포장재료, ‘self-checkout(셀프계산창구)’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냉·온수기
 -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농산물
 -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잡화류
 - 포르투갈의 문구(특히 볼펜-9608), 완구, 운동용구, 낚시도구, 펠트, 신발류 자재, 단추·단추 모듈드와 부분품(9606) 등 일반 공산품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양질의 저렴한 한국산 공산품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폴란드 경제 및 한폴 무역 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800만 명(EU회원국 중 6위), GDP 약 4,900억불로 경제규모 세계 22위(2012년 세계은행 통계)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장으로 유럽 내 최고)을 달성하였다.

특히,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 실시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EU자금 및 활발한 외국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던 2012년에도 1.9%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유로화 도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재정적자폭의 확대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 서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은 폴란드의 2004년 EU 가입을 전후로 하여 최근 6~7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국 교역 총액은 2003년 4.5억불 수준에서 2012년 양국간 총 교역액은 42.1억불(수출 36.8억불, 수입 5.4억불)을 기록하여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 31억불로 우리의 주요 무역 흑자국이다.

폴란드는 우리의 중·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14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자, 화학, 연구개발(R&D) 센터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의 대 폴란드 투자는 13.3억불(12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롱키(Wronki)에서 냉장고/세탁기 공장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 만도가 바우브쥐흐(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 투자 진출하는 등 폴란드 중서부 지방 중심의 가전 부품 분야, 남서부 지방 중심의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 한-폴 무역 통계

(단위: 백만불, ()는 증감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3,509 (△34.8)	4,117 (△17.3)	4,147 (△0.7)	4,381 (△5.7)	4,111 (▽6.4)	3,678 (▽10.3)
수 입	301 (△11.2)	307 (△2.0)	234 (▽23.8)	274 (△17.1)	376 (△37.4)	535 (△42.2)
무역수지	3,208	3,810	3,913	4,107	3,725	3,143
총교역액	3,810	4,424	4,381	4,655	4,487	4,213

* 출처: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

(단위: 백만USD)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신규투자(건)	18	10	1	8	3	4	121
투자금액	118.5	93.4	28.9	28.6	42.2	21.9	1,333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EU 폴란드 2013~2017 경제 지표 전망

주요경제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경제성장률(%)	1.0	2.3	3.2	3.9	4.2
산업생산(%)	1.1	3.9	6.1	7.5	8.7
고정자산투자(%)	2.1	2.6	4.1	5.9	6.8

주요경제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업률(평균)	13.5	13.3	12.9	12.5	11.9
실업률(EU통계청기준)	11.5	11.3	11.2	10.8	10.4
물가지수	1.0	1.5	1.6	2.0	2.1
물가지수(EU HCPI)	1.1	1.6	1.8	2.2	2.3
단기대출이자율	1.0	1.5	1.6	2.0	2.1
재정수지(% of GDP)	8.2	8.1	8.1	8.0	7.9
수출(USD억)	0.1	0.2	0.6	0.8	0.8
수입(USD억)	3.8	3.5	3.0	2.9	2.5
경상수지(USD억)	198.5	222.2	258.5	313.2	370.6
경상수지(% of GDP)	205.5	233.9	274.3	328.4	390.6
대외채무(USD억)	12.5	14.8	17.6	19.2	21.9
환율(USD, 연평균)	2.5	2.8	3.1	3.2	3.3
환율(EUR, 연평균)	371.2	378.5	386.4	395.9	403.7

출처: EIU(2013.8월)

폴란드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USD)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유입액	23,651	14,978	13,022	14,345	18,887	3,092

출처: 폴란드 국립은행

통관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은 대부분 전산화가 됨에 따라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에서 개선되었다. 2011. 7.1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자 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환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 세관당국의 검토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SAD를 받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4일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정부투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2004.8.21일에는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이 발효되었는데 이 법은 기업 설립을 쉽게 하고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 분야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활동자유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는 6개의 카테고리(concession의 경우)로 줄어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록(register)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회사의 형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 출신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회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시 감사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활동은 본사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의 EU 가입(2004.5월) 이후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의 요건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지원’(Regional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서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및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주요 내용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적격투자 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등)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컨대, 수도권 바르샤바의 경우 지원을 상한선은 30%이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다.

한편, 중견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을 상한은 10% 포인트 높아지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가 더 높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또는 투자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중소기업의 경우 각 3년). 적격투자비용은 투자비용(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리스 비용 등) 또는 투자에 따른 2년간의 신규 노동비용으로 계산된다.

현금 보조는 폴란드 당국에서 투자금액, 투자업종(기술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투자기업과 폴란드 정부(경제부) 사이에 계약도 맺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2008.8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산업고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하여 현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투자, 서비스업 및 R&D투자, 정부가 정한 중점 육성산업분야로의 투자이며 각 대상별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중점 육성산업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항공산업, 첨단기술 서비스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IT 등), 연구개발(R&D)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 현금 지원 강화 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대규모 외국인 투자	일반조건 - 투자액: 1억6000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 - 투자액: 10억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0명 이상	지원액은 경제부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
고도산업 분야 고용 창출	전략적 육성 산업 분야 - 투자액: 4천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250명 이상 서비스업 - 고용규모: 250명 이상 R&D - 투자액: 3백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35명(연구원) 이상	고용규모 250~1000명 : 신규고용인력 1인당 최대 3,200 즈워티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1,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인력 1인당 최대 18,700 즈워티 추가 지원

출처: 폴란드 경제부

경제특별구역(SEZ) 내 조세감면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구역이다. SEZ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SEZ에 입주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SEZ의 관리당국은 입찰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SEZ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최소 10만유로가 되어야 하고 적어도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폴란드에는 14개의 SEZ(기술단지 1개 포함)가 설립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26년까지이다.

SEZ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인데 전술한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일환이다.

- 대기업은 적격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또는 2년간의 신규 고용 비용)의 40% 또는 50%(특구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R&D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10% 포인트,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 높아짐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체 의회(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결의는 국가보조금 관련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합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법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이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per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위의 건물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부동산 취득법에서 ‘외국인’ 이란 a)폴란드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b)폴란

드 밖에 등록된 법인 또는 c)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a항, b항에 명시된 회사나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의 취득 신청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 정책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5.1)부터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시민이나 기업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농지/삼림지 및 제2의 주택(second house)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농지/삼림지는 EU 가입일로부터 12년간, 제2의 주택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허가와 관련, 내무부의 정책은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직접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EA 지역 내 시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즉, 다음에 해당될 경우 EEA 이외 지역의 외국인도 허가가 필요치 않다).

-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 폴란드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 폴란드 거주 시

- 외국인이 직간접 지배하는 법인이 영업 목적으로 미개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동산 취득법에 위배될 경우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될 수 있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의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 및 2004.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은 연금, 불구(disability), 사고(산업재해) 및 질병(sickness) 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제는 의무사항이며, 월 단위로 기업 소재지 사회보장기관(ZUS) 사무소에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모두 납부하며, 고용주의 기여분은 피고용자 급여의 19.48~22.67%에 달하며, 피고용자의 기여분은 13.71% 이다.

■ 사회보장제(ZUS) 체계 및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기여분

구 분	기여분(급여 대비)	기여금 분할	
		고용주	피고용자
연금	19.52%	9.76%	9.76%
불구	8%	6.5%	1.5%
사고(산업재해)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0.67%에서 3.86%까지 차등	0.67%-3.86%	-
질병	2.45%	-	2.45%
추가 기여금:			
노동기금	2.45%	2.45%	-
피고용자복지기금	0.10%	0.10%	-

* 의료보험은 피고용자가 추가로 9% 부담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 체계는 2013.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남성 1948.1.1일, 여성 1953.1.1일 이전에 출생한 피고용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제도를 따르게 된다. 구제도 하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은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반면,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연금법(2012.5.11 제정)에는 남녀 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67세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단,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연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하여 2020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연장이 실시되며, 여성의 경우 2040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한편, 위의 사회보장제 외에 건강보험도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급여에서 상기 사회보장제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9%이며, 피고용자에게만 적용된다. 2001.9.27일부로 폴란드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폴란드에 있는 모든 피고용자는 사회보장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재원)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제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제 납부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폴란드로 단기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주어졌지만, 2010.3.1일부로 발효된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양국 내 고용된 근로



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만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중복 적용 및 기여금의 이중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적용된다.

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② 폴란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나라의 법령만 적용 받으며, 자영업자나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만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본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게 되어 폴란드에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추후 이 기간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연금 대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만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연금 대상자가 급여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 가입기간도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국인 직원이 폴란드에서 연금을 납부할 시 대부분의 경우 폴란드의 최저연금보장 최소 가입기간 25년을 다 채우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인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한국 또는 폴란드에서 연금 수급 시 적용 받게 되었다.

폴란드에서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한 뒤, ‘한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Fax: 02-3485-9804). 적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사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서는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 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송달하게 된다.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파견 근무지의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혹은 보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차후 연금 급여를 신청 시 우리나라 체류자는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폴란드 체류자는 폴란드의 실무기관에 이를 청구하면 심사 후 매월 말일에 지급되게 된다.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시스템은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의 법인/개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 사무소나 이사회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각종 경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비용, R&D 비용, 공제 가능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대상비용: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외화환산손익 포함)은 자산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폴란드 세법 내 64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 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 불인정
- 접대비성 비용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1993.12.24일 발효한 한-폴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에 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중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가능 내용의 쉥겐 조약보다 상기 양국 간 교환각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비영리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비쥬겐조약국으로 출국 후 재차 귀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해외의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비자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란드 정부도 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외국 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유효기간 최대 2년(연장가능)의 거주허가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미 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인 비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정부는 고용원 수 등 동 기업 활동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2006.7.21일 폴란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2006.8.2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1999.1.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내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운전면허가 발급된다.

프랑스

1. 통상환경

최근 거시경제 및 정책 동향

프랑스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기부진과 재정악화, 높은 실업률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심리 개선,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2013년 2/4분기에는 프랑스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났지만, 구조개혁 성과 및 투자·고용심리 등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1.2%에서 0.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달성,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및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개혁 조치는 프랑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제성장률(%) :('10) 1.4 →('11) 1.7 →('12) 0.0 →('13^f) 0.1

※ 재정수지(%) :('10) △7.1 →('11) △5.3 →('12) △4.8 →('13^f) △4.1

※ 국가채무(%) :('10) 82.3 →('11) 86.0 →('12) 90.2 →('13^f) 93.6

※ 실업률(%) :('10) 9.7 →('11) 9.7 →('12) 10.3 →('13.2Q^f) 10.9

대외통상 관계

프랑스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며, 아울러 2012년도 기준, 수출 세계6위, 수입 세계5위의 무역대국이다.

※ 수출: ① 중국, ② 독일, ③ 미국, ④ 일본, ⑤ 러시아, ⑥ 프랑스

※ 수입: ① 미국, ② 중국, ③ 독일, ④ 일본, ⑤ 프랑스

그러나, 무역수지는 2003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적자로 반전된 이후 2007년 고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737억 불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10년 연속 구조적 적자에 직면해 있다.

※ 무역수지(백만유로) : (09) △454 → (10) △523 → (11) △737 → (12) △672

교역구조는 수출의 경우, 기계장비, 농식품, 항공기, 자동차 등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전체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군에 편중된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출의 59%, 수입의 58%가 EU국가에 집중되는 등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비EU지역 수출비중: 아시아(12.6%), 북미(9.7%), 비EU유럽(8.1%), 아프리카(6.5%), 중동(3.3%)

프랑스 정부는 2017년까지 에너지를 제외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프랑스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수출전략과 미국 및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불공정무역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한-프랑스 양국간 교역현황

2012년 한불 교역액은 총 75억불로, 2011년(선박, 항공기 등 비정기적 품목의 수출입으로 교역량이 120억불로 급증)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평균

교역규모인 70~80억불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불 무역수지는 최근 연 평균 10억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프랑스의 경기 위축 등으로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23억불로 2배 이상 증가,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 최근 한-프랑스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 역	8,373	6,917	7,287	12,020	7,524
(증감율)	(11.3)	(△16.9)	(5.3)	(65.0)	(△37.5)
수 출	3,496	2,911	3,004	5,708	2,601
(증감율)	(0.5)	(△16.7)	(3.2)	(90.0)	(△54.4)
수 입	4,877	4,006	4,283	6,312	4,923
(증감율)	(20.6)	(△17.9)	(6.9)	(47.4)	(△23.2)
무역수지	△1,381	△1,095	△1,279	△605	△2,322

■ 2012년 기준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

(MT4단위 기준)

순위	수출품목	금액(증가율)	수입품목	금액(증가율)
1	자동차	672(△13.8)	화장품	287(△4.3)
2	휴대폰	563(64.9)	항공기	268(△79.1)
3	자동차부품	85(△3.4)	의약품	261(△6.5)
4	반도체	84(△29.2)	섬유제품	195(△6.6)
5	합성수지	76(26.9)	펌프	175(49.0)
6	선박 등	66(△97.5)	집적회로반도체	166(4.5)
7	편직물	66(36.3)	가족제가방	157(12.7)
8	컴퓨터	62(38.3)	원동기	146(△9.4)
9	냉장고	48(△17.5)	정밀화학원료	141(△4.0)
10	플라스틱	46(7.7)	자동차부품	96(△58.0)

한·프랑스 양국간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프랑스 투자액(누계, 신고기준)은 2013년 6월말 기준 총 19억 불이다. 2009~10년간 우리나라의 대프랑스 투자는 프랑스의 대한 투자규모를 앞질렀으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프랑스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2011~12년간 투자실적은 급감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화장품 제조업과 휴대폰 등 IT제품, 승용차, 섬유, 타이어 등 주력 수출품목 판매 분야에서 프랑스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최근 그 영역을 확대중이다.

■ 우리기업의 대프랑스 투자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6월	누계
투자금액 (백만불)	27	28	159	36	271	483	140	45	52	1,854

프랑스는 1971년 최초투자(한국유리공업) 이후 우리나라에 2013.6월 현재 총 66억불 규모의 투자를 하여 규모면(실제 투자금액기준)에서 전체 대한 투자국 중 7위, EU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한투자는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대폭 감소(전년대비 79.6%↓)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프랑스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6월	누계
투자금액 (백만불)	85	1,173	439	538	110	160	236	222	208	6,632

2. 교역 환경

관세 및 통관 장벽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관세 및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조치, 원산지 등 통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한-EU 관세율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EU의 관세, 수입쿼터, 수입제한 등 규제조치 참고 사이트

- EU의 TARIC 시스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U HS 8단위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각종 수입규제 현황 확인 가능)
 -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ustoms_tariff/index_en.htm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은 프랑스 표준 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

프랑스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89/336/EEC)에 따른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정부조달

프랑스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GDP 대비 2005년 3%에서 2011년 4%대로 확대되어 왔으나, 프랑스 정부가 2013.7월 재정적자 해소 차원에서 2015년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를 20억유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분간 정부조달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e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각 계약별 조달방식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전자입찰 등 다양하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별 조달금액에 따라 공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경제재정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 참조
: www.marches-publics.gouv.fr

지적재산권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인 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ete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 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성서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의 권리보호기간은 최대 25년이다. 신청절차는 INPI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유사하며, 소요기간은 통상 상표의 경우 5개월, 디자인의 경우 3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정/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상 저작물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HADOPI(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를 2013년 이전 폐지키로 하고, 이 기능을 프랑스 영상매체고등기관(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으로 이전하고 인터넷상 저작물 관리를 총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매체 및 통신기기 등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및 인터넷 통신기기에 일명 ‘문화세’로 불리우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당분간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동 방안은 201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미 공 CD, 공 테이프 및 컴퓨터 외장하드 및 MP3 기기에 ‘copie privée’라는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3.9월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총 25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별로 약 50만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 프로그램은 현재 프랑스해외진출지원공사(UBI FRANCE)가 INPI와 함께 마련중이며 금년말 발표될 예정이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사이트 참조: <http://www.inpi.fr>

경쟁정책

2009.1월 프랑스 정부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u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e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프랑스 경쟁청 사이트 참조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3. 투자 환경

프랑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프랑스 정부는 경제회복 및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개선,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1월 공공투자은행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금년 7월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과 디지털 경제 구현 등을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9월에는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등을 발표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및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래 투자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디지털 경제 구현, 에너지전환, 항공우주분야 육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20억유로를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

- 중점 투자 분야: 연구개발 및 대학 캠퍼스 확충(36.5억유로), 에너지 전환(23억유로), 기업혁신 촉진(17억유로), 방위산업(15억유로), 항공 우주산업(13억유로), 디지털경제(6억유로), 교육시설 현대화(5.5억유로), 보건산업(4억유로)

※ 미래전략 산업 육성 정책: 에너지, 건강, 디지털 및 운송 등 4대 분야 34개 산업을 민관 협력에 기초,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할 계획

- 주요 육성 산업 분야: 에너지(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 대체 연료 등), 건강(바이오 의학기술, 디지털 병원 등), 디지털(로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운송(무인자동차, 미래형 초고속열차, 전기 비행기 등)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 설립형 투자, 고용 창출형 투자, 혁신형 투자 등 투자 유형별, 개발취약 지역 및 일반 지역 등 투자 지역별 및 대기업/중소기업 등 투자기



업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내용 및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산업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형 투자 프로젝트, 고용 창출형 투자, 기업의 R&D 프로젝트, 친환경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우선지역(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T)을 선정하고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보조금 지원: 2007~2013년간 지정된 PAT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전체 투자금액의 10~15%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35%까지 지원

※ 법인세 면제: 동 지역에서 창업하는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제공되며, 동 법인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재산세가 면제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우수기술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이 혁신 및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할 경우, 지역적 구분 없이 연간 R&D 지출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 활동을 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창출된 일자리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 최초 투자연도 연구개발비의 50%, 이후 40%, 30%씩 연차적으로 세액을 공제

※ 보조금 지원: R&D 단계별로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설비 구입, 특허권

매입, 기타 간접비 등을 포함한 R&D 지출의 일부를 지원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

※ 일자리 창출 R&D 지원: R&D 프로젝트로 최소 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경우에는 창출된 일자리 수 당 최대 15,000유로의 보조금 지원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ete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ete par actions simplifie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되어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ete a responsablilite limite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e des en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관, 주식 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 통계청, 세무서 등에 관련서류를 송부하게 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프랑스 정부는 2001년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을 설립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투자청 사이트 참조

: <http://www.invest-in-france.org>

조세 제도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납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5,963유로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여 150,000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과세된다. 즉,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지난 9월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법률안에 따르면, 2014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과세기준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0.8%씩 인상·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세율구간(유로)	세율(%)	2014년 세율구간(유로)
5,963 이하	0	6,011 이하
5,963~11,896	5.5	6,011~11,991
11,896~26,420	14	11,991~26,631
26,420~70,830	30	26,631~71,397
70,830~150,000	41	71,397~151,200
150,000 이상	45	151,200 이상

법인세율은 원칙적으로 33.3%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고 법인세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3.3%의 추가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8,12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에 대해 1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다.(38,120유로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33.3%의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며, 예외적으로 7%(식당, 박물관, 여객운송 등) · 5.5%(식료품, 장애인용품 등) · 2.1%(의료보험 대상 약품, TV 수신장치 사용료 등) 등 3개의 감면세율이 있다. 동 부가가치세율들은 2014년부터 19.6%→20.0%, 7%→10%, 5.5%→5%로 각각 변경될 예정이다.

부유세는 가족의 순자산 가액이 80만유로 이상인 경우 부과되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순자산 가액(백만유로)	세율(%)
0.8~1.3	0.5
1.3~2.57	0.7
2.57~5	1.0
5~10	1.25
10 이상	1.5

지난 9월말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법률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1%를 과세), 고소득에 대한 특별세(연소득 10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 기업이 50%를 납부), 에너지세제 개편(석유·천연가스·석탄 등에 대한 소비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 등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동 예산법률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말 최종 확정된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약은 1981.1월 발효, 1992.3월 개정)

※ 상세사항은 프랑스 경제재정부 세제총국 사이트:

<http://www.impots.gouv.fr>

노동 관련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별되는 프랑스 노동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간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고용안정화법(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을 공포하였다. 동 법안은 그동안 기업에서의 해고가 쉽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제한적이거나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 주요내용: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과 임금조정 가능, 법적 노동분쟁 시효 단축(5년→2년) 등

※ 프랑스 노동법 주요내용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확정기간계약과 확정기간계약으로 구분된다. 계약서는 붙어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동인 요청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상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18세 이상 민간부분 근로자 등에 적용되며 시급으로 결정된다. 매년 1.1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며, 2013.1.1일자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43유로(월 1430.22유로)이다.

(근로시간)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제는 기업체 간부급 임직원, 육아보조원, 경비원 등 일정 직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휴가) 근로자는 휴무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월 2.5일) 기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1일부터 10.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의 결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 보호)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근무 시간대가 야간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동 여성 근로자는 낮 시간대로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 기본적으로 16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15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연극, 영화, TV, 라디오, 패션모델 등 분야의 경우 및 노동관청으로부터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근로에 대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제도상 고용주 부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건강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 산재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2.8%, 노령연금의 경우 8.3%, 가족수당의 경우 5.4%, 산재보험의 경우 2.38% 등을 부담한다.

※ 프랑스 정부는 연금관련, 현행 8.3%의 고용주 부담분을 2017년까지 0.3%p씩 인상키로 하였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고용주의 가족수당 부담 비율 인하를 통해 상쇄시키겠다고 발표

(해고)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 개인적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헝가리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헝가리 경제는 2012년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치고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였다. 2012년도 GDP 성장률은 -1.7%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도 1/4분기 -0.9% 성장, 2/4분기 0.5% 성장을 기록, 전체적으로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도 초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헝가리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 헝가리 정부가 IMF와의 대기성 차관 협상(2012.7월 협상 개시)을 계속적으로 지연하면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있는 점 ▲ 유로존 지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헝가리가 유로존 경기 침체의 여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점 ▲ 정부의 과도한 조세 정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외국자본의 유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헝가리 경제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경제분석가 Raffaella Tenconi는 2013.9월 헝가리 현지 실사 이후 헝가리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지수 향상 등 경제 여건의 호조를 근거로 2014년도 헝가리 경제성장률을 0.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헝가리 국내통화인 포린트의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포린트/유로 환율이 320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올해 초 예상과 달리 300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13.1월 5.50%에서 2013.9.25기준 3.60%까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물가,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3.9.20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또한 4년내 최저치인 9.9%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헝가리가 2013.6.21부로 EU의 재정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졸업하면서 헝가리 정부의 재정균형에 대한 외부의 우려도 잦아들고 있다.

헝가리 경제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선전하고 있는 이유로 ▲ 전세계적으로 과잉공급되고 있는 유동성 현상으로 인해 포린트 환율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 제조업 기반의 수출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헝가리 경제구조가 금융산업, 단기 자본 유입에 의존하는 여타국가에 비교적 위기관리에 양호하며, ▲ 여당이 2/3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총선 대비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주요경제지표: 2013.9.1자 EU 자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	2014 (전망)
명목 GDP (US\$ bn)	154.2	126.6	128	138.7	125.5	124.4	129.3
명목 GDP (Ft bn)	26,543	25,626	26,607	27,886	28,252	28,822	30,280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19,416	18,291	18,806	19,578	19,639	20,105	20,650
실질 GDP 성장율	0.9	-6.8	1.3	1.6	-1.7	0.3	1.7
고정투자 증감율	2.9	-11.1	-9.5	-3.6	-3.8	-6	-3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73	79.8	81.8	81.4	79.2	79.7	80.7
재정수지 (GDP대비)	-3.7	-4.6	-4.4	4.2	-2	-3	-3
인플레이션율	6.3	4.5	4.9	3.8	5.7	2.2	3.1
실업율	8.2	10.8	11.1	11	11	10.9	10.9
경상수지 (US\$ m)	-11,119	-193	-1,402	1,211	2,000	2,108	1,72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	2014 (전망)
부채규모 (US\$ m)	173,536	174,864	178,999	184,471	169,657	167,825	160,200
외환보유고 (US\$ m)	33,874	44,183	44,988	48,835	44,670	38,060	39,809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동 기업들은 헝가리 내수 시장 보다는 유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다.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유럽내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생산 거점으로서 헝가리의 수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헝가리의 경상수지는 지난 5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68억2300만유로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0.5월 출범한 헝가리의 현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다. 또한, 2012년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중 제4위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시하시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헝가리와 유망업종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헝가리 자체보다는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지 내지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 경제가 아직 2008년 경제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전역과 항공·철도·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시장의 진출 기지로서 매력적이다. 특히 헝가리는 그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중부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유능한 인력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고급인력의 임금이 서유럽국가의 1/3수준이라는 점도 헝가리가 우리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매력적인 이유이다.

헝가리에는 현재 폭스바겐, GM 엔진생산 부문, 스즈키, 다임러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다임러는 2012년 상반기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생산라인을 가동해 연간 10~12만 대 신차를 생산해내고 있어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이 유망해 보인다.

또한,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Flextronics 등 세계 Top 10 EMS 회사 200여 개의 산업공장이 진입해 있으며, Samsung, GE 등 주요 전자메이커들의 제조공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생산거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헝가리의 전자·전기 관련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헝가리 대학들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많은 만큼, 의약품 개발 및 생명공학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헝가리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현재도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수입업자들에게는 와인, 거위털 제품, 돈육, 그리고 천연 화장수 등의 수입이 유망해 보인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개요

현 집권 오르반 정부는 2010년 출범 이래 각종 증세, 민간 연금 국유화, 퇴직 정년 연장, 실업수당 축소 등 비정통적 조치(unorthodox measures)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왔다.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조세 징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EU집행위 및 경제전문가

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2013년 헝가리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1.11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IMF/EU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2.7월 헝가리 정부는 IMF 측과 1차 협상을 가졌으며, 2차 협상을 2012년 하반기에 개최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3년도 상반기 헝가리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헝가리 정부는 예방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s)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IMF와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2013.7월 공식 발표했다. 이후 헝가리 정부는 2013.8.12부로 IMF 차관을 전액 상환하였다.⁶

헝가리 정부는 잦은 조세제도 변경 및 신규 규제 비판을 고려하여, 2013년 초에 더 이상의 경제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EU의 재정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졸업 가능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헝가리 정부는 2013. 5.10 긴축정책안 및 6.17 세수 확대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였다.(헝가리는 2013.6.21 유럽재무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EDP 졸업)

〈2013.5.10 발표된 긴축정책안〉

- ※ 버거 장관은 2013.5.10 3단계 긴축 정책안을 발표한 바, 1,2단계 조치로도 재정적자를 축소하는데 실패한다면 3단계 조치로 기존에 부과했던 은행 및 에너지 분야 특별세, 은행거래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이후 2013.6.17 발표된 조치를 통해 은행거래세, 특별세 등 인상)
- 1단계 조치: 929억 포린트 상당의 예산 지출 동결
 - 2단계 조치: 진행 중인 정부사업(수도 및 지방의 축구장 건설 사업, 국회 앞 광장의 공원화 사업) 중단으로 600억 포린트 예산 절감

6_ 헝가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stand-by loan)을 125억유로를 지원받았으며, 2010년부터 분기별로 상환해왔으며, 2013.8.12부로 22억유로 상당의 차관을 갚음으로써 전액 상환함.

- 3단계 조치: 특별세 및 은행거래세 인상

〈2013.6.17 발표된 세수 확대 조치〉

※ 버르거 경제부 장관은 2013년 정부예산에서 계획한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낮아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생겼으며, 지속적으로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여 EU가 헝가리에 재정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다시 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수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고 설명함.

(1)(금융거래세 인상) 현금 인출시 0.3%인 금융거래세를 0.6%로 인상하고 거래세 상한액(최대 거래당 6,000포린트)을 폐지. 송금시 수수료도 0.2%에서 0.3%로 인상

(2)(상업은행에 대해 지방정부부채 총액의 7% 상당액을 세금으로 부과) 정부가 인수할 지방정부 부채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업은행으로부터 징수

※ 헝가리 정부는 올해 초 6120억포린트(3조600억원) 상당의 지방정부부채(스위스 프랑 표시 부채)를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로부터 인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상업은행이 정부가 인수할 지방정부 부채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경우 약 430억포린트(2150억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3)(이자소득세 인상) 개인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소득세 세율을 16%→22%로 6% 추가 인상

(4)(통신세 인상) 전화에 대해서 1분 통화당 그리고 메시지 1건당 2포린트에서 3포린트로 통신세를 인상하고 기업용 통신세 기본요금을 현행 매월 2,500포린트에서 5,000포린트로 상향

(5)(광산개발세 인상) 현행 12%에서 16%로 인상

2013년도 하반기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3.10.1부로 개시되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통폐합이다. 오르반 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던 시모르 중앙은행 총재가 2013.3월 퇴임하고, 머물치 국가경제부 장관이 중앙은행 총재로 보직을 옮긴 이후, 헝가리 정부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 통합을 추진해왔

다. 헝가리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는 주요 목적으로 ▲ 금융기관 관리 효율성 ▲ 보다 빠른 위험 예방 ▲ 개별적 혹은 전체 금융체계 수준에서의 위험 및 위기 상황 관리의 수월성 제고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하였다. 헝가리 정부가 EU집행위로부터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통합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 2013.10.1부로 중앙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흡수·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 전자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 다국적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추세로 수요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시장진출 업체의 경우 품질 및 배송(delivery) 경쟁력 향상에 따라 시장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 특히 이 분야는 헝가리 정부가 2009~2012간 TITA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분야 비즈니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서유럽 경기회복시 수입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동차 부품
 - 2012년부터 독일 벤츠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아우디, 오펔 등도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헝가리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신차구입을 미루고 있어 중고차용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 한편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타이어 및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그 외에도 삼양사, 제일모직 등이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브로드밴드 관련 기기 및 셋톱박스
 - 헝가리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IT 인프라 투자 확충으로

지속적인 성장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2010년 아날로그 TV 방송 송출 중단 등 계기를 통해 향후 시장수요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 의료기기
 - 헝가리는 자체생산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의료기기 수요의 50%를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의 병원증설 및 민영화 조치, 건강 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 자금투입으로 인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바, 2009년에는 6억달러 시장규모로 성장하였고 연평균 6.5%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2013년에는 1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주요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MRI, 초음파기기 등의 고가 수출품들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녹색(대체) 에너지(솔라판넬, 풍력 장비, 수처리 장치)
 -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비율 20%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수질관리,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쓰레기 처리 등에 51억유로를 배정하였다.
 - 정부의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사용자에게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유지로 인해 수요기반이 견고할 것으로 보이는 바, 총 51억유로의 금액 중 2.8억유로를 신재생에너지 열전기 생산장비 구입, 지역난방 에너지 공급에 보조금으로 할당하고 있다(총 프로젝트의 10~60%까지 자금 보조)
- 온라인 유통
 - 정부의 ICT 인프라 구축 지원과 산업증진에 의해 시장의 하드웨어가



발전,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현재 시장규모는 오프라인 매출의 3.5% 수준으로 아직은 적지만 소비자의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평균 50% 이상씩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또한 최근 5개년 연속 오프라인 유통점의 감소로 인해 온라인 유통 형태가 소매매출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 헝가리에는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다.
- 헝가리는 이를 바탕으로 중부유럽의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R&D 센터 설립

-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우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리에 연구법인을 운영중이다.
-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서유럽 연구인력 임금의 1/3 수준)이지만 이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료 온천 관광산업

-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 그러한 최근 경기침체로 이들 온천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대규모 관광

시설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헝가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 외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유럽기업들이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 또한 헝가리는 유럽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부 유럽과 발칸 반도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과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관세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해짐
 - 일반제품: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9.1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 제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원재료 수입가능, 자국생산
-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헝가리산 소비촉진이 주목적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유사하다. 상기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가 원칙이나 현재는 의무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 소매체인에서만 할인쿠폰을 사용토록 신규법안 시행

- 헝가리는 소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할인쿠폰인 엘리자베스 바우처(Erzsebet Voucher)를 발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사용처를 자국 소매체인으로 한정하는 신규 법안인 카페테리아 법(Cafeteria Law)을 시행하고 있다.
 - 헝가리 소매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소매체인 보호차원에서 동 법안을 도입
 - CBA, Real 등 극히 일부에서만 할인쿠폰이 사용가능해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음
 - 단, EU법 위반이 지적되면서, 4월부터 외국계 소매체인인 Tesco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소매체인으로 수출되는 우리기업의 제품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Tesco, CBA 체인이 앞으로 큰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 소매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위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E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48.9%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09년 기준 0.5%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평균 MFN관세는 49.4%로 매우 높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며(각 151.9%, 66.6%, 69.3%),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차, 향료, 야채추출물,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정도로 낮다. 이에 2012.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노르웨이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높은 수준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 및 TQR 미소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노르웨이는 농업 부분의 개방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2005.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 부터는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25%의 부가가치세(식료품 15%, 교통 및 서비스 8%)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농산품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inspection)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TA 발효 이후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간소한 편이며,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신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를 2005.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부터 일부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

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노르웨이 SPS 체제가 EEA 협정에 완전히 조화됨에 따라,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8.4%)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농업분야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근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시장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



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 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Norsk Lysingsblad라는 주 2회 발간되는 입찰정보 전문지를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는데, 노르웨이어로만 발간된다. 그러나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보수집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⁷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⁷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 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4.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개개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하다. 외국투자자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상의 문제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 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노르웨이 GATS Schedule of Commitments에 명시) 개인 사업가의 국내 거주 의무는 없으나 사업체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 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5 million NOK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사업체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경쟁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산 연간 매출이 50 million NOK 이상인 합병을 원하는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15일 내, 혹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기업에 관한 예심 판결을 통보하고,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근무일 30일 내 최종 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경쟁청은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다소 미진한 편이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

화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같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입국자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외국인의 원활한 공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노르웨이내 거주지 등록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고 노르웨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 응시 접수시

필기시험(Theoretical Test) 및 학원시험(Traffic School Test)이 면제되며,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3개월간 도로 연수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1회 한하여 발급해 준다. 만약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제되었던 필기시험 및 학원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러시아

최근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재정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GDP(억달러) ¹	5,909	7,640	9,899	12,997	16,608	12,227	15,254	18,991	20,220
- 1인당 GDP(달러) ¹	4,095	5,313	6,913	9,102	11,631	8,568	10,674	13,335	14,247
경제성장률(%)	7.1	6.4	8.2	8.5	5.2	-7.8	4.5	4.3	3.4
물가상승 (%, 소비자)	11.7	10.9	9.0	11.9	13.3	8.8	8.8	6.1	6.6
연방세입 (억 루블)	34,570	51,250	62,789	77,811	92,759	73,368	83,038	113,660	128,583
(GDP 대비)(%)	(20.3)	(23.7)	(23.3)	(23.5)	(22.5)	(18.8)	(18.7)	(20.9)	(21.0)
조세수입 (억 루블)	31,402	31,302	35,957	46,337	52,326	38,965	42,739	58,790	67,374
연방세출 (억 루블)	26,310	35,143	42,848	59,866	75,709	96,368	101,156	109,352	127,711
(GDP 대비)(%)	(15.5)	(16.3)	(15.9)	(18.1)	(18.4)	(24.7)	(22.7)	(20.1)	(21.0)
재정수지 (억 루블)	8,260	16,107	19,941	17,945	17,050	-23,001	-18,118	4308	-128
(GDP 대비)(%)	(4.9)	(7.5)	(7.4)	(5.4)	(4.1)	(-5.9)	(-4.1)	(0.8)	(-0.02)

* 1. IMF database 기준

■ 경상수지·외환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경상수지(억달러)	601	846	947	778	1,037	494	711	988	714
- 상품수지(억달러)	858	1,184	1,393	1,309	1,797	1,116	1,520	1,982	1,923
· 수출(억달러)	1,820	2,438	3,036	3,544	4,716	3,034	4,006	5,220	5,280
· 수입(억달러)	948	1,254	1,643	2,235	2,919	1,918	2,486	3,238	3,357
외환보유고(억달러)	1,245	1,822	3,037	4,764	4,262	4,394	4,793	4,986	5,376
외채규모(억달러)	2,114	2,585	3,097	4,639	4,805	4,672	4,890	5,454	6,378

■ 최근 주요거시지표

(전년동기 대비, %, 천 명)

구 분	'07	'08	'09	'10	'11	'12	'13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8.1	5.2	-7.8	4.3	4.3	3.4	1.4
산업생산 성장률	6.3	0.6	-9.3	8.2	4.7	2.6	0.1
고정자본투자증가율	21.1	9.9	-15.7	6.0	8.3	6.7	-1.4
소매거래량 증가율	15.2	13.6	-5.1	6.3	7.0	5.9	3.7
실업률(기말)	6.1	6.4	8.4	7.5	6.1	5.1	5.4
실업자수(기말)	4,600	5,895	6,173	5,400	4,643	3,825	4,089
소비자물가상승율 (전년말 대비)	11.9	13.3	8.8	8.8	6.1	6.6	3.5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러시아의 WTO 가입

1993.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7월, 러시아와 WTO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국 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 (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12.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2012.8.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입 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제품별로는 IT 제품중 컴퓨터 수입관세가 현행 5.4%에서 3년 내에 관세 폐지되며, 무선전화기는 '13년까지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10%에서 5%로 각각 관세 인하될 예정이다.

■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2018년
TV 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WTO 가입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WTO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교역·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관세동맹 창설

2000.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 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가 창설되었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역내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 설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경제 기구로서, 그간 CIS 국가들이 체결한 다자간 경제협력체 중에서 가장 실질

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이 중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간에는 관세동맹이 창설·운영되어 온 바, 그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0.7월부터 관세동맹 3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서는 역내 통관절차를 폐지하였고, 역외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서는 러시아, 벨라루스 영토내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간에서만 통관절차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11.7.1일부터는 역외 국가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국경간의 통관절차가 폐지되면서 제3국의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관세동맹구역 내에서 세관수속 없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세동맹의 법적근거는 크게 EurAsEc 규범과 3국 관세동맹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EurAsEc 규범은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조약(1999), EurAsEc 설립조약(2000), 관세동맹 국가간 무역구제 메커니즘 의정서(2000) 등 수십 개의 법률문서(협정·의정서·결정)로 구성되어 있다. 3국 관세동맹 규범의 경우에는 관세동맹위원회 조약(2007), 단일관세영역 및 관세동맹 설립조약(2007), 공동관세조정협정(2007) 등 다양한 법적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EurAsEc 규범은 EurAsEc 5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나, 관세동맹 규범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만 적용된다.

공동관세율협정(2008)은 관세동맹의 상품분류목록(HS Code) 전체에 대한 각국의 수입관세가 일치할 때 무역정책수단으로서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가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2009.11월 국가간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되었고 2010.1.1일부터 시행중이다. WTO 자료에 의하면 공동관세는 1만1,170개의 세번(tariff l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종가세가 9,208개, 혼합세가 1,746개, 종량세가 216개에 달한다. 공동관세 중 9,024개는 러시아의 수입관세(2009.11월 기준)와 동일하며, 426개(고기, 치즈, 계란, 쌀, 플라스틱, 섬유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높고, 1,357개(동물, 채소, 화학물품, 금속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낮다.



공동관세는 시행일(2010.1.1)부터 관세동맹 영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2008년 의정서에 의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동맹 회원국이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공동관세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관련 회원국의 국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해당상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개별적인 관세는 일시적이고, 1회 적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회원국의 요청으로 다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동맹 회원국 중 카자흐스탄은 일부 농산품(사과, 배 등), 의약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제품 등 409개의 품목에 대해 2014년까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상기 공동관세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 국제 우주개발·연구 협력을 위한 수입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또는 관세인하를 제공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화물·승객 국제운송수단, 제3국 자연인의 공식·개인용 물품, 인도적 원조로 수입되는 상품, 통화 등 9종류의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간 이사회에 결정에 의해 카자흐스탄은 2010~2019년간 국내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제3국 사탕수수설탕(HS 170111)을 러시아, 벨라루스로 재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을 받고, 그 외의 무관세수입에 해당하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동맹은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두고 있는데, 개도국 수입품의 경우에는 기존 공동관세율의 75%만 적용하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GSP 수혜국과 대상상품은 관세동맹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GSP 수혜국 중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이 high-level income 국가로 분류하지 않은 103개국(한국 포함)이며, 최빈국은 UN 최빈국 목록에 기재된 49개국이다.

관세할당 적용요건 및 메커니즘에 관한 협정(2008)은 단일관세 영역 내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3국 농산품에 대해 기존 공동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할당(tariff quota)을 일정한 기간 이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관세할당의 최대 가능액수는 관세동맹위원회가 단일관세 영역에서

관련 농산물의 소비량과 생산량 간 차이만큼의 수준으로 정하는데 회원국 별 할당분배 역시 해당국가의 소비량과 생산량 차이에 따라 정한다. 또한 관세동맹위원회는 필요시 단일관세 영역으로 유입되는 농산물 수입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자(즉 중대한 제3국 공급자)들과 협의하여 제3국별로 관세할당 분배를 할 수 있다.

관세동맹 역외국가로부터 상품이 수입되거나 역외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이 3국내에서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물품세와 같은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1.1일부터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장되어 있는 암호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세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 관세동맹 위원회 웹사이트(www.tsouz.ru)에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약 2,500개 물품 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바, 세관원은 주로 동 정보를 통해 물품수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 제 27장에 따른 물품의 세관신고에 대한 사항은 화물 경우 통관 과정에도 적용된다. 경우 세관신고는 세관신고들 중 한 종류로 분류되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다르지 않다. 경우 세관신고서에는 관세동맹 상품명 코드에 일치하는 상품코드가 기록되고, 국경을 넘어 화물을 옮길 때 각종 제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경우 세관신고서에서는 러시아 관세법이 규정한 화물 통과 예상 시간은 요구하지 않는다. 경우 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화물 집하 장소에 대해 부과된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통관절차는 통합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바, 기존 러시아 관세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대한 신고서류가 간소화되었고, 가공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출절차가 단순화되었다. 세관신고서는 신고기업(개인)이 거주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은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통관시간을



세관신고 등록시부터 4시간으로 단축했다.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통관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류는 14가지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로 간소화했다. 즉, 세관신고서, 대외적 경제 활동을 확인하는 서류들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들로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리고 대외경제활동에 한해서가 아닌 상품의 처리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 외에 신고자의 관리에 관한 상업적인 서류들, 운송을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서류들, 금지와 제한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상품 종류 코드 서류들, 통관 비용 지불 또는 지불 보장을 확인하는 서류들, 관세동맹 국가들의 외화 법에 따른 외화 규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등 7가지 종류이다. 세관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목록은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에 정해져 있다.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상품의 통관에 있어서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세관이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적 이용을 위해 개인이 상품을 이동하는 것에 관한 관세동맹 통합관세법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법과 별 차이가 없다.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운영을 위해 2010.7.6부터 시행된 통합관세법 부속 협정서 Appendix 3, 4 등에 의거하여, 영구거주 허가(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민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이삿짐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체결 3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차량, 에탄올 제외)으로서 1,500유로 또는 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30%의 종가세 또는 킬로그램당 4유로 중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보석, 카메라, 랩탑,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 21개 기존 사용한 중고물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바, 우리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의 이사화물 또는 휴대 반입화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류, 식품류, 의류, 가구, 주방·욕실용품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정부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이 반입하는 이사화물(중고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는 수량 및 개수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청 중이다.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면 세관신고서

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세관 조사도 거치지 않는다. 단, 공항 내부의 국제 구역에 들어와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관세동맹 국가들간의 항공여행객들은 내국을 이동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지하고 있는 화폐의 액수에 관한 관세동맹 국가간 국경선에서의 조사는 관세동맹 3국간 이동시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법적으로 여행자 수표를 포함하여 1만달러까지 현금으로 소지하고 갈 수 있다. 이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원은 그 출처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세동맹 역내이동시 화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의 세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현금에 한해서만 조사되고,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무기, 마약류 등 특별히 금지나 제한이 따르는 물품은 관세동맹 역내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관세동맹 발족으로 통관처리기간은 통관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서 1일로 단축되었으나, 세관은 필요시 내부결재를 거쳐 10일까지 연장가능하며 이에 대해 법원 등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관세법은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통관신고시 세관원은 2시간 내에 접수하든지, 문서로 통관신고 접수를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러시아 통관절차의 이용 편의성은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통관검사(inspection)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 3%이하, 영국 2%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통관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간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들의 0.5% 정도만 특별 단순 통관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러 연방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 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러 정부는 2012.5.3일 전략기획청 주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통관서류 축소, 통관소요기간 단축, 통관비용절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통관서류 축소는 수입통관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에는 4개로 줄이고, 수출 필요서류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2년 평균 36일에서 2018년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기준 1컨테이너당 1,800달러가 소요되는 수입통관 비용은 2018년까지 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통관시 소요되는 비용도 2018년 900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WorldBank에서 2013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을 보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85개국가중 국경통관부문에서 162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을 보면 필요서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개 늘어났으며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전히 평균 36일로 조사되었다. 수출통관시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36일에서 21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년간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12년	2013년
순위		160/183	162/185
수출	필요 서류	8개	8개
	소요시간	36일	21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50	2,820
수입	필요 서류	10개	11개
	소요시간	36일	36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00	2,920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2, 2013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

을 해당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통관절차는 외국기업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자주 거론하는 애로사항의 하나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느린 것은 물론이고 담당자의 규정적용이 자의적이며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완 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이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으로 발생해 러시아 관세청과 우리기업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2010.1월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관세동맹 역내로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 산정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간 협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관세가격은 우선 수입하는 상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상품이나 그와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가격이나 동 제품의 관세동맹내 판매가격을 준용하거나 상기한 여러 가격을 결합하여 적정한 관세가격을 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여전히 각국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일선세관에서 수입상품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수입통관에 있어서 러시아 관세청의 일관성 없는 상품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물품이라도 대량구매 시 신고가격보다 낮게 구입이 가능하나 일선세관에서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에 관한 여러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선 세관들은 국제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다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거래 및 판



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선세관에서 수입가격 결정시 사용하는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세관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낮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통관이 어려우며, EDI 통관시에도 일반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을 위해 송장(invoice)과 물품명세서(packing list) 등은 러시아어와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2011년 9.68%이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2015년까지 5.94%로 인하되며 조정시기는 매년 9.1일로 결정되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 9.1일에도 WTO가입에 따른 점진적 관세인하가 단행되어 전체 관세동맹 관리 대상품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100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 그러나 인하폭은 품목별로 1~3%에 그쳐 크지 않았으며, 생선, 과자류, 주스원료, 청소기계, 트랙터, 일부 섬유 및 의류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달 장벽

현행 정부조달은 2006.1.1일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 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 정부, 시 등이 10만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동법에 따른 정부조달방식은 경쟁(Tenders), 경매(Auctions),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으로 나뉘어진다. 참고로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연방정부(www.zakupki.gov.ru)와 지역정부(예; 모스크바 www.tender.mos.ru)는 각각의 공식 웹사이트에 각 품목별 조달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공식 발간지인 Konkursnye torgi (www.gostorgi.ru)에도 게재토록 한다. 조달계획 공고 후, 해당 프로그램별로 5인 이상의 조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입찰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경쟁’과 ‘공개견적요청(Open re-

quests for quotation)’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구법에서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러시아에 자회사를 등록하거나 러시아 에이전트를 통해 응찰(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참여) 가능하나, 청산·파산 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채납액이 일정 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참여)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조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쟁(Tenders)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봉 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는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 확정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 대상 응찰서류를 대상으로 기능, 품질, 유지관리비, 제공 조건 및 기한, 사후보증,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결정내용은 1일 이내에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게재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입찰과 관련된 서류, 심사관련 음성기록, 위원회 의사록 등은 조달기관에서 3년 이상 보관하게 된다. 탈락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최초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탈락업체들의 공탁금은 5일 이내에 돌려준다.

경매(Auctions)는 현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네덜란드식 경매 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고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 가격에 의해



서만 수주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 물품, 서비스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웹사이트에 경매 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 가격, 응찰 공탁금(최대 5%, 단 전자경매는 0%) 등이 공고된다. 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검사 후 경매 참가업체에 대해서 결과를 개별통지 및 웹 사이트에 게재한다.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주업체는 계약서 서명을 하고 시작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다. 50만루블(또는 EUR 15,000)보다 적은 금액의 경매는, 공식웹사이트 상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루블(또는 EUR 7,500)을 넘지 않거나, 시작가격이 25만루블보다 낮은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응찰서류를 접수하면서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를 검토하여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새로운 조달법에 따라 외국기업들에게도 이론적으로 러시아 정부조달시장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계획이 통상 러시아어로만 공개되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며 모두 러시아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러시아내 기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평가이다. 따라서 러 정부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진출단계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러시아의 믿을 만한 파트너를 확보한 후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2007.10월 통화거래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주요한 규제는 남아있다. 거주자(residents)는 러시아 시민, 거주허가를 가지고 영

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개인들,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법인체 등으로 규정된다. 거주자간의 거래는 은행과의 외환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루블화로만 가능하다. 거주자간의 외환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직계가족과 친인척간의 거래로 국한되며 해당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에 관계증명을 제출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중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개인이 현금을 소지하여 반입할 경우 미화 10,000달러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금을 소지하여 반출시에는 3,000달러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0달러 초과 10,000달러 이하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10,000달러 초과금액을 미신고한 후 적발될 시 벌금부과액이 소지금액의 3/4), 당초 반입시 신고 등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08.1.1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은 기준금액 15,000루블이하의 거래(무통장송금 및 환전)는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없이 가능하며 비현금거래의 경우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여권정보(성명, 주소, 출생지 및 출생일자)입력이 필수사항이다. 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납세자 번호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부문에 대한 불신과 조세 문제로 수입상들은 L/C 거래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인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대금결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금융제도 미흡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바이어가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바이어가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어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상의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는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중재법원을 이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SGS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GOST 인증을 대행할 경우 비용 지불 주체에 따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바,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 업체 명의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es),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다.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정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단순 착오시에는 미납세금의 20%,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미납 세금의 4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유아용품·의료용품·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제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과세율 13% · 관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산세: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세 · 개인자산세

■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세금	세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 0%이며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 9%, 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 등 35% 비거주자: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면세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용도·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잼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2007.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법률에 의하며 과세 목적상 러시아내 거주 개인(tax residence)이란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과세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최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이민법에 따라 고숙련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 자진신고서는 매년 4.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미만이라도 1백만루블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외국회사를 포함한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급여지불이 러시아 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3년 현재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간소득 512,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2012년 1.1일부터는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	22.0%	2.9%	5.1%	-	30.0%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비상설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제운송수단의 운송·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러시아내 비상설 외국법인에 대해 지급하는 러시아기업 또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permanent establishment)이 지게되며 소득지급 후 3일내에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최고 관련금액의 20%에 달한다. 비상설 외국법인이 소득수취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통보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다.

원천징수세는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 조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 원인이 되는 지급(거래)발생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가의 과세목적상 등록법인(tax resident)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Deloitte가 발간한 'Doing business in Russia 2009'에 의하면 실제로는 러시아 세무당국이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도 조약에 따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후 1개월 내에 환급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환급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조속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 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외국법인이란 외국 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발효되었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시아 기관, 러시아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기관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2만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금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

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1월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1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비용발생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었으며 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인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기업자산세(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과세표준은 대차대조표상 연간 평균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지방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는 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기업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되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는 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법은 상업 법인이 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 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가입부터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서비스,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1) 은행업

2013.7.31일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등에 등록된 금융기관은 1,085개로서 2012년말 대비 9개가 감소하였다. 2013.7.31일 기준 영업 중인 금융기관은

951개이다.

2013.7.31일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52.7조 루블)의 51.3%(27.0조 루블)를 보유하고 있으며, 6~20위 금융기관이 18.8%, 21~50위 금융기관이 11.6%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개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1.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존에 연방금융시장 감독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이 담당하였으나 2013.9.1부터 중앙은행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20%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3.7월말 현재 러시아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22개이며, 이 중 77개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이다.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사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11월), 우리은행(2003.6월)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2013.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는



행은 2007.12.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1.9일부터 자본금 16.7백만달러, 직원 29명 규모의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

외환은행도 2008.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2013.7월말 현재 2014년에 대표사무소를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여 러시아내에서 은행영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준비중에 있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9.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이 49%이 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이상이 될 경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규제당국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CIS지역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러시아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MICEX는 동유럽 및 CIS 지역의 최대 외환 시장이다.

RTS는 '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RTS지수는 러시아 Leading index이다. MICEX와의 차이점은 RTS 주식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2011.6.29일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인 MICEX와 러시아증권거래소인 RTS는 합병을 결정하고 Moscow-Exchange로 거듭나고 있다.

경제현대화를 국정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전 대통령)는 모스크바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키워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합병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MICEX에 따르면, 상품거래, 파생상품,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수익개선을 통해 현재 46억달러의 자본을 3배 성장시켜 홍콩, 미국 다음 가는 증권거래소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4) 보건제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방 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판매·사용은 러보건부에 등록된 이후에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품 제조에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는 관세동맹국가내에서 적절하게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 170억달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말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금액	47	60	67	78	91	107
지출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상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

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 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장벽

TBT 관련 인증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군은 다음과 같다.

금속 제품(동, 알루미늄, 철, 금속제품 등), 기계류(원자로, 보일러, 각종 제품생산기기, 후 가공기기, 기타 기계 부속품 등), 난방기기/설비류,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류, 식품류(육류, 패류, 채소류, 과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 등), 화학제품(비료, 세제류, 기타 화학제품, 고무 및 고무제품 등), 목재류(원목 및 가공품 등), 신발류, 의류 및 편물 제품, 지상운송 기기류, 가구 및 가구 부속품류, 스포츠 용품류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적합성 선언에 해당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유아용 제외), 경공업 제품(유아용 제외), 향수·화장품, 가정용 화학 제품, 비료, 페인트, 니스,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 저전압 엔진, 배터리, 절삭도구, 레버 렌치를 제외한 렌치, 기술적 처리(나노미터, 신호 장치, 가스, 수압등 분석기)의 제어 장치, 이동형 장치, 광학장치, 인쇄 기기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등에는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3국 관세동맹간의 공통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 인증이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써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으로서 2013.2.14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5.3.15일부터 기존 인증(GOST-R, 기술규제)을 일률적으로 대체기로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

지식재산권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권 등을 제때에 등록해 둬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러시아의 WTO가입('12.5월)전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의 이행을 요구해 러시아는 2012.8.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2월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권, 특허권 관련 외국회사들의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12년말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러시아편)’을 발간하였으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http://www.ip-navi.or.kr>)에서 인터넷판 열람 및 모바일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농업 보조금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2012.12월말 러시아 정부는 ‘2013-2020 러 연방 농업발전 계획’에 따라 2013년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7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곡물 및 우유 생산, 지역 개발, 금융대출 이자, 보험, 농업용 기계 생산, 특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63억루블(34억불)로 연방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장단기 금융대출 이자 지원에만 582억루블(18.8억불)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WTO 가입 후 처음 지급되는 2013년도계획만큼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지급액은 2012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이다.

러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당

연히 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호 무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8월 WTO 가입으로 SPS(식품 및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검역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

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환경 분야

러시아는 산업폐기물(HS 코드 2618-2620, 3915)의 경우 수입허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통관전 환경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2012.7월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 생산·소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이 개정되어, 2012.9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 부담금(recycling fee)이라는 명목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 자동차의 연식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높아진다.

동 법률상 예외는 △ 국내 생산된 자동차, △ 관세동맹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2012.9월 이전에 러시아 내에 등록되었거나 이후 재판매되는 자동차 등이다.

벨라루스

주요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규모(억달러)	453	608	493	547	493	632
실질경제성장률(%)	8.6	10.2	0.2	7.6	4.5	1.5**
수출액(백만달러)	24,275	32,571	21,304	25,284	40,294	45,991
수입액(백만달러)	28,693	39,381	28,569	34,884	45,747	46,404
무역수지(백만달러)	4,418	-6,810	-7,265	-9,600	-5,453	-413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952	2,687	4,831	3,431	2,986	7,388*
연중 환율(1달러당 벨라루스 루블)	2,146	2,136	2,793	2,979	5,606	8336
소비자물가상승률(%)	8.4	4.8	12.9	7.8	15.0	21.8
총외채잔액(백만달러)	12,548	15,168	21,099	27,065	29,856	34,116
단기외채(백만달러)	6,394	6,553	7,230	7,543	-	13,240
총외채잔액/GDP(%)	7.7	4.9	42.8	49.5	60.6	54.0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위원회, 벨라루스 중앙은행(2012.12.31 기준)

* 외환보유고 통계는 2013.9월 기준(외환 및 금 포함)

** 벨라루스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2년 GDP 성장률은 1.5%이다. 벨라루스 정부는 GDP를 달러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벨라루스 루블화로 발표된 공식 GDP(약 632억달러)를 당시 인구(946만명)로 나누어서 계산된 1인당 GDP는 약 6,660달러로 추산된다.

경제 · 통상 환경 개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EU가 교차하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서 구소련 시절 제조업 중심지이자 동유럽 지역 굴지의 공업지역이었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 국가들이 민영화 및 시장경제 지향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5~8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시설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벨라루스의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일정한 장애가 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하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화폐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외화유입,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나, 기술발전이나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복과는 거리가 먼 단기적인 경제회복이라 국내외 경제연구 기관들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창설(2010.7월)에 이어 공동시장의 성격을 갖는 단일경제구역을 창설하여(2012.1.1일) 1억7천만명의 거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기대된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EU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와 EU를 연결하는 철로 또는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따라서, 벨라루스와 EU의 관계 발전에 따라 벨라루스는 향후 EU와 러시아·CIS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기업활동 환경에 있어 벨라루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비교적 예측가능한 행정체계, 저렴한 유가,⁸ 비교적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⁹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그룹이 발표하는 2013년 기업환

8_ 2013.10월 기준으로 리터당 1달러 미만이다.

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벨라루스는 185개국 중 58위¹⁰를 기록하였는데, 편리한 재산등록(3위), 편리한 창업(9위), 계약집행 수준(13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력획득(171위), 국제거래(151위), 납세의 불편함(129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하는 2013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벨라루스는 5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CIS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벨라루스의 인적자원이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벨라루스의 대외무역 상대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약 47%를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을 포함한 CIS 국가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와의 무역도 왕성하다(EU는 벨라루스 대외무역의 약 30% 차지).

대벨라루스 무역에 있어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EU와 미국의 대벨라루스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벨라루스 기업과 무역할 경우 EU나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오해이다. EU나 미국의 대벨라루스 제재는 EU나 미국에 소재한 벨라루스 제재대상자 및 기업¹¹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관련 인사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일 뿐이며 제재대상 기업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인 또는 기업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EU와 미국의 기업들도 벨라루스와 활발한 무역 활동 진행 중). 따라서, 우리 기업은 벨라루스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¹²

9_ 2013.4월,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00달러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였다.

10_ 동 순위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경제국가들의 순위보다 우수함은 물론, EU의 이탈리아보다 높고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11_ 2013.10.21일 기준으로 EU의 대벨라루스 제재대상자는 개인 242명과 기업·단체 30개소, 미국의 대벨라루스 제재대상자는 개인 10명과 기업·단체 8개소이다. 주로 부정선거 또는 인권탄압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기관 및 경찰기관 인사,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재정후원 인사 및 기업 등이다.

12_ 다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량파괴무기 확산이나 테러지원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거래는 유의해야 하는데, 벨라루스와의 거래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국-벨라루스 교역 현황

한국과 벨라루스의 교역은 아직 1억달러 미만¹³의 낮은 수준이지만 벨라루스와 유라시아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TRA 민스크무역관이 조만간 정식 개소할 예정인 바, KOTRA 민스크무역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벨라루스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출	금액	53,338	23,796	39,171	58,445	43,937
	증가율	52.1	-55.4	64.6	49.2	-24.8
수 입	금액	16,361	8,374	30,093	9,215	38,086
	증가율	19.7	-48.8	259.4	-69.4	313.3
총 교역	금액	69,698	32,170	69,264	67,660	82,023
	증가율	44.5	-53.8	115.3	-2.3	21.2
무역수지		36,976	15,422	9,078	49,230	5,850

자료출처: KOTIS

■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주요 교역 품목(2013년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품 목	금 액	증가율
	총 계	43,937	-24.8	총 계	38,086	313.3
1	자동차	7,224	-52.1	칼륨비료	29,991	4,700,746.9
2	평판디스플레이센서	5,047	34,582.2	반도체	4,911	5.0
3	농약및의약품	2,743	59.7	광학기기	496	-20.6

유의해야 된다. 이에 대한 상세사항은 전락물자관리원 홈페이지 www.yestrad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창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벨라루스에 수출된 물품들은 대벨라루스 수출 품목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한-벨라루스 무역 현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품 목	금 액	증가율
4	전자기기	2,627	100.9	유리제품	465	-30.9
5	건설기계/광산기계	2,419	128.2	인조서류방적사	436	84.4
6	석유화학합성섬유	2,317	-88.7	토지측량기	285	-
7	플라스틱 제품	2,142	384.7	계측제어분석기	226	-56.2
8	압연기용접기 및 구조설비	2,081	268.9	식물성식품	217	572.9
9	고무제품	1,691	126.5	의료용기기	187	18.2
10	자동차부품	1,594	-0.2	공구	165	2,273.5

자료출처: KOTIS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2010.1월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역외 제 3국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국 단일경제구역 출범(2012.1.1일) 이후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¹⁴는 회원국의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상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일시적 관세율 인상조치는 주로 과일 류, 야채류 등 일부 식료품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동맹 역내로 수입되는 축 산·육류에 대해서는 관세쿼터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바, 동 제도는 상품이 쿼터로 정해진 수입물량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는 규정보다 인하된 관세율 을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¹⁴ 이러한 권한은 종전에는 관세동맹위원회의 권한이었으나, 단일경제구역 출범 이후 2012.2월에 유라시아경제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상품 원산지에 따른 제약사항

상품 원산지에 근거한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제, 독점무역권, 6개월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 등이 있다.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 회원국간, 그리고 회원국내 각 경제주체 간 수출입 물량 할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국산 상품으로 관세동맹 지역을 경유하여 관세동맹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독점적 수출이 인정되는 품목은 칼리비료(포타슘 비료)이다(국가의 독점수출).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를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 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간 유효한 1회성 허가(One-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세제상의 제한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류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정상품의 대량수입이나 해당 상품의 수입조건으로 인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 및 산업부문에 금전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반덤핑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외국정부 혹은 외국정부 연합체가 對벨라루스 수출상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기업 및 산업부문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자국 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해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혜관세 제도

2010.1월 이후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49개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거나, 관세동맹 회원국 역내에서 통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제한 품목)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 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다.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 관세동맹 외부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 광물자원류
- 항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표준, 인증 관련 장벽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건강·인간의 유전자·재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관세동맹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관세동맹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일부 예외가 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을 위한 24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 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유사한 편이다.

관세동맹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는데, 2013.1월 기준으로 벨라루스 제품 90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에 등록되어 통관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관세동맹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관세동맹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으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011.6월 아래와 같은 투자자 우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임대 계약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대한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무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 인이 아닌 제 3국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면제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시 납부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벨라루스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의 보호를 받으며 외국인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벨라루스 하원은 경제부가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공사(IFC)와 공동으로 개

발하여 제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안을 심사중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와 벨라루스 정부간 분쟁 발생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법정을 구성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벨라루스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외국인 투자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와 동 투자자 소유의 자회사는 보험사 설립자금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해당 투자계획의 산업부문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동 투자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 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무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경쟁정책

벨라루스 정부는 원칙적으로 생산 및 판매 독점행위 등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반독점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에 따라 국가의 결정이나 법에 의해 독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벨라루스 정부는 상품시장의 효과적 작동과 기업간 선의의 경쟁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반독점 규제조치를 시행한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반독점법 위반사례 적발·근절, 위반자에게 법에 의거한 책임 부과
- 국가기관과 독점적 기업의 가격담합 등 독점적 지위 악용의 근절
- 벨라루스로의 자유로운 상품운송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철폐

벨라루스 정부는 상품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지배적 지위 발생이나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본금 지분과 주식 지분 양도거래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관련 문의처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영문명: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주업무: 투자자에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투자자와 벨라루스 국가기관과의 협력 도모, 국가자산과 국영기업의 매각(주식판매) 및 민영화 관련정보, 입찰정보 등 제공

홈페이지: <http://invest.belarus.by>

전화번호: +375-17-268-0465, 375-17-267-9184

이메일: agency@invest.belarus.by, minskinvest@tut.by

세르비아

거시경제 일반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과감한 국영기업 민영화, 기업 구조조정, 낙후 법제 정비, 기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2004~08년 동안 연 4.6%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고 동 기간 동안 일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2009년부터 세르비아 경제는 부진을 보인 바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외자도입, 외국기업 투자 환경 개선, 기업 관련 각종 수수료 폐지 및 세금 감면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12년 세르비아 경제는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분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1.7%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2012.5월 총선 및 대선에서 중도 민족주의 노선의 야당이 여당을 누르고 집권하였다. 현 정부는 EU 가입 추진, 서방 기업 투자 적극 유치 등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영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만성적인 재정적자 축소 등 지난 정부 8년 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MF는 2013년 세르비아 경제가 농업부분 회복, 2012년 Fiat사 자동차 생산

개시 등으로 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UAE 등에서 차관을 도입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투자 신인도 개선을 위해 IMF와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도입 문제를 협의 중이다.

■ 거시경제 지표

항목(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백만 EUR)	32,668	28,957	28,006	31,470	29,933	-
1인당 GDP (EUR)	4,445	3,955	3,841	4,336	4,134	-
실질GDP 성장률(%)	3.8	-3.5	1.0	1.6	-1.7	-
수출액 (백만 EUR)	7,429	5,961	7,393	8,441	8,837	6,083 (1-7월)
수입액 (백만 EUR)	16,478	11,505	12,622	14,250	14,782	8,731 (1-7월)
무역수지 (백만 EUR)	-9,049	-5,543	-5,229	-5,809	-5,946	-2,647 (1-7월)
순 FDI (백만 EUR)	1,824	1,373	860	1,827	232	294 (1-6월)
외환보유고 (백만 EUR)	8,162	10,602	10,002	12,058	10,915	10,720 (7월)
대외부채 (백만 EUR)	21,088	22,487	23,786	24,125	25,721	26,072 (6월)
평균환율 (RSD/USD)	55.76	67.47	77.91	73.34	88.12	85.55 (1-7월)
평균환율 (RSD/EUR)	81.44	93.95	103.04	101.95	113.13	112.24 (1-7월)
평균물가 상승률(%)	12.4	8.4	6.5	11.0	7.8	10.8 (1-7월)
실업률(%)	13.6	16.1	19.2	23.0	23.9	24.1 (7월)

※ 출처: 세르비아 재정부, 세르비아 중앙은행, IMF

2012.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세르비아는 2013.9월 EU와의 안정제 휴협정(SAA)이 발효되었고, 2014년 초부터 EU 가입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

므로 지난 몇 년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참여가 확정된 러시아의 유럽 향 가스관 사업(South Stream)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는 아직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산가공물, 낙농품, 광물자원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르비아가 EU와 체결한 안정제휴협정(SAA), 여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무역액에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80%를 훨씬 상회한다.

- SAA: EU 28개국 * 기존 잠정무역협정은 SAA로 대체
- CEFTA(Central Europe FTA): 발칸 지역 6개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으로 회원국 자격 상실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러시아, 터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개별국과 FTA 체결

한편, 미국은 세르비아산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유치 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0.5월 제정한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법(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2012.3월 개정하였다. 동 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혜택

외국인이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및 관광업에서 표준적인 신규 (greenfield) 및 재개발(brownfield) 투자시 세르비아 정부에서 일자리 하나 창출 당 4,000유로(개정 전은 2,000유로)에서 10,000유로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3년 이내 지원

※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기한이 특정되지 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투자 기간 중 상시 고용규모 유지
대규모·중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금융 패키지 지원 가능

- 2억유로 이상 투자하고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르비아 정부가 총 투자액의 17%까지 지원
- 1억유로 이상 투자하고 3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르비아 정부가 총 투자액의 17%까지 지원
- 5천만유로 이상 1억유로 미만 투자하고 3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르비아 정부가 총 투자액의 20%까지 지원
- 3천만유로 이상 투자하고 1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르비아 정부가 총 투자액의 17%까지 지원

세금 혜택

법인소득세(15%), 개인소득세(12%), 부가가치세(18%에서 2012.10월 20%로 상향 조정)는 동유럽 최저 수준

법인소득세 면제/감면

- 고정자산에 8억디나르(약 800만유로 상당)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 시: 10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 과세 기간에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의 20~80% 법인소득세 감면 가능
- 사용권, 채굴권 활용 투자 경우: 5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손실 이월 공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5년 간 이익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발칸지역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유럽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유럽, 터키,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인 세르비아는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동남부 유럽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유럽 및 중유럽, 남부 유럽을 잇는 pan-European Corridor 고속도로 2개(10번 및 7번)가 세르비아를 관통하고 있으며,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유럽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부다페스트 384km, 비엔나 612km, 뮌헨 930km, 프랑크푸르트 1,282km, 파리 1,500km, 암스테르담 1,721km, 소피아 403km, 부카레스트 641km, 아테네 1,132km, 이스탄불 980km임.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2.5월 출범한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 일환으로 EU 표준에 따른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EU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 높고 저렴한 인적 자원

세르비아는 기술 및 언어(영어) 능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평균임금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세르비아의 평균 총 월임금은 508유로로, 크로아티아 및 체코의 50% 수준이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

리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세르비아인의 근로 의욕 및 노무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가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

세르비아의 EU 가입 이전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EU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EU의 장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르비아는 유럽 지역 내 투자 유망지로 볼 수 있고, 세르비아의 EU 가입이 예상되는 2010년대 말 이전이 투자 최적기로 판단된다.

통상환경 일반

세르비아는 과거 관료의 부정부패 영향으로 관세행정에 문제점이 많았으나, 2000.10월 민주정권 수립 이후 금전등록기 사용 의무화, 2005.1월 부가가치세 부과 실시 등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관 통관업무가 엄격히 강화되고 있다.

또한,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고, 정부기관 업무수행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기업 민영화, 각종 인허가, 수입 통관 등의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세르비아 진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세르비아 정부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이 외국기업의 對세르비아 투자 장애 요인임을 인식, 척결 또는 개선해야 할 다음 5대 과제를 선정,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 부패
- 정부 관료주의 비효율성
- 과세제도 복잡성
- 사회 기반시설 부족
-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임의성

수입 관련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이전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과세가능한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는 원료와 원부자재 등은 최저 관세율인 1~5%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폴

리에틸렌, 기계류 등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과 같다.

■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자동차	20%	폴리에틸렌	5%
냉장고, 세탁기	10%	광학, 사진, 의료기기	1.87~2.67%
에어컨	5%	기계류	1%
휴대폰	15%	직류, 섬유원료	1~10%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VAT)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료품과 일간지 등의 경우 8%,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담배, 주류, 커피, 음료수 및 음료 원료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품세(excise tax)와 행정세를 통관 시에 부담해야 한다.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

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자동차 수입 규제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세관은 통관 시 차량 검사, 관련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을 EU, FTA 체결국,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Preferential Status)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Preferential Status)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와 관련,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은 “Form A”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되어 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으며, 상당 내용은 EU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에 개정된 법은 세르비아 내 기업들에게 20%까지 특혜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르비아 조달청은 2011년에는 2천8백만유로, 2012년 상반기에 6천8백만 유로 상당의 협상절차에서 부정(irregularities)을 탐지하였다. EU는 세르비아 정부가 정부조달의 법적체제를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협상절차 활용에서 부정을 회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세르비아 정부조달 법제와 이행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 정부 내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는 지식권리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2009년 집적회로 배치 보호법은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적과 관련 없이, 개인과 법인은 세르비아 내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보호,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 형사재판을 통한 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EU법과 합치한다.

세르비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최근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EU는 세르비아 경쟁법 위반 처벌 시효가 3년으로 짧은 점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하였다.

부동산 규제

기본소유권법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외국 법인은 상업용 사용과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동산만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부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부동산 시장가치의 5%)와 자본이익세(실현된 이익의 14%)가 있다.

현지 법인 설립절차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구좌(잠정) 개설 및 소정 금액(유한회사 500유로, 상장회사 1만유로)을 기탁하고, 기업등록청을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정관 양식서에 회사명, 회사 주소, 주주명, 자본금 내역을 기재한다.

다음으로 회사 소재지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법원 공증을 받으며, 기업등록청에 가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회사 소재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등록을 하고, 산업재해청을 방문, 피고용인 사회보장세 납부를 위해 연금 산업재해보험국에 등록하며, 마

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구좌를 개설한다.

그러나 최근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6월에 종결하여 아직 상기와 같은 복잡한 법인설립절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등록청에서 One-Stop Shop 방식에 따라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대폭 간소화되었다.

기타 장벽

외국인 체류 및 이동에 관한 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 체류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부서(내무부 외국인 담당국)에서 임시 거주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임시 거주허가를 얻은 자는 통상 1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스위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9.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부과금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제성 부과금은 현재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

외국으로부터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원칙(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국 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2000년 이후 스위스 정부에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 이 SEV 인증제도는 스위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품목 그룹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유럽공동체(CE) 마킹제도의 규격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1996.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바,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3.1센트, 디젤은 75.9센트, 경난방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받은 교통 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₂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1990년 대비 2006년 6% 감축, 감축 불가 시 2008년부터 CO₂ 배출 톤당 12프랑 부과, 2007년 10% 감축과 2008년 13.5% 감축 미달성시 2009년에는 24프랑, 2010년에는 36프랑으로 각각 증액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CO₂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0.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CO₂ 1톤당 36프랑의 CO₂세가 부과되고 있다.

CO₂세는 관세청이 수입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집행하고, 유해한 CO₂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는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불런스 등의 차량, 운전 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기타

1996.1.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12.1월부터 2013.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23만 프랑, 건설분야는 870만 프랑 그리고 물·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기관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 서비스와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rev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 공고는 연방건설물류국(www.gimap.admin.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련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적재산권기구(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 규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한규정(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1.1일부터 이사회 멤버 중 적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는 상관없으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지사상의 경우에는 평균 12.1%(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국인은 스위스를 떠난 후 1년 이후에 청구 시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02.9.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하나, 현재까지 동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 국내법 개정으로 1999.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게 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 간 외국인 사업자(자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 그리고 북미지역 국민과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스위스시장 특성(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00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7만9천달러대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ux), 이베체(IWC), 오메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슈 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게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콕(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2013. 3.27일 EU집행 위원회가 발표한 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서는 스위스가 다른 EU 국가들을 혁신면에서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그룹의 규모는 스위스 전체 은행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BS는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및 채권거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개인·기업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답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의 지급보충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govern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ion)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스위스 경제동향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스위스 경제도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침체국면이 지속되었으나 2009년말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세 시현

2011년에는 스위스 최대무역대상지인 유로지역의 채무위기, 스위스프랑의 초강세로 스위스 수출이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스위스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

- 2009년도 경제성장률: -1.9%
- 2010년도 경제성장률: 3.0%
- 2011년도 경제성장률: 1.8%
- 2012년도 경제성장률: 1.0%

2012년 초반만 해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유로지역 채무위기가 2012년 중반에 들어서 그리서, 스페인 등에서 채무문제가 다시금 심각해지면서 유

로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 중이다. 스위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이중 유로지역으로의 비중이 높아(스위스 수출의 60%, 수입의 80%)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는 스위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 달러에 대해 스위스프랑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면서 스위스프랑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이 스위스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물가 및 고용시장 안정에 기반을 둔 경고한 내수시장 덕택에 2012년 전체적으로 1.4%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었으나 스위스 경제부에서 2012.9.1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이어 2012.12.13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2년 경제 성장률을 1.0%로 수정 발표하였다. 스위스 경제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 활발한 내수경기과 민간소비 증가로 밝은 경기를 전망하며, 2013년 경제성장률을 1.8%, 2014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수정 발표함(2013.9.19).

대외무역에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수출 및 수입이 약간 증가했었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11년 수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979억스위스프랑, 2012년도 수출은 1.4% 증가한 2,006억스위스프랑 기록, 이후 2013.8월 전년도 대비 -8.4% 감소함
- 2012년도 무역수지는 238억스위스프랑의 흑자를 기록

한편, 2008년 이후의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인해 스위스의 실업률이 2009년에 3.7%, 2010년 3.5%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 와서야 실업률이 2.8% 수준으로 떨어져서 2012년까지 2.9%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에 고용률이 일자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2013.8월 전년동기 대비 0.2%증가한 3%이며(여타 유로권 선진국들의 평균 실업률은 9.8%), 스위스 정부는 2013년 및 2014년도 실업율을 3.2%로 전망.

※ 스위스의 주요 경제지표(2012년말)

- GDP: 5,918억 스위스프랑(CHF)
- 1인당 GDP: 73,947 스위스프랑(CHF)
- GDP 성장률: 1.0%
- 실업률: 2.9%
- 수출: 2,006억스위스프랑
- 수입: 1,767억스위스프랑

참고자료: 한·스위스 교역현황

한·스위스 간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341	-15.5	370	8.2	1,130	205.9	401	- 64.5	778	178.4
수입	1,663	-13.0	2,003	20.5	2,555	27.6	2,581	1.0	1,754	1.7
무역수지	-1,322		-1,633		-1,4		-2,179		- 97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품 목	2012	2013.8월
1	선박	87(-88.0%)	597(940.7%)
2	승용차	108(-22.9%)	51(-29.1%)
3	기타석유화학제품	13(-3.3%)	10(33.2%)
4	기타플라스틱제품	7(7.5%)	8(74.3%)
5	그림	4(-54.7%)	7(101.0%)
6	시계	7(144.1%)	7(48.4%)
7	의약품	7(-62.0%)	7(174.7%)
8	인쇄회로	7(-15.4%)	5(-1.8%)
9	타이어	7(31.3%)	4(-32.7%)
10	염료	7(38.6%)	4(-24.8%)
	총 계	402	77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스위스로부터의 우리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품 목	2012	2013.8월
1	시계	374(12.5%)	250(6.0%)
2	금	344(118.3%)	226(2.3%)
3	의약품	350(-5.5%)	198(-16.5%)
4	펌프	103(-29.3%)	95(18.7%)
5	금속절삭가공기계	102(-7.8%)	89(20.4%)
6	의료용기기	63(-9.1%)	44(5.3%)
7	원동기	23(-75.0%)	39(108.4%)
8	계측기	47(-2.8%)	34(5.1%)
9	귀금속장식품	37(65.8%)	32(45.0%)
10	기타정밀화학원료	50(6.1%)	30(-7.4%)
	총 계	2,581	1,75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對스위스 투자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전체 누계
신고건수	10	12	12	13	5	116
신고금액	5.8	43.8	16.8	16.1	48.1	302
투자금액	5.8	11.5	26.9	9.0	13.8	211

자료원: 수출입은행

■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전체 누계
신고건수	23	25	28	39	41	14	636
신고금액	63.9	60.8	85.0	188.3	144.2	25.7	2,134.5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터키

터키는 유럽 인구 2위(2012년 기준 7,563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9.2%, 2011년 8.5%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하였는데, 터키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한 긴축 정책과 더불어, 터키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 지속이 터키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터키 경제는 1980년 이후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GDP 6% 수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수출은 1,525억달러, 수입은 2,365억달러로 8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터키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7월)
수출 (증감률)	107,272 (25.3)	132,025 (23.1)	102,139 (-22.6)	113,930 (11.5)	134,954 (18.5)	152,461 (13.0)	88,293 (1.3)
수입 (증감률)	170,063 (21.8)	201,963 (18.8)	140,869 (-30.3)	185,493 (31.6)	240,833 (29.8)	236,545 (-1.8)	148,756 (7.6)
무역수지 (증감률)	-62,791 (21.1)	-69,938 (11.4)	-38,730 (-44.6)	-71,563 (84.5)	-105,879 (47.7)	-84,083 (-20.6)	-60,462 (18.3)

출처: 터키통계청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 가전제품, 섬유(주로 의류)이며, 특히 터키는 EU 의류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저가 중국제품의 진출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해져 섬유, 의류분야에 대한 보호압력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터키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독일이 최대 교역국이며 전통적으로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교역량의 5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대외무역에 있어서 유럽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로존 지역 경제위기 등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터키의 대 EU 수출 비중은 38.2%로 하락하였으며, 터키의 수출다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45억5,200만달러로서 터키는 우리의 11번째 무역흑자 시장이다.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2010년 41.1%, 2011년 35.4%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터키 현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10.2% 감소하였다. 한국이 터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액정디바이스, 플라스틱 제품 등이고,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이나 그 규모는 수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2010.3월 한-터키 FTA 협상이 개시된 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12.8.1 서명되어 2013.5.1 발효되었으며, 한-터키 FTA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2013년도 1~9월간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對 터키 수출은 40억3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6.6% 증가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5억1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7.9% 감소하여, 교역액은 13.3% 증가하였다. 2013년 1~9월간 한국의 대터키 수출 증가에 기여한 품목은 합성수지, 평판 디스플레이, 철강관,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편직물,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반면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비금속 광물 등이 동기간 터키로부터의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친 품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2013.5.1 한터 FTA 발효 이후 부터 2013.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2013.5~9월간 우리의 대터키 수출은 33% 증가, 수입은 0.7% 감소, 교역액

은 28.7% 증가하였는바, 한-터 FTA를 통해 우리의 對터키 주요수출품목의 특혜관세혜택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對터키 무역흑자 및 한-터 교역량이 더욱 증대되고, 터키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 및 중동,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터키는 1995년부터 EU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으며, 2005.10월 이후 EU가입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바, 관세뿐 아니라 경쟁법,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보조금, 환경법, 기술표준, 정부조달 등 각종 무역정책에 있어 EU와의 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역관련 법령과 제도가 EU나 여타 선진국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6월 말부터 발효된 터키의 새로운 상법은 국제 기준 및 EU 규범에 조화되기 위해 각종 기업 경영원칙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터키 기업인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일부 규정이 삭제 또는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터키의 수입통관절차 및 단계별 유의사항

* 출처: 2013년 한국 관세청이 터키 수입통관제도에 대해 작성·발표한 자료

수입신고전 준비

우선 수입신고 전 준비사항으로서 수입서류간 및 서류와 물품간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통관세 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자동차류, 섬유, 식물제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은 지정된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지정세관 통관제도

※ 아래 특정 4가지 품목은 수입 시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함.

품목	지정 통관세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및 동 부분품과 부속품	예실코이, 게브제, 이즈미트, 메르신 세관
섬유, 식물 제품	할칼르, 아타튀르크공항, 사비아꼭첸, 겐릭, 메르신, 이즈미르, 데니즐리, 앙카라, 카이세리, 가지안텨 세관
비료(fertilizer)	데린제, 메르신, 삼순, 이즈미르, 알리아가 세관
용제(solvent) 및 석유화학제품	게브제 석유화학 세관

섬유류 수입의 경우 주로 대금 지불방식에 따라 다른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주재 터키대사관의 인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식료품·농산품 수입 시 해당 수입허가서, 위생인증서가 요구되며, 의약품의 경우 성분별 승인기관이 상이하므로 해당 담당기관을 파악하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터키는 현재 EU 미가입국으로서 터키에 대한 한-EU FTA 적용은 불가하나, 터키-EU 간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규정 대부분은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CE(EU 기준) 인증 및 TSE 인증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인증 관련 상세 후술).

수입신고

우선, 물품 도착 후에는 수입 신고 전 물품 도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약식 신고서(summary 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하는데, 약식신고란 물품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B/L 등을 운송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약식신고서 제출 후에는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동 수입신고는 물품도착 후 20일(항공), 45일(해상)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추가서류이다. 세관에 따라 전산 또는 서류접수가 가능하고, 전체 세관 중 절반 가량(143개 세관 중 71개)은 자동

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관의 심사 및 검사

터키 세관은 수입신고 접수 후 아래 4가지로 수입물품을 분류하여 심사하며, 특히 물품 검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에서 실시한다.

- 적색선(Red Line): 물품 검사(전수 또는 랜덤 검사)
- 황색선(Yellow Line): 서류 검사
- 청색선(Blue Line): 대형기업에게 적용되는 간단한 서류 심사
- 녹색선(Green Line): 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동 심사시 유럽지역의 물품은 주로 황색선(서류검사)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선(검사)으로 분류해 엄격한 세관 통관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반해야 하므로, 실제가격보다 저가 또는 고가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검사시 서류 내용과 내용물품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관세·제세·창고보관료 납부 및 물품 반출

관세는 CIF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SCT)는 'CIF가격+관세액'을 기초로 산정되고, 부가가치세(VAT, 주로 18%)는 'CIF 가격+관세액+SCT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011.10월 특소세 인상 등에 따라 자동차, 담배, 사치품, 주류, 석유제품 등에 대해 고율의 특별소비세(SCT)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 및 제세금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세금 납부 후 신고가 수리되면 창고보관료를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터키는 1) EU를 비롯 터키와 양자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2) EU 및 WTO 규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 개발도상국, 3) 기타 제3국으로 구분하여 차등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터 FTA 발효 전에는 기타 제3국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과를 적용받아왔으나, 2013.5.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후부터는 한-터 FTA 상 양허된 관세 스케줄에 따라 관세 부과를 적용받고 있다.

터키는 2005년 이래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어 4.2%로 유지해 왔으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그리고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관세율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터키·EU 간 관세동맹은 1996년 발효되었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동맹의 규정에 따라 EU가 체결하고 있는 호혜관세제도에 맞추고 있으며, 2013.9월 현재 EFTA, EU 및 17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에 있다.

※ 터키와 FTA 발효한 국가 현황(2013.9월 현재)

- EFTA(1992), EU(1996),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튀니지(2005), 팔레스타인(2005), 모로코(2006), 시리아(2007), 이집트(2007), 알바니아(2008), 조지아(2008), 세르비아(2010), 몬테니그로(2010), 칠레(2011), 요르단(2011), 한국(2013), 모리셔스(2013)

따라서 터키시장에서 유럽국가 및 개발도상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왔으나, 한-터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발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터키는 모든 규범을 EU 기준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도 제도적으로는 EU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Red Line이라는 이중통관심사대를 거치게 함으로써 까다로운 세관 통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목재포장에 붙어 국내로 반입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열처리 또는 메틸 브롬화 방식의 소독처리와 그 표시는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상품의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터키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입허가제등 여타 규제

터키는 마약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품목과 총기류, 폭발물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상의 이유로 농업부의 사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며 AS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정보통신부등 해당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품 종류에 따라 관련 터키 정부기관의 관리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환경청: 자연환경보호 관련 제품
- 원자력부: 방사능 관련 제품
- 교통부: 경비행기 관련 제품
- 내무부: 폭발물 관련 제품
- 에너지부: 석유 및 원유 관련 제품
- 노동사회보장부: 건강 및 안전 관련 제품
- 농림부: 비료 관련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터키의 반덤핑 관세조치는 2013.10월 기준으로 22개 국가 120개 품목에 이르며, 세이프가드 발동은 전 세계 국가들 및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13건(HS 코드별 품목 수 아님) 발동하는 등 수입규제가 심한 편이다.

터키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보면, 우선 반덤핑의 경우 2013.10월 현재 3개 품목에 대하여(HS 코드 기준) 부과되고 있으며 섬유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 발동은 2013.10월 현재 13건(안경테, 가방, 유리제품, 전자제품 일부, 나일론사, 상냥, 거울, 신발, 오토바이, PET, 섬유/의류 등)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이며(단, 섬유/의류는 EU 및 터키와의 FTA 체결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현재 한국만을 특정하여 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터키 정부는 이를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3.5.1 발효된 한-터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에 따르면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발동 관련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여 향후 터키의 수입규제 조치들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터키의 반덤핑조사와 관련, 대사관에서는 피제조 업체들과의 협의 및 경제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 기회를 통하여 조사협력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철폐되거나 저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다만,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예비조사 전 혹은 예비조사 중이라도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담당기관과의 양자협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반덤핑 예비조사 공개단계에서부터 해당기업들과 긴밀히 협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은 터키 업체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수입규제 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체와 터키 관련 업체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편 터키의 반덤핑 관행이 WTO협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집행과정에서 주요 결정문에 대한 공고를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알려주거나, 공청회 개최, 해당기업의 반박서 제출시한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대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는 ‘외국무역을 위한 기술규율과 표준화 체제에 대한 공표와 그 부속 법령에 따르는데,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 마크)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 TSE 인증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KS 마크와 같은 성격의 인증으로 터키 표준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며, EU 회원국에서 터키로 수입되는 물품은 CE 인증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나, 非EU 국가로부터의 수입 물품은 터키 고유 인증인 TSE를 취득해야 하는데, CE 인증 취득제품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TSE 인증을 받을수 있다(터키 표준연구원 홈페이지: <http://global.tse.org.tr>)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한다.

환경관련 규제

고체연료, 폐연료, 폐고무제품, 재활용 금속조각 등 산업폐기물은 환경산림 부로부터 ‘통제증명서(Control Certification)’를 사전에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일부 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환경산림부의 통제증명서 또는 화학물질 수입증명서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터키 정부는 2002.1월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법률(제 4734호)을 제정하고 보완,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다. 그러나 입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기업들에게 우대금융인 soft loan으로 사업재원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터키는 1951년 사상예술작품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04년 동법의 개정으로 해적판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래시장에서는 복사판 소프트웨어가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장벽(건설 분야)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고, 정유공장, 공항, 항만 등과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외국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이 하청으로 참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터키에 진출한 모 건설업체는 협력업체에 대한 충분한 신용도 조사와 재정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종결하지도 못한 채 계약 이행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바 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터키 업체가 컨소시엄 협정상의 국제중재조항을 무시하고, 터키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터키 법원이 터키 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터키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외국 업체가 불리할 경우가 많으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 진출업체에게는 이중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높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청과 산업부로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s) 및 5만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는데, 다만, 금융, 석유, 에너지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터키 전국 21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자유지역(Free Zone)에 입주하

기 위해서도 터키 정부의 특별허가가 요구되는데, 동 자유지대는 EU, 중동 및 각 해안에 인접하여 주변국 접근이 용이하며, 제3국 물품을 자유지대로 반입·반출시 관세가 면제되고, 터키 일반지역에서 자유지대로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는 일반 수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업무는 재무청 외국인 투자국이 관장하고 있는데 동 국에 따르면, 터키에서 회사를 설립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와 세무당국에 등록함으로써 하루 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2006.6월 총리실 직속으로 투자진흥청(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이 설립되어 외국기업들의 터키 투자 유치 및 현지 정착(one stop service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법령과 제도가 거의 선진국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터키는 EU의 무역정책과의 조화원칙에 따라 합성섬유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폐지하고 있는 바,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시 관세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터키어와 상거래 관행에 익숙지 않아서 현지인과의 합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터키 관련 법률은 물론 합작 파트너의 신뢰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작 파트너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다.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 가장 큰 걸림돌은 터키의 노동허가 문제인데, 2003. 2.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청과 문화

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9월 노동부로 일원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비교적 수월하게 노동허가를 부여하였으나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 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예컨대, 터키 관련 법령은 공학과·건축과·도시계획과 등을 졸업한 외국인 전문가가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노동허가 조건으로 터키 공학자협회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터키 공학자협회가 공학박사학위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터키 대사관을 통하여 국적국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공관에서는 터키 정부측이 노동허가 문제를 단순한 허가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는 터키에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기술이전을 가져다준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노동허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른 일례로 상기 외국인 노동 허가법상에는 노동허가는 최초 1년, 이후에는 3년,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8년 이상 상주하면서 6년 이상 일한 사람은 영구 노동허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터키에서 10년 이상 일한 우리 기업인에 대해 체류허가 종료를 이유로 6개월 한시 노동허가를 발급해 준 경우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서류접수 후 법정 답변기간인 3개월 이후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이 일선에서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관에서는 노동부, 외교부를 상대로 노동 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투명성, 지청과 본청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 운용,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터키 정부는 2010.8.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각계에서 ‘터키인 5명 고용원칙’에 따른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4.20일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①터키와 체결한 양자·다자 협정에 의거하여 터키 공공기관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②첨단 분야에 종사하거나 터키인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전문가 인력인 경우, ③예외적인 상황의 외국인 직접투자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청시 동 원칙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첨부토록 하여 개별 심사 및 특별 승인을 거쳐 동 원칙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금융시장 현황

터키 금융시장

터키 금융시장은 2001년 총 은행 중 반수 이상이 폐쇄된 은행위기를 겪은 후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규제환경이 조성되어 왔으나, 은행 자금원 중 단기(초단기)자금의 비중이 커서 변동성(volatility)이 큰 편이다. 터키의 은행 관리·규제 업무는 은행감독청(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BRSA/터키어 약자 BDDK)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 이래 통화당국인 터키 중앙은행은 금융 공급 연 15% 성장을 목표로 완만한 금융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 금융산업은 소매금융보다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차입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외국자본 유입을 피하기 위해 그간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민간 금보유의 은행체제내 흡수 등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정책(금표시 계좌 신설 등)이 취해진바 있다.

은행 현황

터키의 경우 2012년 말 은행의 자산규모(asset size of banking sector)는 1.37조 터키리라(약 5,915억유로)로서 GDP의 약 95% 규모이며, 은행시장

이 금융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2013.9월 기준, 터키에는 12개 민간은행, 3개 국영은행, 1개 저축성예금기관관리은행, 16개 외국계은행, 13개 개발·투자은행 등 총 45개 은행, 10,381개 지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총 종업원 수는 188,748명이다. 보유자산 면에서는 2013.9월 현재 Is Bankasi가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14.0%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Ziraat Bankasi (13.0%, 국영), Garanti Bankasi(12.9%) 순으로 규모가 크다.

터키 은행들은 과거 터키경제의 높은 변동성과 장기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대출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며, 수신 및 여신 중 외환규모가 큼에 따라 외환리스크가 높은 편이라서 외화표시 또는 금 표시 구좌가 많다. 과거 대기업 중심 대출을 해온 은행들은 가계대출(크레딧카드 및 소규모 대출)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banking도 급증 추세이다. 특히 신규 장기 대출상품 및 저개발된 지방의 기업 및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향후 팽창 잠재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